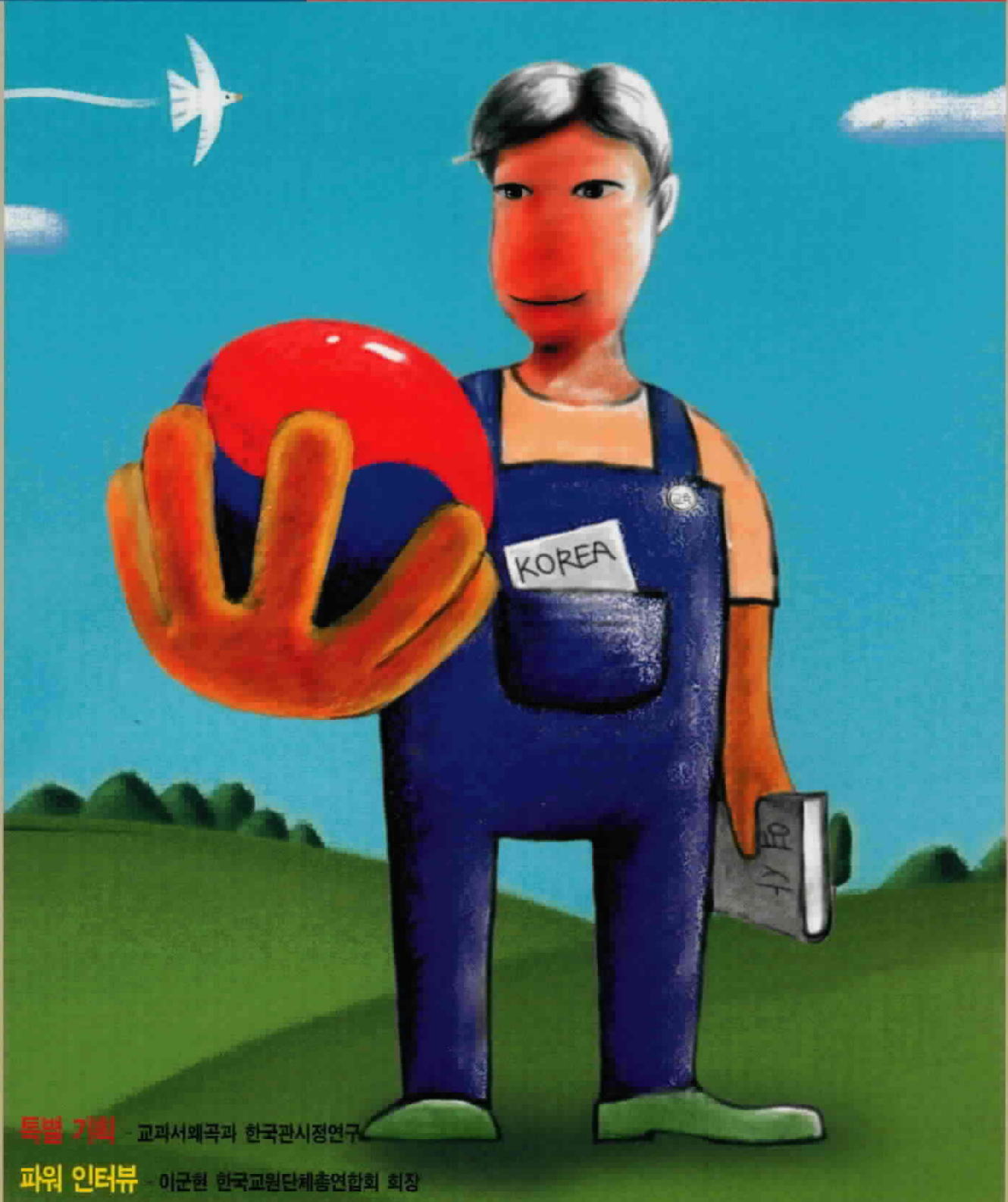


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2001 11·12 월호

www.kedi.re.kr



특별 기획 교과서왜곡과 한국관시정연구

파워 인터뷰 이군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교육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슬기로운 지혜와 실천하는 용기로 百年大計를 지켜가겠습니다



1972년 8월에 설립되어 29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KED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02 • 3460 • 0114 www.kedi.re.kr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국익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곽병선 본지 발행인,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kwak@ns.kedi.re.kr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외국 교과서에 한국이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 '신흥공업국으로 성공한 나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신생 독립국', '임금이 낮은 나라', '정치적 소요가 많은 나라' 등 부정적으로 기술된 교과서도 없지 않다. 구미 유럽 교과서들은 한국을 소개하는 양이 매우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한국을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적 공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제품의 경쟁력은 한국 문화 이미지와 직결된다. 외국 교과서에 한국을 잘못 소개하고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바로 잡도록 하고 한국에 대한 내용이 소홀한 경우에는 보다 많은 내용을 다루도록 상대국에 협력을 구하는 일을 벌이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당시 문교부의 위탁으로 1982년부터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외국 교과서, 사전 등 각종 매체에 소개된 한국 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오류나 왜곡이 있을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대외협력과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통상외교부, 국정홍보처 등 정부부처와 민간 재단 등 비정부 조직들의 공동노력이 있어왔다. 재정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였다. 각국주재 해외 공관은 교과서 수집에 협력하여 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외국 교과서에 한국 내용의 오류 여부

를 검토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현지어판 시정자료로 발간하여 해당국가를 상대로 시정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 사업은 교과서 내용 수정을 직접 요구하는 활동 이외에, 관련 당사국의 관련 학자나 당국자들과의 학술교류나 공동연구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1982년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을 계기로 촉진되었다. 고대사에서 최근세사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역사교과서에 한국을 어떻게 기술하는가는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으로 이 사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특별히 이번 일본교과서 파동에서 국회,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은 그 동안 충분하지 못한 지원으로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재발한 일본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대폭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여년간의 사업추진으로 쌓아올린 업적과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정부의 관계부처, 연구기관,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의 협력을 받아가며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다. 이 사업은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같은 특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치열한 국가 경쟁시대에 국가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중요한 국익 사업이다. 이번 「교육개발」 제130호의 특집이 갖는 의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찾아진다. **교육**

목·차

교육개발 2001 NOVEMBER · DECEMBER | 통권 제130호

06 POWER interview

이군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두보



14 한안칼럼

교원의 位相 확립을 위한 과제
서정화 홍익대학교 교수

18 특별기획 - 교과서왜곡과 한국관시정연구

20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역사
손용택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47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방향
이원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7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 실태와 그 배경
정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53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상설기구 설립과 새로운 구상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관시정연구실장

33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
강영철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59 역사교과서 왜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난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42 동남아시아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 왜곡사례와 역사교육의 과제
정영순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표지이야기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은 치열한 국가경쟁 시대에 국가 이미지관리를 위해 정부는 물론 전국민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익사업이다. 표지는 이러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65 세계의 교육

- 66 미국 : 저소득층을 위한 조기 교육 프로그램-헤드 스타트(Head Start)
김영주 시카고 통신원
- 70 독일 : 전쟁을 두려워하는 어린이들
장은희 베를린 통신원
- 74 영국 : 교원부족 현상
하태욱 런던 통신원
- 78 프랑스 : 프랑스 교육 소식 1·2·3
이부련 한국교육개발원 해외지문위원
- 86 러시아 : 러시아와 러시아 교육 : 개황
김형욱 모스크바 통신원
- 90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대학운영제도 : 국립싱가포르대학교의 대학평가 사례
박보배 국제교육진흥원 유학연수지원과 교육행정사무관
- 94 중국 : 21세기를 지향한 교육과정시행안
강영민 북경사범대학 국제비교교육연구소

98 발언대 역사교과서 왜곡과 한일민간교류
강원석 한일문화교류센터 경남지부장

102 학교의 성교육 효율적인 성교육 지도방법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08 Research Findings '교육관련 세계의 연구'
김정자 한국교육개발원 전산정보팀장

110 신간소개

114 독자의 소리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곽병선

홍보출판심의위원회

현주(위원장) 공은배 구자역 김정래 김홍주
이종태 정택희 최돈민 최상근 한만길 한유경

홍보출판팀장

김정래

홍보출판팀

채경은 정재기 이경희 이순희

디자인

경희정보인쇄(주) 디자인팀

아트디렉터

이제표

편집디자인

서경미 김지혜

일러스트

김부영

사진

채경은

교정 윤문

김영탁

인쇄

경희정보인쇄(주)

home page : www.kedi.re.kr

교육개발 웹진 : www.kedizine.kedi.re.kr

e-mail : keditor@ns.kedi.re.kr

ISSN 1228-291X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집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01년 10월 25일 발행/격월간

등록번호 문화바02718

등록번호/2001년 4월 11일

값 4,500원

교총은 우리나라 최대의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초·중·고·대학의 교원 및 장학관, 연구관 등 광범한 모든 교육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원이 자생적으로 만든 각종 직능·연구단체까지도 산하단체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육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교육발전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두보

이 군 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대담 / 김정래 한국교육개발원 홍보출판팀장 jnkim77@ns.vedi.re.kr

Q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우리나라 교원단체 중 가장 역사깊은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교련' 시절 이래 교총의 발자취와 교총이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갖는 위상과 역할을 정리해 주십시오.

해방 이후 교육계는 교육발전의 주도세력으로 교원단체의 설립을 소망하게 됨에 따라 1947년 11월 23일, 교육자들이 모여 '조선교육연합회'를 발족하고, 이듬해 '대한교육연합회'로 개칭하였습니다. 6·25 전쟁 중에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를 창시하고, 교육의 해외교류를 위해 'E'의 전신인 '세계교직단체총연합회'의 발기 단체로 참여하였으며, 교총이 제15차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피폐된 교육의 재건을 위해 '교육주간' 행사와 '교육공로자 표창제도'를 도입하여 교원의 사기를 북돋았으며, 교원윤리강령과 교련강령을 채택해 전문직 단체로서의 윤리와 조직활동의 목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올바른 교육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현 한국교육신문의 전신인 '새한신문'을 창간하였으며, '600만 어린이를 입시지옥에서 구출하자'는 슬로건으로 캠페인과 정책건의 활동을 벌여 '중학교 무시험제'를 실현시켰습니다. 또 '교육세법' 제정으로 교육재정의 확충에 기여하고,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직수당 및 담임수당' 신설,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를 실현한 바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89년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재탄생하였으며, 91년 5월에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육부와의 독자적인 교섭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교총은 우리나라 최대의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초·중·고·대학의 교원 및 장학관, 연구관 등 관련한 모든 교육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원이 자생적으로 만든 각종 직능·연구단체까지도 산하단체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육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교육발전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회장님께서서는 금년에 교총 30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교총 회장으로서 향후 교총에서 펼치시게 될 시책과 포부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땅에 떨어진 교원들의 자존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총이 강력한 정책단체, 압력단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행 전 단계부터 바로잡고, 정책협상 파트너로서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총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통합 교원조직이지요. 교총의 조직개선과 역량강화를 통해 전 교원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교총으로 거듭나 전문직 단체로서 교육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아울러 학



생·학부모 등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이와 아울러 교총의 역할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른 교원단체와 견주어 설명해 주십시오.

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이므로 타 교원단체와는 이념적 모태부터 서로 다르며, 역할과 과제 또한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원 3단체 모두 '교육발전'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보

니다. 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전교조, 한교조와도 같은 교원단체로서 사안별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Q 회장님께서서는 교원정년 환원 문제를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회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문제를 위하여 교총은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의 정년환원 법안과 자민련의 63세 조정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이 기존의 정년 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민련의 63세 연장안을 탄력적으로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교총은 정년단축이 교원사기 및 교육력의 급격한 저하를 불러와 급기야 교육붕괴를 초래한 만큼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년환원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도 교원정년을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국민 여러분들도 교원정년 단축으로 빚어진 교육적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년환원이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Q 회장님께서서는 취임과 동시에 교원의 정치참여를 전격 선언하셨는데, 교원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교총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교육발전 지원·저해 후보자 명단을 인터넷과 교육신문 지상 공개 등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정책도 하나의 상품이기에 때문에 교원이 정치활동으로 훌륭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

면 정당간의 경쟁을 유발해 고품질의 정책을 양산할 수 있게 됩니다. 교총이 전국 초·중등교원 2,66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도 절대다수인 87.3%가 정치활동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정(教育失政)에 대해 정치권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교육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총은 지난 9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해 관련법 개정 운동과 국민여론을 환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각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40만 교원들의 공감을 토대로 지지 정당과 후보를 결정할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 것인가는 좀 더 면밀한 법적 검토와 내부 의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만, 학교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내 정치활동은 결코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원들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시 수준을 넘어 상당한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원단체들은 교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며,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운동도 펼칩니다. 영국은 우호적인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 지지 활동을 벌이며, 프랑스 역시 교원들의 정치활동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활동이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총선 때마다 특정 정당 혹은 후보를 지지하거나 직접 후보를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는 국민의 기본권 차원뿐만 아니라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우리 교육계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해결책이나 복안이 있다면, 들려주시지요.

우리교육의 당면 과제로는 ▲지나친 시장 경쟁 원리의 도입 및 서구이론의 무비판적 수용, 무리한 정년단축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교육 지배, ▲장관의 잦은 교체 및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한 교육정책의 일관성·안정성 결여, ▲일반직 중심의 교육행정, ▲세세한 부분까지 간여하는 정부, 단위학교 및 교육자치의 자율성 위축 등을 가져온 중앙집권적, 관료적 교육행정, ▲대학입시제도의 획일화, 시험 위주의 교육, 과정 중심의 교육 소홀 등으로 나타나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GDP 대비 교육재정이 98년 4.36%, 99년 4.20%, 2000년 4.35%, 2001년 4.52%로 감소하여 외국보다 훨씬 적은 교육투자(미국 5.4%, 영국 5.3%, 캐나다 7%, 프랑스 6.0%, 96년 기준), ▲교직 유인가 부족으로 인한 우수 인재의 교직유인체제 미흡, ▲교육제도의 획일화 및 잘못된 평등주의 개념의 팽배로 인





한 교육 및 국가경쟁력 저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장관이 바뀌거나 정권의 향배에 따라 굴절되지 않고 안정성 있게 추진되도록 정권을 넘어서는 국가적 교육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고,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으로 올바른 교육계의 목소리가 정부 및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인재양성이라는 숭고한 일을 하시는 데 비하여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교원의 지위와 처우를 세계 주요국들의 교원이 누리는 지위와 처우에 견주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난 6월 발표한 OECD의 자료에서 나타나 있듯이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최저 수준이며, 반면에 수업의 업무까지 포함할 경우 교원의 전체 업무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노르웨이와 함께 가장 많았고, 교사 대 학생의 비율도 OECD 전체 평균을 넘어 멕시코와 함께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교원의 권위실추로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112에 신고하는 등 교원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교원들의 역할에 비해 교육자에 대한 처우나 예우 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총의 조사에 의하면,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지난 97년의 44.6%에서 올해 30.7%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97년의 조사에서는 60%의 교원이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했으며, 경제적 처우 또한 과반수 이상이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원의 지위와 처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일본은 지난 73년 인재확보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보수를 30%이상 인상시켰으며, 싱가포르도 교원의 보수를 획기적으로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한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성사시켜 교육의 발전을 기하였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Q 우리 나라에는 40만명의 교원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교육당국과 교총에 바라는 바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숙원하는 과제는 무엇이며, 또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교총이 파악한 관점에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교원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방 이후 오늘까지 후진양성을 위한 공로에 대한 정당한 평가없이 개혁의 걸림돌로 폄하됨으로써 교육자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당연히 교육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도 번번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교원정년 단축입니다. 교원의 80%이상이 정년단축을 반대하고, 예상되는 교육적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정치·경제논리로 밀어 부쳤습니다. 결국 정년단축은 교원의 사기저하, 집단대량 퇴직사태, 교원수 부족, 교실붕괴의 단초가 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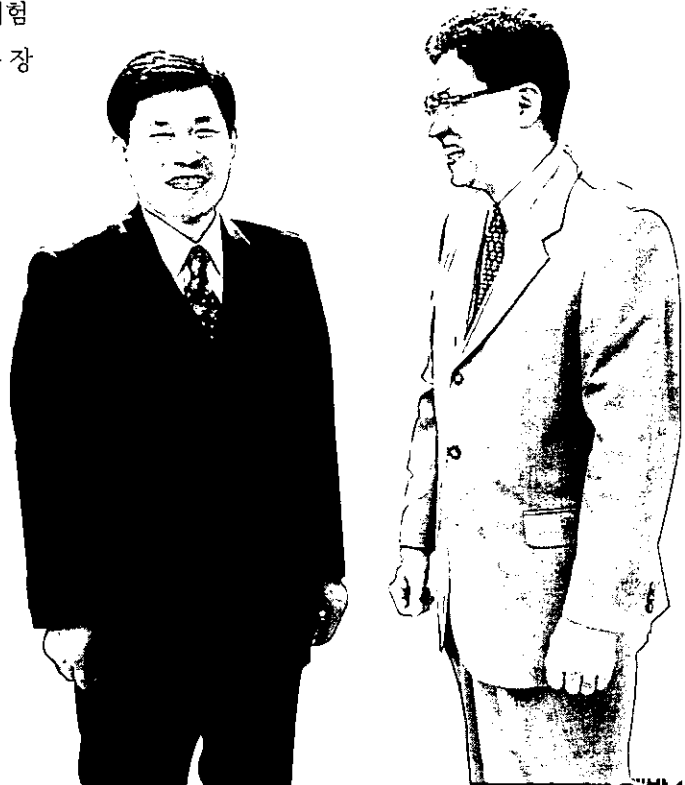
또 시급한 것은 교원에 대한 사회적 권위와 신뢰의 회복입니다. 일부 교원의 촛지수수를 마치 전체 교원의 문제로 확대해서 교원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기득권에 안주하는 집단으로 인식시켜, 교원의 권위와 사회적 신뢰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교원은 매일 학생들 앞에서야 합니다. 교원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육 그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교원의 설 자리를 이제 정부가 나서서 지켜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Q 현재 초·중등교원의 임용과정에 매우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만큼 교직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현행 교원 양성, 임용, 승진, 재교육 등 교원정책 전반에 관한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IMF로 인한 경제위기 등 사회적 현상이 일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타 직종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을 유지·보완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교직에 유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원양성은 교대와 사대를 중심으로 한 '목적형 양성'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양성기관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통해 특성있는 전문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지필고사 중심의 임용시험은 교직의 전문성과 교직원, 교사의 자질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로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평가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출제내용의 수준을 조정하고 보완하며, 면접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실기 및 수업능력 등 교직적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개선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진적체는 우리 교직사회의 커다란 구조적 문제입니다. 관리직 위주의 일원적 자격체제로 인해 승진뿐만 아니라 전문성 신장에도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잘 가르치는 교단교사가 우대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전문직으로서 각종 연수 등 자기연찬을 위한 노력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Q 21세기 정보화 혁명(IT)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산업시대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교육 받은 분들입니다. 정보화 사회 패러다임 속에서 성장하는 세대인 학생들과 생기는 격차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무한경쟁체제에서 보수적인 교직사회도 급변하는 환경과 교육여건에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디지털시대에는 생각의 속도와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대응능력이 중요합니다. 지식·정보의 폭증과 정보혁명이 모든 교육을 평생학습체제로 전환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뼈를 깎는 자기연찬을 해야 하고, 한편 교육당국은 새로운 지식을 연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학교와 교사는 시대환경에 발빠르게 적응,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욕구만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식혁명 사회라 하더라도 교육의 본질적 가치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Q 회장님께서서는 최근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장님과 거의 동시에 초당적이고 거국적인 교육심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창설을 제안하셨습니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 그리고 교육이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영향 배제 등의 필요성에 비추어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제안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회장님께서 갖고 계신 구체적인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역할, 지위 등에 관하여 회장님의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 교육정책은 국민 모두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장기적인 안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교육목표와 정책기조를 초당적, 초정권적 차원에서 설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구로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를 설치하고,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를 달리하여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연속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신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정책남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당국의 공교육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남발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육계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당국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Q 교총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회장님께서 교육행정당국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 기회에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교육당국의 공교육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남발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육계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당국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교육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정을 신중히 하며, 한번 결정된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Q 끝으로,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은 금년으로 창립29주년을 맞는 국내 최고의 정부출연 교육전문연구기관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주요 교육연구기관과 교육방송(EBS)을 탄생시킨 모체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교총과 회장님께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교육의 당면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비전과 대안 제시로 국가교육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수인재가 모인 명실상부한 국책교육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원단체 다원화 시대를 맞아 교원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고,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또 정부와 교원, 교원단체간의 입장대립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정부, 교원, 교원단체간의 다양한 입장과 요구를 조화롭게 소화해 나가면서 학교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는 현장적용성이 높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원의 位相 확립을 위한 과제

글 / 서정화 (홍익대학교 교수, suhchungwha@hanmail.net)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절박한 시대적·국가적 과업이 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 향상에 기댈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람한 건물을 세우고 첨단 멀티 미디어를 확충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원들이 높은 전문적 권위와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하는 일이 관건이 아닐 수 없다. 교육활동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교원들의 자질과 태도, 의욕 여하에 따라 교육활동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우리의 교육현실은 교실붕괴, 교원의 권위 및 사기 저하, 공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소위 '총체적 교육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교직발전종합방안이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대통령보고서에서도 교원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근저에는 교원의 성과급을 비롯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실 증축, 교원수급 문제와 관련된 '중초교사' 임용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물나게 되풀이되는 소리 같지만, 그래도 교육개혁 추진은 국가적 과업임에 틀림없고, 교육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원의 역할이나 자질과 태도가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때, 교원의 位相을 확립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과업이 아닐 수 없다.

1. 교원의 位相

교원의 위상 확립을 위해서는 교원의 권위가 회복되고 전문성이 신장되어야 하며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원의 권위는 전문적 자질이 신장될 때 더욱 확대될 수 있고 교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때 권위는 더욱 인정받을 수 있다.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때 교원의 책무성 또한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원권위 실추와 전문성 미흡, 그리고 책무성 취약 등으로 교원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교원의 권위는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교원이 영향

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먼저, 교원의 권위는 교원 자신의 內在의 요인을 필수적 조건으로 한다. 이것은 교원 자신에게 내재하고 있는 자질로서 지적·기술적 측면에서의 수월성이다. 내재적 자질과 능력 가운데는 도덕적·사회적 성숙성은 물론이고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러한 태도 및 의욕을 갖게 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外在의 요건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교육의 제도, 정책이라든지 사회·문화적인 관습이나 분위기 같은 것이 그것이다. 교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 경제적 처우와 우대의 정도, 신분보장이나 자율성 부여 등도 여기에 관련된다.

이러한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 이외에도 권위를 받아들이는 社會·心理의 측면의 요인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학생들이 교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권위로서 받아들이려 하는 태도와 심리적 경향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교원의 권위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 예컨대, 교원 자신의 능력과 자질의 부족은 권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가 사회적 기풍이 권위를 경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원의 권위는 제대로 서기 어렵다.

교원의 권위와 함께 전문적 자질이 교원의 위상을 크게 좌우한다. 교육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교육내용이 전문화, 다양화되고 공공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원의 자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고, 더욱이 지식 정보사회에서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은 절실하다.

교원이 몸담고 있는 교직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장기간의 준비교육이 요구되며 봉사 지향적이고 사회적 책임감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행동을 규율하는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고, 또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다는 점 등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직이 얼마나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는 그다지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 같다. 어쩌면, 교직의 전문직화에 대한 심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여겨진다. 교직은 '개발된'(developed) 전문직이라고 하기보다 '개발되어 가는'(developing)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다. 교직이 전문직으로 확립되려면 양성·채용·연수·자격·승진·처우 등 교원정책의 전 영역에 걸쳐서 전문성 신장의 노력이 일관성 있게 추구되어야 할 과업이다.

그리고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원은 교육의 성과에 대한 설명 책임이 따른다. 교사의 전문적 역할 수행에는 전문성 강화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흔히 교원의 책무성을 도덕적, 법적, 전문적 책무성의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여기서 도덕적 책무성은 교육활동에 대한 것으로서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교원의 책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법적 책무성은 행정적 규정 및 법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교원의 책무사항으로서 소속한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직무의 수행과 관련된다. 그리고 전문적 책무성은 교원의 교육활동 및 이에 대한 지식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로서 교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여타 직업과는 다른 독특한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교원 位相의 현주소

교원의 위상이 많이 낮아진 것 같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서울 시내 모 고등학교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는 중에 계속 소란을 피우던 학생을 보다 못한 한 선생님이 때리자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112로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학생을 쥐어박은 교사의 행위도 답답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경찰서로 신고한 학생의 행동에서 교원의 위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실감케 해준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학실련)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원과 학생 상호간에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일 뿐 '신뢰 관계도 없고 오히려 불신과 대립이 지속된다'고 답한 교원

이 62%, 학부모 42%, 학생 39%로 나타났다. 또한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나 존경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교원의 경우 84%, 학부모가 46%가 각각 낮아진 것으로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로서는 ① 정부의 교원 경시 및 사기 저하 정책, ② 체벌금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제도화 등 일방적인 수요자 중심 정책의 추진, ③ 일부 교원의 촌지 등 교육 부조리 및 비리, ④ 교원의 전문성 부족 및 학생지도 방법상의 문제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교원들의 교원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원정책에 대해 68%가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교직에 불만족하는 주요 이유로서는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실추 및 교직경시 풍토 만연(49.1%), 각종 잡무 등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근무조건(24.2%)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교직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반응이 76.6%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교직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서는 교직에 대한 존경도·신뢰도 실추(26.7%), 승진 과열 등 경쟁적 교직구조(17.1%), 교직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시책 불만(13.4%) 등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부 정책실패와 언론에서의 편파 보도로 교원명에 및 권위실추 정도는 83.5%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만과 교사들의 심리적 離反현상(psychological alienation)과 냉소적 분위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열성을 다해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려는 의욕이나 열기가 약화되고 식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원들은 교원에 대한 학부모와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51.2%). 최근에 UNICE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청소년들의 어른에 대한 존경도가 17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교원의 위상이 낮아지고 심각한 위기적 실상을 맞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복합적인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겠다.

먼저,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 노력이 취약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교직이 전문적이라고 하면서도 학력 수준이 타전문직이나 일반직종, 학부모의 학력 수준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연수나 연

구활동이 취약하다거나 一身專屬的인 평생 교원자격체계 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유도·촉진하지 못하는 승진기준이나 보수체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학교경영자들의 전문적 행정능력과 지도성 취약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지위 하락에 대한 인식이다. 교직이 그렇게 매력적인 직종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적 존경풍토도 종래와 같지 못하다. 게다가 교원들의 보수 수준은 교직에 오래 머물수록 타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교직이 매력 있는 직종이 아닌 것으로 인식될 때 우수인력이 교직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IMF한파가 시작되면서 추진된 교원 정년 단축과정에서 투박하고도 거친 방식으로 인해 교원들의 자존심을 자극하였을 뿐 아니라 褻瀆的이고 편향적인 일부 언론의 자세도 지적될 수 있다. 일부 교원들의 체벌 문제라든지 촌지 수수 사례를 확대하여 마치 전체 교직사회의 관행처럼 보도한 것들이 그 예다.

그리고 일부 교원들의 의식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교원들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촌지 수수 사례 및 제지에 대한 폭행, 체벌, 부교재·교복 채택 관련 부조리, 내신 조작 등으로 얼룩져 있는 일련의 사례는 교원의 도덕적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시대 변화의 흐름이나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적절한 대안 제사를 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집단 의사나 행동을 표출함으로써 국민들의 눈총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교원 위상의 위기는 학교의 위기이자 전체 교육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危機는 危險과 機會를 동시에 뜻한다고 하거니와 이러한 교직의 위기적 상황을 새로운 교육발전의 계기로 삼고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문제해결의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원의 位相 提高를 위한 과제

앞으로 교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 교직풍토를 확립하는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

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인적 자원을 교직에 유치·개발·유지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관리 체제 확립 및 교원 양성의 기간을 연장한다. 앞으로 학교의 소규모화 등에 대비하여 양성기관에서의 복수 자격증 취득을 적극 유도하고, 교원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기준 설정 및 개편, 교과교육 담당교수 확충, 교수 신규 채용에 초·중등학교 교육 경력자 우대, 내실 있는 실습 지도, 교직원 및 교육과 정보화 관련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교원 양성 과정의 수월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자율적인 질 관리의 체제 구축을 위해 주기적인 교원교육 평가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법관이나 의사, 성직자 양성과정처럼 교원양성 기간을 대학원 수준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교수활동 위주의 자격체계의 개편 및 연수를 강화한다. 현행 교원자격제도는 교수·학습활동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져 있는 관료지향적이고, 행정·관리 위주의 현행 교원 자격으로부터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선임교사, 수석교사 등으로 개편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이 교직 일생 동안 5~6년을 주기로 집중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격별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연수프로그램 이수율 통해 자격증을 갱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별 연수 결과를 반드시 보수체계 운영과 연계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육전문직 임용 전·후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를 강화하고 지역단위로 신임교사를 위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안내 프로그램(induction program)을 개발, 운영하여 교직에의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셋째, 교수활동 중심의 교원평가 기준 개발 및 학교 경영자 훈련을 강화한다. 현행 승진기준을 전면 개편하되 연수성적 점수 배점과 석·박사 학위 취득배점을 포함하는 연구 성적 점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활동 중시의 교원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유능한 학교경영자나 교육전문직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평가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승진 기준과 轉職 기준을 마련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장의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해 리더십, 협상 능력, 조정 능력 등을 비롯해서 재무, 회계, 교육 관련법 등에 관한 실무적 현직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장 임기제를 연임제로 바꾸고 초빙 교장제를 활성화하며 교감자격 연수선발 대상자 선정 방식도 현행 면접방식으로부터 종합적인 평가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넷째, 신규채용 인력 대폭 확대 및 근무조건을 개선한다. 앞으로 OECD 국가 수준의 학급당·교원당 학생 수를 유지하려면 10여만 명의 교원이 증원되어야 하며, 질 높은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초·중등 교원의 주당 책임(기준) 수업 시수를 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는 교원보수체계 구축 및 특별법을 제정한다. 교원의 보수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교육 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자격 및 근무연한 등을 반영한 단순한 단일호봉제로부터 연수 이수 결과와 학위취득(학사·석사·박사) 결과, 복수자격증 취득 등을 보수체계에 반영하는 복선형(matrix shape) 호봉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수체계 운영에 있어서 초과수업 수당을 지급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모범적이거나 학교·교육발전에 공헌한 이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직의 매력을 높여 우수 인재를 교직에 유치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운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앙집권적 획일주의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자율적인 학교경영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학교 중심경영은 교육운영의 흐름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원과 학부모간의 의사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학교수업을 더욱 개방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 참여도 어떤 형태로든 확대 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원단체활동을 지원·육성한다. 교원단체활동은 교권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뿐 아니라 교육의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직원단체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복수교직원단체 체제 아래 각 교원단체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직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갈등과 대립 관계가 아니라 협조적이고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체교섭의 창구도 단일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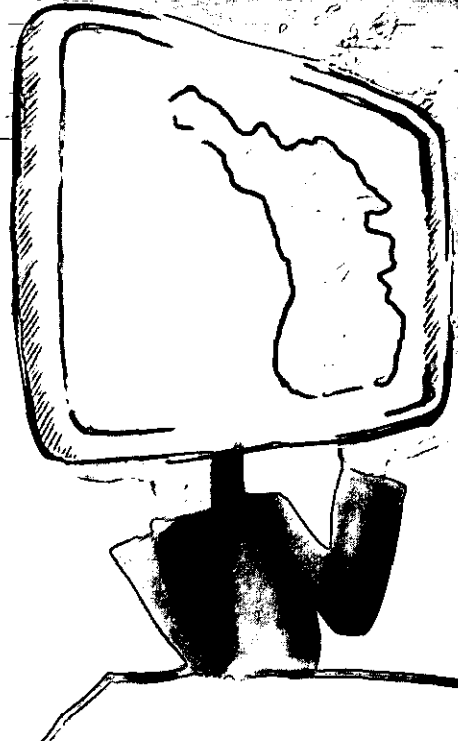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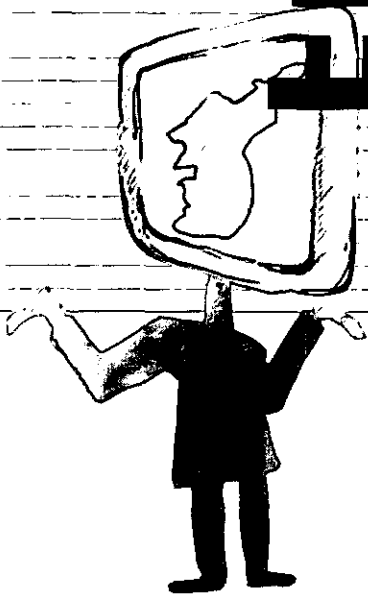
여덟째, 교원의 교육권 및 신분보장을 강화한다. 교육활동의 주체는 교원이다. 따라서 교수·학습 활동이나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원들의 재량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체벌도 교사의 재량에 맡기고 학부모의 비교육적·비전문적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로 인해 교원을 연행한다거나 교원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홉째, 교원에 대한 범국가적 존경 풍토를 조성한다. 교원에 대한 사회적 禮遇의 일환으로 대만의 예(『教育愛』)와 같이 교육부, 각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교원의 우수 교육활동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또 언론의 교원 관련 기사를 긍정적 차원에서 정화하도록 범사회적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승의 날' 행사 방식을 실질화 하여 범국민적인 교원존중 풍토 조성 기회로 삼아 '어린이 날'이나 '아버지 날'처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요컨대, 교원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려면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높임으로써 교원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헌신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적 존경 풍토 조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정책적 지원과 언론의 협조, 그리고 범국가적 교원 존중 풍토 조성 필요하다. 그리하여 교원들이 사랑의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사표로서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

특·별·기·획

교과서 왜곡과



한국관시정연구

- | | |
|---|----|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역사 / 손용택(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20 |
|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 실태와 그 배경 / 정재정(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27 |
|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 / 강영철(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 33 |
| ▷ 동남아시아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 왜곡사례와
역사교육의 과제 / 정영순(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42 |
| ▷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방향 / 이원순(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47 |
| ▷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상설기구 설립과 새로운 구상 / 이찬희(한국교육개발원 한국관시정연구실장) | 53 |
| ▷ 역사교과서 왜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구난희(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 59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역사

글 / 손용택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sohn@ns.kedi.re.kr)



우리 나라에 대한 왜곡과 오류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1982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과서국제비교연구실에서 시작된

외국의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들을 조사·분석하면서부터이다.

I. 들어가는 글

우리는 금년 초에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주변국에 대한 관련 내용의 왜곡 사태를 지켜보며 범국민적 분노를 느꼈다. 일본은 그들의 우월성을 억지로 드러내기 위해 식민지로 강점했던 인근 국가들을 의도적으로 폄하시켜 서술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은 일본내의 우익 세력 득세와 무관하지 않고, 현 일본 내각 성격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나라에 대한 왜곡과 오류의 실태는 여러 나라의 교과서에서도 두루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1982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과서국제비교연구실에서 시작된 외국의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들을 조사·분석하면서부터이다.

몇몇 나라들에서는 자국에 대한 관련 내용들이 외국 교과서에 잘못 게재되거나 알려지는 사실들을 바로잡고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학술적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상설연구기관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게오르그 에케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와 일본의 외무성 산하 국제교육정보센터가 그것이다. 이들 연구소에서는 주변 국가들의 교과서를 비교 연구하고 관계 전문가들을 초

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며,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아 권고하는 일들을 전담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범 국가들로서 그들의 이미 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접근방식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변국들과의 화해를 도모하고자 노력을 경주하는 반면, 일본은 그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합리화 시키며, 우월성을 드러내 과거의 패권을 다시 한번 구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82년 교과서 왜곡 파동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관시정연구실이 추진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1.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추진배경 및 성과¹⁾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은 한국의 이미지(즉, 韓國觀)를 바르게 선양하기 위한 일이다.

“한국관(觀)”은 문자 그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 지식, 태도, 가치관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따라서, “한국관을 시정하기 위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은 외국인인 우리 나라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

1) 본 절의 내용은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역사 기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조용환(당시 교과서국제비교연구실 실장)과 김희목·이찬희 등이 작성한 1990년도의 보고서『외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연구의 종합적 검토』 중 19쪽에서 21쪽의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참조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주로 외국 교과서와 백과사전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한국관을 바로잡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여러 가지 활동을 일컫는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주로 외국 교과서와 백과사전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한국관을 바로잡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계기 또는 전기가 모두 외국 교과서의 잘못된 한국사 서술과 지리내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 이후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추진 경위와 당시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협의회”의 활동을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²⁾

1975년 9월 11일 정부의 2/4분기 심사분석 보고에서 “외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 분석보고”의 결과에 따라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지시로 문교부 주관의 공식적인 한국관 시정사업이 최초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보고가 한국바로알리기 사업(당시는 “한국관 시정사업”, 이하 과거의 명칭은 그대로 표기함)의 영역에 있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최초 행위인 셈이다. 이를 후인 같은 해 9월 13일에는 정부 관계 부처 합동 대책협의회가 개최되었고, 시정업무의 주관은 문교부 편수국이 맡고, 외무부는 교과서 수집, 문공부는 해외 시정 의뢰 사업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977년 1월 14일 주요 업무가 완결된 뒤 이 사업은 일시 중단되었다.³⁾

그런데 1978년 5월 레바논의 역사 교과서에 한국전쟁이 북침으로 기술되어 있는 등 심각한 왜곡내용이 당

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관 시정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재차 거론되었다. 이에 정부는 1979년 1월 문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설치 운영하였다. 국무총리실 제 1조정관,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문교부 장학실장, 문공부 해외공보관장, 중앙정보부 제 5국장이 이 협의회의 위원이 되었으며, 그 이외에도 역사와 지리에 식견을 가진 두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같은 해에 문교부는 일본 교과서 40여종을 검토하여 한국에 관해 잘못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모아서 외무부를 통해 일본의 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에 알리고 시정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볼 때, 대대적인 일본 역사교과서 한국관련내용에 대한 검토, 시정요구 작업은 1979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75년부터 문교부 사회과학 편수관실이 주관해 오던 이 사업은 1980년 4월 24일자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사업의 성격상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활동으로 전환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외국 교과서 내용 검토 및 시정안 작성이 한국학 연구와 관련이 깊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하여, 같은 해 7월 25일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였다. 이때, 위원의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바로 그 이듬해에 기구 및 기능상 사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관기관 조정 요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1981년 9월 7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개최된 협의회에서 문공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교과서 관계 업무는 한국교육개발원에

2) 이 글에서는 1982년부터 일본 역사 교과서 한국사 왜곡사건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국관 시정 업무를 담당했던 이양우의 글 “외국 교과서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1982)와 1987년부터 이후 3년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했던 김두정의 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관 시정사업의 현황’”(1990) 및 그 이후 팀장과 실장을 각각 맡아 본 연구실을 이끌어 온 조용환, 이찬희 등의 글과 면담 등을 참고하였다.

3) 김두정의 글(1982)은 이 사업이 1976년 12월 31일 일단 종결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맡기는 방식으로 업무분담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1981년 12월 23일자로 업무이관이 확정되면서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협의회도 재편성되었다. 이번에는 문공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문공부 해외공보관장, 국무총리실 제 1조정 담당관, 국가안전기획부 제 3국장,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문교부 편수관리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연구부장이 위원이 되었다. 나중에는 이 위원들 이외에도 문교부 교직국제국장, 국토통일원 교육홍보실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기획실장 등이 위원으로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문공부 해외공보관 기획부장이 간사를 맡고, 문공부 해외공보관의 제작과장이 새로 구성된 협의회의 서기를 맡게 되었다.

한편, 이 협의회에서는 한국관 시정사업의 업무를 기관별로 다시 분담하였다. 우선 국무총리실은 사업의 종합 및 기관별 업무조정을 하고, 문공부는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하기로 하였다. 교과서, 백과사전, 연감, 인명록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외무부, 문공부, 문교부가 함께 하되, 특수자료의 수집은 국가안전기획부와 국토통일원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시정안을 작성하는 일은 문공부와 문교부(한국교육개발원에 위임)가 맡되, 문공부 해외공보관은 연감, 백과사전, 인명록의 내용을 시정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은 교과서류의 내용에 대한 시정작업을 맡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시정안의 현지 배포, 시정을 위한 각종 협의와 교섭, 시정여부 확인 등의 활동은 외무부와 문공부가 공동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내의 “한국관 시정연구실”(과거 “교과서국제비교연구실”)은 이러한 기능 분담에 연유한 것이었다.

1982년 7월 일본 문부성이 자국의 역사 교과서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관련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한국관 시정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이러한 범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협의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국사편찬위원회로 하여금 일본 역사 교과서 한국관련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하게 하였다. 그 결과 39개 항에 달하는 한국사 왜곡 내용이 파악되었으며, 외무부는 이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특히, 일제 강점기를 다루고

있는 19개 항목의 왜곡에 대해서는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비롯하여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협의회는 이후 3~4년 동안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86년 이후에는 이 협의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더욱이 1989년 이 협의회의 주관 부처인 문화공보부가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되는 외중에 한국관 시정사업을 둘러싸고 두 부처간에 역할분담이 다소 흐지부지되어, 한국관 시정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없는 실정이 되어 버렸다. 다행스럽게도 1990년 11월에 국무총리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협의회의 활성화를 모색함으로써 한국관 시정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 이후 1991년 2월 한국관 시정사업 활성화에 관한 총리 지시(제2호)에 따라 1991년 4월 공보처 주관으로 동 추진협의회가 재발족 되었으며 위원장은 해외공보관장이 맡았다. 1991년 12월 총리실의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협의회 강화 개편 지시에 따라 공보처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교육부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인사들이 추가되어 위원을 확대 구성하였다. 1993년도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협의회 2차 회의(12월 1일)에서 동 협의회 명칭을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추진협의회”로 변경하였다.

1994년 11월 5일 국무총리 훈령(제 303호)으로 국가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해외 홍보업무 주요정책 협의를 위해 “대외홍보협의회”를 설치하였다(위원장: 공보처 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 그러나 1995년 5월 30일 국무총리 훈령(제313호)으로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추진협의회를 폐지하고, 한국바로알리기사업 관련 업무는 대외홍보협의회 실무위원회(한국바로알리기사업 실무분과위)에서 관장기로 하였다.

1995년 11월 21일 범정부 차원의 국가 이미지 개선·관리 강화를 위해 대통령 훈령(제61호)으로 대외홍보협의회 명칭을 대외홍보위원회로 변경하였다(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관계부처 장관). 동 위원회에서 “대외홍보실무위원회”와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실무분과위원회”의 운영 세칙을 의결, 시행하였다. 그러나 동

위원회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실무분과위원회”는 1997년 5월 29일 개최된 이후 활동이 중지되었다. 금년 초에 일본 후소사 출판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왜곡 문제가 제기된 후 정부차원에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대책반’이 만들어져 한국교육개발원의 전문가 분석팀과 국사편찬위원회의 평가·검증팀이 공동으로 작성한 수정요구안이 제출되었다.

2.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바로알리기 연구사업 내용⁴⁾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외국 교과서 부문에 대한 한국관 시정사업을 맡게 되면서 1982년 1월초 자체 협의회를 조직하여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외국교과서의 오류나 왜곡에 대한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검토와 시정을 지양하고 장기적, 심층적, 종합적인 방식으로 시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다. 당시 수립한 사업계획의 기본방침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국교과서 시정권(지역, 정치 및 언어·문화를 중심으로 일본어권, 중국어권, 영어권, 프랑스어권, 스페인어권, 아랍어권)을 설정하고 이를 확대 추진한다.

둘째, 외국교과서를 수집, 분석하여 시정안과 사례집을 마련하고, 한국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시정권은 한국 소개 자료집(=한국이해자료집)을 만들어 보급한다.

셋째, 외국교과서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제학술세미나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넷째, 외국교과서 관계자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러한 사업 방침은 그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한 한국관 시정사업의 골격을 이루어 왔다.

1983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주어진 한국관 시정사업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정연구부내에 교과서국제비교연구실을 신설하였다. 이 연구실에서 수행해 온 주요 한국관 시정사업은 세계 각국 교과서 속의 한국 관련내용 분석, 한국소개자료의 개

발, 교과서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외국 교사 및 교과서 편집인 초청 연수, 유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수탁과제의 수행 등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외국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분석 연구는 교과서국제비교연구실의 핵심 연구 사업이었다.

지금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 분석한 교과서는 총 52개국 1058권에 이른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개정이나 검정 때마다 거듭 분석되기도 하였으므로 분석 연번으로 따지면 훨씬 많은 국가들의 교과서가 분석된 셈이다. 외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분석의 결과는 연구보고서 또는 연구자료집으로 출판되었는데, 연구보고서 52종과 연구자료집(또는 시정자료집) 26종을 합쳐 총 78권에 이른다. 대부분의 연구보고서가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 또는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 분석』이라는 공통적인 제목을 달고, 지금까지의 외국교과서 한국관련 내용연구가 일정한 분석 틀을 유지하며 언어권, 문화권 별로 대상국가만을 달리하여 시리즈 형태를 취해 왔다. 왜곡 교과서 내용 분석 이외에, 한국관 시정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조사, 시정활동이 병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인의 한국관 조사,
- (2) 현지어로 된 시정자료 또는 한국소개자료의 개발, 배포,
- (3) 교과서 관련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참가,
- (4) 외국 교과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영문판 한국 소개자료의 구입, 기증,
- (5) 한국바로알리기 사업과 관련한 관계부처의 수탁 과제 수행 등을 들 수 있다.

(1)과 관련해서 외국인이 어떤 한국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가 1982년과 1983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982년에는 방한한 미국교사, 교과서 저자, 출판인 등 3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3년의 연구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의 사회과 교과서 저자 및 편집인 28명에게 질문지를 우편으로 보내서 회신을 얻는

4) 본 절의 내용 역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서 조용환(당시 교과서국제비교연구실 실장) 외 2인이 작성한 1990년도의 보고서 『외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연구의 종합적 검토』 중 22쪽에서 30쪽의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발췌·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 두 조사연구는 연구대상자 수가 적고, 연구 설계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아서 외국 교육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다소 한계점이 있다.

(2)와 관련해서 외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관 시정자료집과 한국 소개자료집을 제작, 배포하였다.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총 26종의 각국의 언어로 된 시정자료 또는 한국 소개자료집이 개발되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교수-학습자료 2종이 영문판으로 제작되었다. 하나는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한국에 대해 가르칠 때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교수-학습자료 『Teaching About Korea: Elementary and Secondary Activities』로서 1986년에 제작되었다. 또 다른 1종은 한국의 지리에 관한 전문적인 소개자료 『Korea: Geographical Perspectives』가 1988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그밖에, 미국 사회과 교육 학술지인 『Social Studies』 1988년 7/8 월호를 한국에 관한 특집으로 출판하여 미국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1997년에는 공보처의 위탁으로 미국의 초등학생용 읽기자료 “Let’s learn about Korea”와 중등학생용 읽기자료 “The Land of Morning Calm”을 개발하여 각각 2,500부씩 인쇄하였으며 공보처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포되었다. 같은 해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어판으로 시정자료집이 개발되어 주한 해당국 대사관 및 그 나라의 요로에 배포되었으며 러시아어판 시정자료집도 만들어 러시아의 한국학 센터나 우수 대학의 동양학부 한국학과 등 필요한 곳에 공급되고 있다.

1998년에는 역시 공보처 해외공보관의 수탁으로

“Facts And Fallacies About Korea”라는 제하의 오류 주제별 시정자료집을 영문/국문 합본판으로 개발하였다. 이 자료집은 해외 공보관에서 배포 이후 주한 해당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으며, 그 중 주한 유고슬라비아 대사는 직접 본원의 우리 팀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에 불어판과 독일어판으로 “한국의 역사” 제하의 한국 소개자료집을 번역하여 배포하였다. 천연색 사진을 곁들이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흑백사진이 들어간 본 자료는 매우 인기가 좋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며 지금도 필요한 곳과 인사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1999년에는 러시아어판 및 아랍어판 ‘한국의 역사’를 소개자료집으로 번역하였고, 2000년도에는 아랍어판 시정자료집을 개발하였으며 금년(2001)에는 동남아시아 3국 즉,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세 나라에 관한 교과서 분석연구를 토대로 현지어판 시정자료집을 개발 중에 있다.

(3)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교과서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외국 교과서 연구기관이나 관련 학회를 방문하여 현지에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벌이기도 하였다. 해당국 교육부의 초·중등 장학관 또는 교과서 조사관 등 관련 담당관을 만나 면담을 하고,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주요 출판사를 방문하여 한국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소개되며 가르쳐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활동의 대상국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 호주,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을 섭렵했으며, 계속 그 대상국 수를 늘리고 있다. 한국과 이들 교육교류 활동의 대상국들 사이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상호 교류 활동은 일회성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 분석한 교과서는 총 52개국 1058권에 이른다.

외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분석의 결과는

연구보고서 52종 과 연구 자료 집 (또는 시정 자료 집) 26종을 합쳐 총 78권이 출판되었다.

는 성과를 볼 수 없고, 일정 주기를 간격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4)와 관련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영문으로 된 한국학 서적을 구입하여 기증하는 일은 1985년 이후 예산의 감축으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필요시에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와 관련하여, 한국바로알리기 사업과 유기적으로 깊은 관계를 지닌 관계부처로부터 각종 교과서, 백과사전, 인명록, 시청각교재 등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의 검토를 의뢰받아 수탁과제를 수행하여 수십종의 보고서와 연구자료를 발간하였다.

III. 맺는 글

선진국들이 자국 홍보를 위해 상설 연구기관을 만들어 연구와 교육 교류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우리 나라도 한국을 올바르게 소개해 주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을 원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론상에는 상설기구화된 조직체를 갖는 것이 항구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 좋고 지속성이 있어 좋을 것이다. 여기에는 법정부처 차원의 후원이 필요한 국책사업으로의 자리 매김이 필요하다. 상설기구화된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 조직체를 인 프라로 하여 이 일을 추진해 나아가되,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으로서는 다음의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나라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한국의 참모습과 사실적인 내용들을 정선하여 주요 외국어로 만든 한국학 자료 또는 한국 이해자료를 만들어 꾸준히 적재적소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자료들은 일반 성인용, 교사용, 대학생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등 대상에 따른 눈높이를 고려하여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국사 교과서(국정 또는 1종)의 전 내용을 완벽하게 주요 외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재외 우리 동포들과 그 자녀들에게도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필독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국의 교과서와 문헌 등을 연구 분석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주변 국가들과의 교육 교류활동을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꾸준히 이상의 일들을 책임지고 주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 상설화된 주무 기관이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상설 주무기관이 발족되면, 여기에서는 외국 교과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북한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이질화 극복을 위한 기초연구를 다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은 동족인 북한사회에 가장 가까운 우리 한국(남한) 사회를 올바르게 알리고 상호 이해를 구축하며, 미래를 대비한 이질화 극복의 필수 연구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외국 교과서 연구에 앞서 시작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외국에 우리 나라를 홍보하는 것이 이상으로 북한 동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와 교육과정, 그밖의 교수 학습자료들을 수집 분석하고, 남한의 그것과 비교 검토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는 짧지만 국어 학계와 각 교과학계에서 이들 작업을 산발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재정과 연구인력이 뒷받침된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상설화된 주무기관에서 이러한 일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교육**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 실태와 그 배경

글 / 정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chungjj@uos.ac.kr)

일본인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인식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0.1%에도 못미치는 교재채택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몇 달째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70만 권 이상이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1. 우려해야 할 역사왜곡과 정치의 결합

일본적 내셔널리즘을 과도하게 강조한 《새 역사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합격하여 시중에 나올 게 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다. 2001년 8월 현재 몇 개 사립학교와 장애인 학교만 이 교과서를 교재로 채택하여, 권수로는 600여 권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비중으로는 0.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참담한 기록이다. 그렇다고 하여 일본인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인식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들이 만든 ‘새 역사교과서’는 학교에서는 거부당했지만, 시중에서는 몇 달째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70만 권 이상이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교육과 현실을 확연히 구별하는 절묘한 선택을 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6년 동안 이 교과서가 출현하는 과정을 지켜봐 온 필자로서는 《새 역사교과서》 자체가 정치적 산물이라고 본다. 그것은 이 교과서가 출현하는 과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집권 자민당에 ‘역사·검토위원회’(회원 105명, 고문은 수상 하시모토류타로)가 설치된 것이 1993년 8월이었다. 그들은 역사학자들과 함께 20여 차례의 세미나를 가진 끝에 1995년 8월 15일 《대동아전쟁의 총괄》이라는 책을 간행했다. 그 내용은 침략전쟁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었다. 패전 50주년(그들은 終戰이라고 부른다)을 맞아 그들이 내놓은 戰後總決算은 결국 이런 것이었다. 이후 자민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에서는 ‘올바른 역사를 전하는 국회의원연맹’, ‘밝은 일본 국회의원연맹’ 등이 결성되어, 기존의 역사교과서가 최악사관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결의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찬동하는 정치인들의 ‘망언’이 줄을 이었다.

정치계의 이런 움직임과 발을 맞추어 역사학자·교육학자를 비롯하여 우파 문화인들이 중심이 된 ‘자유주의 사관연구회’(1995.7)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1996.12)이 결성되었다. 후자가 《새 역사교과서》의 실질적 집필기구가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단체

의 후원자 중에는 자민당 의원이나 대기업의 간부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새 역사교과서》가 집권 자민당으로부터 직접·간접의 원호를 받으면서 탄생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검정과정에서도 《새 역사교과서》의 집필자에게 자세하고 친절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집필자들이 이 지시를 고분고분 수용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합격을 전제로 한 수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새 역사교과서》의 필자들이 수정 지시에 항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역사관을 용인해준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새 역사교과서》는 정치와 역사가 교묘하게 결합하여 만들어낸 계획된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성격

《새 역사교과서》의 역사관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아래에서는 “만드는 모임”으로 약칭하겠다.)이 어떤 단체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만드는 모임”은 1996년 12월 2일에 발족했다. 구성 멤버에는 교수·언론인·수필가·만화가·작가·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 발족 당시에는 회원이 78명이었으나 3년여만에 그 수는 1만여 명 이상으로 불어났으며, 지금은 전국에 지부를 둘 정도로 번창하고 있다.

“만드는 모임”의 이사·간사 등 핵심 인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999년 10월 30일 현재).¹⁾

회장 : 西尾幹二(電氣通信大學教授, 독일문학)

부회장 : 高橋史郎(明星大學教授, 교육학)

이사 : 伊藤 隆(政策研究大學院大學教授, 東京大學名譽教授, 일본근대사), 坂本多加雄(學習院大學教授, 일본정치사상사), 田久保忠衛(杏林大學教授, 국제정치학, 국제관계론), 田中英道(東北大學教授, 미학, 서양미술사), 種子島 經(BMW東京株式會社前社長, 폭스·바겐·그룹·출판주식회사 특별고문), 中島修三(변호사), 西部 邁(평론가, 發言者塾主宰), 芳賀 徹

1) 西尾幹二, 1999 《國民の歴史》(株)産經新聞ニュースサービス, p.774.

<(왜곡된) 새역사교과서>

주체인 일본의 '새역사를 만드는 모임'의 행동성격은 체계적이고 집요하다.

또한 극우의 선동적인 성격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의 총화로,

'일본 국가 이상주의의 표방'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京都造形藝術大學學長, 東京大學名譽教授, 비교문학), 藤岡信勝(東京大學教授, 교육학), 小林よしのり(만화가)

이사·사무국장 : 高森明勅(國學院大學講師, 神道學)

감사 : 古賀 正(東邦 レーヨン株式會社 相談役), 富信子(公認會計士)

또 "만드는 모임"이 발족 당시에 표방했던 목표와 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²⁾

첫째, 지금까지의 역사교과서 서술 자세는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① 역사교과서의 집필자가 과거를 지금의 기준, 지금의 가치관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의 과거로 되돌아가서 당시 사람의 몸이 되어 보려고 하지 않는다.

② 교과서 집필자가 무엇인가를 적시하고, 일본(내지 세계)의 어디에 있는 무엇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자세만 쓰여 있다.

③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 성공한 국가이다. 성공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역사는 역사가 될 수 없다.

둘째, 중학교 검정교과서에서 '중군위안부' 항의 긴급 사제를 요구한다.

위안부의 앞에 '중군'을 붙인 '중군위안부'라는 조어를 일부러 아이들에게 기억시키는 역사교육이란 기묘하지 않은가? 전지에서의 위안소는 공창제도가 있던 당시의 遊廓과 같은 것이다. 군은 '업자의 강제연행을 방지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관여를 했다. 군의 범죄, 나라의 범죄라고 주장하는 측은 왜 '입증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채로 여론을 유도하여 '罪'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모두 반일운동가의 모략이다.

셋째, 현재의 교과서와 교과서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① 일본과 외국의 역사교과서를 비교 검토한다. 일본

의 역사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② 교과서 검정제도와 무상배포제도를 재검토하고 교과서 채택의 실태를 해명한다.

넷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① 역사에는 윤리적 평가(침략전쟁인가 아닌가, 평화적인가 아닌가) 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이 있다. 국제사회 속에서 일본의 과거를 보는 시점을 가능한 한 다양화하고, 다채로운 관점을 도입한다.

② 국내사의 이해를 위해 종래와 같은 지배·피지배라는 테마로부터 경쟁을 통한 통합이라는 테마로 바꾸어 간다.

③ 전체로서 비판 또는 변호라는 자세가 아니고, 과거 사람에의 공감을 통해 예지를 흡수한다는 태도로 기술해 가고 싶다. 우리들 부모의 역사라는 시점이 소중하다.

④ 외국 특히 近隣諸國의 역사를 좀더 자세히 소개하고 내재적 이해에 노력한다.

이상을 통하여 "만드는 모임"은 현명·공정·명량한 일본국민의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이 결과를 세상에 대해 물어볼 것을 약속한다.

"만드는 모임"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産經新聞》 등을 통해 수년간에 걸쳐 자신들의 역사관을 연재했다. 그리고 수많은 책을 출판하고 강연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일본국내에 널리 확산시켰다. 그 중에서도 小林よしのりが 그린 만화집 《戰爭論》(幻冬舎, 1998), 西尾幹二가 저술한 《國民の歴史》((株)産經新聞ニュースサービス, 1999), 坂本多加雄가 쓴 《歴史教育を考ふる》(PHP新書, 1998)는 대표적 저서들이다. 그들의 저서 중에는 100만 부 이상 팔린 超 베스트셀러도 들어 있다. 또 그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회를 개최하는데, 강연회는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수천 명의 청중이 몰려 성황을 이룬다. 이와 같은 조직과 목표를 가진

2) 정재정, 《일본의 논리-전환기의 역사교육과 한국인식》pp.28-29.

“만드는 모임”은 광범한 운동과 축적된 실적의 총 결정판으로서 “새 역사교과서”의 출판에 돌입했던 것이다.

3. 《새 역사교과서》가 내세우는 역사관의 핵심

“만드는 모임”이 《새 역사교과서》에 담으려고 하는 역사관이 무엇인가를 구명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연구주제이지만, 여기에서는 필자의 다른 논문을 토대로 하여 《새 역사교과서》가 표방하는 역사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두는 것으로 그치겠다.²⁾

- (1)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역사는 과학도 아니다.
- (2) 일본의 역사는 세계 4대 문명권 이상으로 유구할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最古·最高의 문명국가였다.
- (3) 일본인은 고대 이래 지혜와 결단이 풍부하고, 일본의 문화는 고유하고 특이한 것이다.
- (4) 신화와 천황은 국민 속에 스며 있는 성스러운 존재이다. 효도와 충군은 일본인의 기본적 인격이다.
- (5) 일본은 선이고 타국은 악이다-전쟁의 원인과 책임은 항상 외국에 있었다.
- (6) 일본이 벌인 전쟁을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기 위한 성전으로 미화하고,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민중을 영웅으로 부각시킨다. 또 유색인과 백색인의 인종간 대립을 부추기어 일본이 벌인 전쟁이 아시아인에게 독립과 해방을 가져다 준 것으로 묘사한다.
- (7) 무장, 침략(대외팽창)을 추진한 정치가·외교가를 추켜세운다. 각 인물에 대한 서술이 1페이지에 이른다.
- (8) 일본의 대외침략을 정당화하고 근대사의 정책을 대단히 성공한 선택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에 한국

과 중국은 실패한 사례로서 선명한 비교의 대상이 된다.

(9)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만을 강조하고 다른 나라가 입은 피해는 축소하거나 은폐한다.

(10) 패전 후에 미국이 강요한 일본은 진짜 일본이 아니다. 패전 전의 진짜 일본을 되찾기 위한 「전후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1) 군사적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본국가, 자신감에 넘치는 일본국민의 육성을 노린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 역사교과서》는 종래의 다른 교과서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³⁾ 그렇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일본국가 지상주의의 표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새 역사교과서》에 반영된 한국사관

《새 역사교과서》의 한국사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판 중인 《새 역사교과서》와 검정신청본인 《백표지본》교과서, 그리고 두 교과서의 모체가 되었던 《국민의 역사》를 서로 비교·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새 역사교과서》에 관통하고 있는 韓國史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⁴⁾

- ① 일본은 고대 이래로 한반도에 세력을 뻗치고 있었다.
- ② 역사적으로 보아 한국은 중국에 복속된 비자주적 국가였던 것에 비해 일본은 중화질서에서 벗어난 자주독립국가였다.
- ③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국내외 정세에 영민하게 대처했던 반면 한국은 아둔하게 대응하여 근대화에 실패했다.
- ④ 지정학적으로 보아 한반도는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

2) 정재정, 《일본의 논리-전환기의 역사교육과 한국인식》pp.28-29.

3) 정재정,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과서와 한국관련서술의 문제점》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네오내셔널리즘의 동향》(올바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한국의 역사학 관련 학회 공동심포지움, 2001. 3. 19).

4) 정재정, 《횡행하는 국가전략적 역사교육론의 망령 - 역사교과서 비판과 자유주의사관》 《일본의 논리 - 전환기의 역사교육과 한국인식》(현음사, 1998).

5) 정재정,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관의 특징 - 扶桑社 간행 교과서를 중심으로 -》 《일본 역사교과서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2001.6.15.

는 흥기이기 때문에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강에 앞서 이것을 장악해야 한다.

⑤ 한일관계사 속에서 일본은 항상 옳았고 한국은 항상 글렀으므로 양국 사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의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

⑥ 일본은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애썼으나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병합' 하여 선정을 베풀었다.

따라서 《새 역사교과서》가 137개소 달하는 문부과학성의 수정지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되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혀 승복할 수 없다. 오히려 일본과의 '역사교과서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검정을 거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 신청본과 검정 합격본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났는가를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존의 7종 교과서는 내용상의 변화가 많지 않았다. 다만 종래의 교과서에 비하면 한국관련 서술이 30% 정도 감소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서술이 빠진 것은 물론이다. 이것은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역사 수업시간이 그만큼 적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내용의 축소에 그치지 않고 침략이 진출로 바뀌는 등 표현상의 개악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새 역사교과서'의 등장을 의식한 자의반 타의반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새 역사교과서》는 잘못 기술한 사실과 과장된 해석 등을 어느 정도 수정·보완했다. 특히 비판이 집중되었던 근대 한일관계사에서 그 점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면, 조선을 '잡자던' 나라로, 한반도를 '흥기'로 표현했던 문구 등은 사라졌다. 반면에 신청본에는 빠져있던 관동대진재 때의 조선인 학살에 대한 서술 등이 첨가되었다. 이것은 신청본의 내용이 워낙 엉망이었던 데다가, 검정에 통과할 수만 있다면 문구의 부분적 수정쯤은 감수하겠다는 전략이 맞아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③ 《새 역사교과서》는 여전히 '황국사관적'인 역사인식을 관철시키고 있다. 신화와 천황을 대단히 중시하고 패전 전에 일본인이 지녔던 충성과 효성을 아름다운 덕목으로서 내세운다. 또 일본 역사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국 역사의 열등성을 부각시키고 있

다. 이 점은 패전 후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아주 무시한 것이다.

④ 《새 역사교과서》는 대외팽창과 침략전쟁에 대한 미화의 강도를 조금 완화하기는 했지만, 이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스페인의 필립2세와 맞먹는 세계제패의 대야망가로 묘사하고,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아시아인에게 꿈과 용기를 준 대동아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 백인종과 황인종의 대결을 부각시키고 일본이 백인종을 격파하여 황인종의 콤플렉스를 씻어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도 여전하다.

⑤ 《새 역사교과서》의 감추어진 결점은 일본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사실은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근대 한일관계를 예로 들면, 다른 교과서에는 서술되어 있는 일본의 침략 과정, 식민지 지배의 실상,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 등을 거의 무시하고 있다. 옹당히 써야 할 내용을 일부러 빠뜨리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⑥ 우리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새 역사교과서》가 일본역사의 긍정적·성공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한국역사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폄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활발한 대외팽창활동을 부각시키기 위해 임나일본부, 왜구,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강점, 아시아·태평양전쟁 등을 미화한 반면, 한국은 열강에 복속한 연약하고 비주체적인 나라로 묘사했다.

5. 역사 왜곡의 배경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국제화'라는 말이 가장 매력적인 화두였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와 역행하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가? 그것도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태세를 갖추고... 그 배경과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①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교묘하게 활용한 국가 전략적 차원의 움직임이다. 1990년을 전후해 불어닥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걸프전쟁은 국익우선주의 역사관의 고양에 불을 당겼다. 자민당은 재빨리 1993년에 '역사·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일본을 침략국가로 죄악시키는

자학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건전한 일본인을 양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 이면에는 세계제일의 채권국가로서의 일본이 미국의 힘에만 의지해서 해외재산을 지키기는 곤란하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그 후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가능케 하고,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국가·국기로 공인하는 법안이 속속 만들어졌다.

② 일본적 자신감의 표현이다. 사회주의 붕괴와 아시아 통화위기 등을 지켜보면서 일본은 역시 강하다는 인식이 새삼스럽게 부상했다. '새 역사교과서'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별한 능력이라면서, 고대에서 현대까지 영광에 찬 이야기로서 꾸며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내부모순이나 침략전쟁을 들추는 역사관은 미국과 소련이 강요한 자학사관·암흑사관·일본해체사관이라고 매도한다.

③ 장기불황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주려는 고도의 계산이다. 1990년 이후 일본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국제경제의 파고를 거뜬히 헤쳐왔지만, 국내적으로는 80년대를 휩쓴 거품경제가 꺼져버리자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다. 오죽하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유행했겠는가! 우파 민족주의자들은 이 점을 간파하고 영광된(?) 과거의 역사에서 그 탈출구를 찾으려는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6. 역사왜곡의 파장과 전망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이 모두 문부과학성의 점정에 합격함으로써 이 교과서들은 채택 권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단 2002년 4월부터 학교교육의 기본 교재로서 사용될 자격을 획득했다. 관심의 초점이었던

《새 역사교과서》도 시장 점유율은 극히 미미하지만 학교 교육의 기본 교재로 등극한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

곤혹스러운 것은 일본에 35항목에 걸쳐 재수정을 요구한 한국정부이다. 한국정부는 양국 수뇌가 역사인식에 대해 함께 언급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준수하라고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이 '공동선언'은 일본이 침략과 지배로 한국민에게 다대한 고통과 피해를 입힌 것을 통절(痛切)히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후세에 전한다'는 것을 전문(前文)에 실고 있다. 그런데 이 문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일본정부는 한국사를 폄하하는 역사교과서를 점정에 합격시킴으로써 이 약속을 파기해버렸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배신을 당한 셈이다. 한국정부는 이제 짝사랑으로 끝날지도 모를 '대일 햇볕정책'의 공과를 다각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사 왜곡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일반시민들도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예의 주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일본의 배타적 민족주의는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역사왜곡을 용납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를 다시 짓밟고 업신여기는 것을 용인하는 꼴이 된다. 이제 한국인들은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황국사관적 역사관이 부활하는 것을 막는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비가 오고 나면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다. 역사교과서 파동이 한일의 상호이해와 우호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 두 나라의 양식 있는 시민들이 해야 할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

대일 햇볕정책의 재검토와 더불어

역사 왜곡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일반시민들도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예의 주시하면서

비 판 의 목 소 리 를 높 여 가 야 한 다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

글 / 강영철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kyc@ns.nhcc.go.kr)

일본의 자위대가 창설되면서 등장한
일본 재무장론은 보수우익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일부 정치인들은 재무장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교과서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했다.

1. 1950년대의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와 교과서 재판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난 후 일본은 점령국 미국의 군정을 거쳤다. 이후 일본은 제도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를 실시하게 되었다. 천황은 상징적 존재로 남게되었고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 학교 교육에 쓰이는 교과서의 역사기술도 한반도 강점과 만주침략, 태평양전쟁 등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자위대가 창설되면서 등장한 일본 재무장론은 보수우익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일부 정치인들은 재무장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교과서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했다. 이들은 교과서에 기술된 '침략'이라는 역사기술을 문제삼아 1955년부터 1956년 사이에 대대적인 사상공격을 가했다.

그 결과는 교과서검정의 강화로 나타났다. 1956년에 신설된 '교과서 조사관제도'로 문부성이 교과



서 기술의 방향과 내용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부성의 교과서검정이 실시된 이후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일본의 가해 사실 등에 관한 기술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자 이에나가 사부로 당시 동경교육대학교 교수는 문부성의 교과서검정에 대하여 부당성을 제기했다. 그가 집필한 교과서가 문부성의 검정에서 불합격하자 이에나가 교수는 1956년과 1967년에 2차례에 걸쳐 검정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30여 년에 걸쳐 지속된 일명 '이에나가 소송'으로 불린 교과서 재판은 계기로, 학부모, 시민, 학자, 문화인, 출판노조, 일교조 등 교과서 왜곡기도에 맞서는 양심적 시민세력의 반격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 이에나가 교수의 1심판결 승소 이후 문부성의 부당한 교과서 검정에 제동이 걸렸으며, 이에 따라 침략전쟁에 대한 기술 등이 다시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다.

2.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

1) 1982년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1982년 6월, 일본 문부성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하는 과정에서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하자 한국과 중국 등 당사국이 앞장서서 거세게 반발하여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한국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사 결과, 고교 교과서 16종 중에서 24개 항목, 167군데가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일본의 패전으로 인한 조선의 해방 사실을 "일본이 ... 지배권을 상실했다"라고 기술했고, '탄압'을 '진압'으로 '출병'을 '파견'으로, '억압'을 '배제'로 '수탈'을 '양도'로 기술하는 등 체계적인 왜곡을 시도했다.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의 격렬한 분노 표출, 국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등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교과서 왜곡이 한일간, 중일간 외교문제를 일으키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게되자 문부성은 물러섰다. 1982년 7월 30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한국 측의 비판과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일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한국 정부는 8월 3일 일본 대사를 불러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하는 비망록을 전달했다. 또 교과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자를 파견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제의를 거부했다. 중국 정부도 주일 대사를 일시 소환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정부의 책임 하에 왜곡을 시정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발표했다.

11월 24일 일본 정부는 근·현대사의 역사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의견을 적극 배려하겠다는 새로운 교과서 검정기준을 발표했다. 이른바 '근린 제국 조항 또는 주변국 조항'이라는 정치외교적 교과서 검정기준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이 일본 교과서 파동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는 일제침략과 같은 민족 수난을 재현하지 않겠다는 자각과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독립기념관 건립을 결의하게 되었다. 8월중에 문화공보부와 교육부는 '기념관 건립계획안'을 각각 수립하였고, 8월 27일 6개 민간단체 대표들이 모여 독립기념관 건립을 결의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민성금으로 충당하고 자료수집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헌납 또는 기탁 받기로 결정하였다.

8월 28일 준비위원회에서 선정된 단체들이 독립기념관 발기대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범국민 성금 모금운동에 나섰다. 방송사들은 모금운동 실행을 대대적으로 방 송하였고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성금을 모금하였다.

1982년 연말까지 모금된 성금액은 349억 여 원, 추진 위가 해산하는 1986년 5월말까지 모금된 성금은 총 492억 여 원이었고 이자가 188억 여 원이었다. 당초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 목표로 세웠던 500억 원을 훨씬 상회하였다. 독립기념관은 이렇게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을 계기로 국민적 성원으로 건립되었다.

2) 1986년의 「신편 일본사」 왜곡

1986년 일본의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라는 단체에서 저술하여 검정에 통과된 '신편 일본사'가 역사왜곡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역시 한국과 중국은 이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문부상 후지오 마사유키의 다음과 같은 망언이 국제 여론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 당시 조선반도는 ... 다름 아닌 청국의 속령이다 ... 한일 합방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양국의 합의 위에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부 검정 신청 교과서에는 여전히 위의 규정이나 선언의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세기의 조선제국에는 독립국가를 유지해갈 능력도 기개도 없어 …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를 낳은 책임의 절반은 조선 대한제국 측에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 병합된 한국에 대해 일본이 매우 악의를 가지고 있었을 리도 없는 것이 아닌가. 가령 기초적인 교육에 대해서도 일본은 많은 예산을 투여했던 만큼 … 반드시 나쁜 짓만을 한 것은 아니다.”

잇따른 망언으로 후지오 문부상을 전후 최초로 파면된 일본의 내각대신이 되었다. 한편 일본사는 4차의 재수정을 거쳐 간행되었지만 고등학교 교과서로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

3. 2001년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한국의 대응

1)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2002학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새로 사용하게 될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 작업을 거쳐 확정 발표한 것은 2001년 4월 3일이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의 역사교과서는 현행 교과서를 중심으로 개편된 7종 이외에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만드는 모임')이 중심이 되어 새로 편찬한 1종이 추가되어 모두 8종이다. 현행의 역사교과서들도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역사의 진실을 전해주는 데에 부적절한 부분이 많으며, 한국 관련 내용 가운데 왜곡된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편된 교과서들은 모두 그 내용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새로 편찬된 '만드는 모임'의 후소샤 교과서가 왜곡과 편견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지난 5월 8일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은 일본정부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테라다 테루스케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정부에 대한 수정 요구자료를

비망록 형식으로 전달하였다.

이 자료는 그간 역사학자로 구성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분석팀의 정밀분석과 국사편찬위원회의 평가, 그리고 사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검토 등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그 내용은 '만드는 모임'에서 편찬한 후소샤 교과서 25개 항목과 기존 7종 교과서 10개 항목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측은 검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1982년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을 계기로 "인근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에는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조항을 교과서 검정 규정에 첨가하였다. 그리고 1995년의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으며"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힌바 있고, 1998년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부 검정 신청 교과서에는 일본의 한국 강점이나 식민지 지배 등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 위의 규정이나 선언의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해 한국사를 폄하하거나,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는 내용이 현행 교과서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중 일부에는 인류의 평화 공존이나 한국과의 우호 친선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역사 교육을 통해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인권옹호, 생명에 대한 존중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심어 주고 이웃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려는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정 과정을 통과한 일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교과서에 담겨 있는 한국 관련 내용의 오류와 왜곡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 문건에서는 주로 가장 왜곡의 정도가 심한 '만드는 모임'의 후소샤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점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1)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에 기초하고 있다.
- (2) 일본의 역사를 미화시키기 위해 한국사를 폄하하고 있다.
- (3) 일본군에 대한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태평양전쟁 당시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하였다.
- (4) 양국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 (5) 일본이 한국 등 타국에 입힌 피해를 축소 내지 은폐하였다.
- (6)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다.
- (7) 일본이 이웃나라와 평화적인 교류 협력을 해온 사실을 경시하였다.
- (8) 인종주의적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 (9) 학술연구 성과의 반영이 미흡하다.

2) 정부의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발족

4월 3일 문제되었던 일본의 역사교과서 8종이 전부 검정에 통과되었다는 결과 보도가 나오자 국내외의 여론이 들끓었다. 한국정부는 즉각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날 외교통상부장관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정식으로 항의하였다. 4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규탄성명을 내었고, 4월 10일 정부는 최상용 주일대사를 소환하였다. 4월 11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이는 1998년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의 위반이라고 지적하였다. 4월 12일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반장으로,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일본교과서왜곡대책반'을 가동시켰다. 대책반은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합격본에 대한 정밀 검토를 하고 정부의 대응방안을 수립하며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는 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 우호 협력관계의 기본전제라는 관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방향을 정한 후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한·일 역사학자간 교류 활성화 지원 및 우리 역사를 국제적으로 바로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대책반 가동 이전인 4월 7일에 이미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한 '전문가 분석팀'이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역사전문가와 일본문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 분석팀'의 분석결과는 국사편찬위원회에 평가 검증과 자문회의의 검토를 거쳐 5월 8일 일본정부에 35개 항목의 재수정 요구안을 확정지었고 전술한 대로 외교통상장관은 주한일본대사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 요구안을 전달하였던 것이다. 그후에도 대책반은 8월 24일 현재 15차의 회의를 거듭하고 정부의 각종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외국의 교과서 왜곡 시정을 전담할 상설기구 설립 문제와 학계의 역사연구 지원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3) 국회의 움직임

이만섭 국회의장은 3월 1일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하여 "일본이 반성은 커녕 침략과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상해 있는 민족의 자존심을 북돋우고 일본에 반성을 촉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4월 9일에는 국회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해 스기야마 주한 일본공사에게 왜곡된 역사교과서 검정통과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일본의 왜곡교과서 파동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의 맹활약**이 있었다.

네티즌들의 사이버시위가 보여준 위력은 왜곡의 근거지인 그들의 서버를 다운시켰다.

그밖에 많은 한·일 민간단체들의 활약과 성명은

새 로 운 시 위 역 사 의 장 을 열 었 다 .

4월 11일 국회의 김영진 의원은 “일본은 반성하라”고 쓴 피켓을 들고 일본 국회 정문 앞에서 금식 기도 시위에 돌입했다. 외국의 국회의원이 일본 국회 앞에서 연좌 시위를 벌인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또 한·일의원연맹의 대표단이 4월 12일 일본 외무성 장관을 방문하여 회담을 갖고 ‘만드는 모임’의 회원이 집필진으로 가담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등이 검정에 합격한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이들 교과서의 재수정을 문서로 요구하였다.

대표단 일행은 문부과학성 장관과도 회담했는데, 일본측은 “검정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왔다. 재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의 제1야당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는 5월 3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이만섭 의장을 예방했는데 한국 국내에서 반발 의견이 고조되고 있는 후소사 발행의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했으나 교과서로 채택되어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5월 10일에는 합승회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이 왜곡 파문을 일으킨 역사교과서에 대한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도쿄지방법판소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8개 역사교과서의 출판사 및 ‘만드는 모임’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여야는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에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7월 18일,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4) 학계의 활동

우리 나라의 역사학계도 이번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2000년 가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이 문제화 되면서 그해 11월 14일 역사학회·역사교육연구회·한일관계사학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내용개정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남북 역사학자들도 3·1운동 82돌을 맞아 평양에서 학술토론회와 공동성명을 내고 일제의 조선 강점이 불법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과 일본정부의 사죄를 거듭 촉구하였다.

3월 19일에는 한국사연구회 주관으로 15개 역사 관련학회와 연구소가 참여하는 공동학술회의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네오내셔널리즘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열려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를 학술적으로 접근하였다.

또 유럽 지역 한국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유럽한국학회도 회원을 대상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 1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4월 4일부터 8일까지 영국 런던대에서 개최된 이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채택된 성명서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한국과 한국의 역사에 관한 잘못된 서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시민단체의 활약

금번의 일본교과서 왜곡 파동에 있어서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의 활약이었다. 이들의 줄기찬 노력은 사태 진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우리 나라의 네티즌들이 사이버시위를 벌여 일본 문부과학성과 자민당,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출판사인 후소사, 근린제국 조항의 삭제를 문부과학성에 요청키로 한 홋카이도 의회 등 역사교과서 관련기관과 단체의 홈페이지 6곳이 3월 31일부터 수 차례 서버가 다운되어 접속

이 안 되는 장애 현상을 빚었다.

4월 10일에는 서울 은평구 불광초등학교 전교생 2,500여명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3천명이 참가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규탄 건기 대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직접 그린 태극기와 ‘일본은 반성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성명서를 나누어주었다.

또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규탄 항의서명’을 받아 동남아 국가들의 시민단체와 함께 국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독도향우회에서는 “태평양전쟁 피해 국가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일본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작정”이라며 “일본 현지에서 재일동포와 함께 항의집회도 갖겠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4월 11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일본 정부는 검정통과를 취소하고 주변국에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교민들은 LA도심을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잇따라 시위를 가졌다. LA한인회 등 남가주 지역 한인단체와 필리핀계 및 중국계 단체들은 4월 17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역사교과서 왜곡 저지 켈기대회를 열고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했다. 한인회는 성명에서 “일본 극우 보수세력이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결의했다. 시카고에서는 한국청년연합 등 50여명이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신군국주의 반대’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규탄대회를 가졌다.

일제시대 근대위안부 출신 할머니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은 4월 26일 일본이 역사왜곡 파문과 관련, 일본 문부과학성에 항의서를 전달하였다. 이들은 “우리가 일본의 화장실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일본 정부가 검정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못된 부분의 기술을 수정하라”고 요구했고, 문부과학성 관계자들은 이들의 항의와 문제 제기해 대해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5월 10일에는 재미한국인 100여명이 워싱턴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 대표는 일본 정부에 대해 왜곡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

는 서한을 일본대사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90여 개의 시민단체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일본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단체와도 연대하여 이 교과서에 대한 비판운동과 재수정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6월 12일에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수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며 24시간에 걸쳐 세계 71개국 125개 도시에서 열렸다. 단일 사안으로 전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된 이번 집회는 아시아 25개국 37개 도시, 미주 13개국 38개 도시, 아프리카 10개국 10개 도시, 유럽 21개국 32개 도시, 오세아니아 2개국 8개 도시에서 지역별로 12일 정오에 맞춰 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 앞 등에서 펼쳐져 우리 나라 시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6) 북한의 동향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통과와 관련된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4월 7일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에서였다. 이 성명은 “우리는 자기의 과거 죄행에 대한 사죄와 반성,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면서 후대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일본 당국의 오만 무례한 처사를 준열히 규탄”하면서 일본 당국에 대해 역사왜곡 및 미화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역사는 왜곡한다고 달라지거나, 덮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덕에 심히 어긋나는 매우 비열한 정치적 협잡 행위이며 군국주의적 망동인 “역사부정은 파멸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 역사학회는 5월 14일 성명을 통하여 일본정부가 역사왜곡 교과서를 승인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이 교과서를 폐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자국의 정치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멋대로 역사적 사실을 개정 또는 삭제한 기만행위를 묵인한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이러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동 학회는 이와 함께 일본 당국이 ‘범죄로 얼룩진 역사를 사실대로 기술하는 것은 자기를 확대하는 사관(자학사관)’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역사 왜곡을 정당화하는 것은 과거 죄행을 합리화하고 소위 동동아공영권 실현을 위한 기도라고 비난한 후 일본 당국이 역사왜곡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규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 대해 문제가 있는 교과서 승인 결정을 즉각 폐기하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교과서를 가지고 후대에 교육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역사 왜곡에 대해 일본 당국은 책임을 지고 북한 등 관련국가와 국제사회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밖에 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4. 30),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5. 2), 아시아여성들과 연대하는 조선여성협회(5. 3),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5. 7), 교육성(5. 7), 농업근로자동맹(5. 8), 민주여성동맹(5. 9), 직업총동맹(5. 10) 등 기관 및 단체들의 비난 성명과 담화가 잇달았다. 북한의 경우 조일수교회담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상당기간 대일 강경 자세를 고수할 것 같다.

7) 중국의 반향

금번 일본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중국은 검정 이 통과 이전부터 강한 불만을 표시하여, 당시 미온적이던 한국 정부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사태 의전 과정을 보면 중국은 여러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려는 것 같이 보인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5월 8일 일본에 대한 한국의 35개 항목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응이 중국 내에 보도(인민일보 3월 28일자)되면서부터 점차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여 중국의 대일 비판 목소리는 점차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중국 외교부 주방짜오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일본이 우익 황국사관을 선전하려는 중대한 정치 원칙상의 문제로 일본은 즉각 침략 역사를 부인하거나 미화하는 교과서 출판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 언론들은 과거 일본교과서가 난징대학살과 관련, 20만 명의 중국인을 살해했다고 적었으나 김정신

청을 낸 4종의 교과서가 사망자 수를 생략하고 위안부 문제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침내 중국 외교부는 5월 16일 북경주재 주중 일본 대사관의 공사를 불러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의 우익 역사교과서가 갖고 있는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비망록을 전달하면서 일본 우익학자들이 편찬한 역사교과서의 기초는 황국사관을 널리 알리고 침략 역사를 부인 또는 미화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고, 왜곡 교과서의 수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 요구는 그간 중국 사학계의 해당 교과서에 대한 진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중국에 대한 전면적 음모 책임 전가’, ‘일본 군국주의의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식민통치 미화’, ‘난징대학살 역사적 사실 은폐’, ‘극동 국제군사법정의 일본 전범재판에 대한 공격’ 등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4. 일본의 반응

1) 일본 정부의 대응

2001년 2월 한국과 중국이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일본정부는 “한·중 양국 등의 반발이 있으나 주변 당사국의 입장을 배려한 정치적 개입은 하지 않을 방침”임을 천명했다. 또한 “설사 (문제의 교과서에) 제 2차 세계대전의 대외정책을 부정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역사적 사실관계의 기술에 오류가 없는 한 검정 합격을 용인한다는 판단”이라 하고, 특히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 관련 주변국에 필요한 배려를 한다는 국제적 약속인 ‘근린제국(近隣諸國) 조항’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정치적 배려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확실히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결국 3월 29일 문제의 교과서 등 8종의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되고 4월 3일 일

일본정부의 **방관적이고 무성의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역사는 그것을 직시함으로써

미래에 용기를 준다’는 일본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은

침묵하던 다수의 일본인들에게 불채택 방법을 제시했다.

본정부는 검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한국이 주일대사를 일시 소환하고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에 교과서 문제를 정식 제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그 무렵 일본의 총리 후보에 나선 네 사람 모두 검정 통과된 교과서의 '재수정 불가' 의사를 표명했다. 5월 8일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부의 '일본교과서 왜곡대책반'에서 마련한 35개 항목의 재수정 요구안을 일본측에 전달하자, 일본의 고이즈미 신임 총리는 "재수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장래를 위해 어떤 식으로 협력할 것인가 역사학자·전문가들과 협의하겠다"고 했고, 일본정부 대변인 후쿠다 관방장관도 "정부로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 음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재수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도야마 문부과학상도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는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수정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다카가 외상은 한때 교과서 왜곡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5월 14일에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은 한국정부의 재수정 요구에 대하여 "사실의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여)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15일부터는 문부과학성 내에 교과서 검정위원과 학자 및 전문가들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개시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재수정 요구에 대하여 '재수정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다가 국내외의 여론이 비등해지자 검토위원회의 정밀 검토를 거쳤다고 하며 7월 9일 (문부과학성)의 회신을 통하여 우리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그 내용은 후쇼샤 자체 정정 5개 항목과 일본 정부의 수정 권고 2개 항목에 그치는 무성의 한 것이었다.

2) 일본 시민단체 등의 반대

'만드는 모임' 검정 신청본의 내용이 알려진 2000년 8월 이래로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 21', '역사교육자 협의회' 등은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는 문제의 교과서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들 단체들에 의하여 '만드는 모임' 측의 교과서와 기존 7종의 교과서에서 '중군위안부'와 '침략'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거나 축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의 교과서 파문이 본격화된 2001년 2월 25일에 889명의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들은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에 역사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성명서에서 "패전 후 일본의 역사학·역사교육은 국민을 전쟁으로 이끄는 데 이바지했던 전전의 역사학·역사교육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하여 많은 학문적 업적을 이뤄냈다."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는 역사의 진술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학·역사교육의 학문적 성과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비학문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2월 27일에는 와다 하루키 동경대 명예교수 등 16인의 지식인들이 '일본의 모습을 그르치는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성명'에서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에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아시아의 여러 국민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한 반성과 사죄가 전혀 없다. 모든 것이 과거의 미화·긍정·정당화일 뿐이다. 이렇게 과거를 은폐하고 전면적으로 미화한 역사상을 가지고 차세대 국민을 교육하는 것은 아시아와 세계에서 다른 나라 국민들과 평화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와 협력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는 것이다. 곧 차세대 일본 국민으로부터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3월 2일에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70대의 군인 출신자 모임 3개 단체는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칙어를 주입 받고 신화를 사실로 알며 전장에 내몰린 군인들이었다. 우리는 성전(聖戰)이라는 미명아래 총을 잡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대한 고통을 주었다. 그런데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일까"라는 우려의 호소문을 문부과학성에 전달했다. 3월 16일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사부로 외 17명이 '가해의 기술을 후퇴시킨 역사교과서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3월 22일 일조협회는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가 노리는 것은 일본을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 기쁘게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다. 우리는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반성한다는 전후 정치의 원점에서 서서 전쟁으로 연결되는 모든 책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3월 22일에 사회민주당이 "역사 개악 세력이 만든 역사 개악 교과서를 허용하지 않는 노력을,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전력을 기울여 벌여 나갈 것을 내외에 천명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3월 28일에는 동경대학 졸업식에서 하스미 시게히코 총장이 "그 것이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역사는 그것을 직시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용기를 준다. ...역사적인 기억을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작은 자기만족을 가져다줄지언정 결코 미래에 대한 용기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4월 3일에는 '전국네트 21' 등 12단체는 '만드는 모임 교과서'의 불채택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전국네트 21'을 이끄는 다무라 요시후미는 본격적으로 문제교과서 불채택운동을 전개하여 강연·서명운동·인간띠 잇기·집회 등 갖가지 이벤트를 주도하여 '침묵하던 다수의 일본인들'에게 (불채택) 참여 방법을 제시하였다.

5. '만드는 모임' 교과서의 실패와 일본의 상황

앞에서 보았듯이 지난 4월 3일 기존 7종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외에 '만드는 모임'의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비난의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으며, 한국과 중국의 정부는 재수정의 요구 자료를 공식적인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예전과는 달리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무시하고 재수정 요구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 가운데 지난 8월 13일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단행됨으로써 이에 일본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 특히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크게 금이 가게 되었다.

한편 역사교과서의 왜곡은 일본 안에서도 역사학자·교사·학부모·시민단체 등에 의한 격렬한 반대운동을 일어나게 하였으며 특히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 채택 저지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지난 8월 17일 '만드는 모임' 측에 의한 채택율 10%이상을 목표로 한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채택율은 0.03%에 그쳐 참패로 끝나게 되었다. '만드는 모임' 측의 교과서의 채택을 궤멸 상태까지 몰고 간 것은 일본의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8월 15일 각 지역의 교과서 채택이 거의 결정되자 다와라 요시후미는 "최근 7개월간 1,000여 곳에서 (후쇼샤)교과서에 반대하는 집회와 강연회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번만큼 같은 문제에 대해 일본인이 광범위

한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고 그간의 사정을 소개하고 있다. 민간인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을 좁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교과서의 채택을 일단 저지하였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만드는 모임' 측은 4년 뒤에 다시 검정에 재도전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사회과교과서의 집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의 교과서 파동에서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 외에 기존 7종의 역사교과서의 채택율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종 가운데서 일본의 아시아 제국에 대한 가해 사실을 가장 충실하게 기술한 '일본서적'의 교과서의 채택률이 크게 낮아지고 보다 중립적인 '동경서적' 교과서의 채택율이 40%(점유율 1위)로 높아진 것이다. 교과서 채택을 결정하는 교육위원과 교육장들을 대체로 일본사회의 뿌리 깊은 보수적 '내셔널리스트'들이다. 이들이 지나치게 '우익적'인 후쇼샤 교과서를 배척하는 대신 전사 일본군의 가해행위를 비교적 자세히 기술한 '좌익적인' 교과서를 동시에 배격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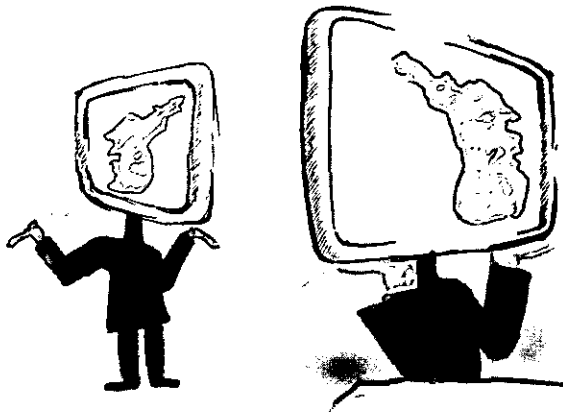
새로운 세기를 앞에 놓고 냉전종식과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특징 지워지는 이른바 '탈냉전' 시대를 맞으면서 일본은 국가의 진로를 새롭게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 일본사회가 전반적으로 우경화되는 가운데 그 동안 견제 역할을 해온 진보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 등의 비판세력은 후퇴를 거듭하여 영향력과 입지를 거의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교과서 왜곡의 바탕이 되는 일본 사회의 내면적 흐름이며 이 같은 흐름이 기왕에 힘겹게 지켜온 동북아시아의 '한정된 평화질서'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질서 구축 과정에서 비극적인 19세기·20세기 전반 역사의 비극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냉전체제에 이은 '국제화'·'세계화'가 화두로 떠오르는 21세기에 오히려 반세기전의 국가 중심 사관으로의 회귀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하는 일본 사회의 비정상적인 우경화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교육**

동남아시아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 왜곡사례와 역사교육의 과제

글 / 정영순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cys@ns.chedi.re.kr)



I. 역사교과서 서술에 대한 문제의식

교과서는 다음 세대들의 인격형성을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내용에 대한 왜곡이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 침략주의 사관이었던 식민사관의 부활은 일본인의 우월 의식이 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구촌 사회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즉 교통과 정보 통신의 발달은 국내 및 국가간의 갈등에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국가들의 개입을 촉진하거나 강요하기도 한다.

21세기를 위한 교과서, 특히 역사 교과서는 우리들이 교육 전체가 직면한 도전들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우리가 함께 사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의 문제이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소속한 집단(국가, 지역, 도시, 마을)에서 함께 살아야 할뿐 아니라 ‘지구촌’에서도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사이에서의 긴장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가장 부족한 상호간의 이해와 평화적인 교류, 진정한 조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 교과서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려는 노력은 유럽인들이 백인 중심 세계사를 버려야 한다는 자기 반성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즉 애국적 역사를 쓰려는 유럽의 국가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으로서 역사의 중립성이 강조된 것이다.

그러나 동양의 경우는 권력자들의 압력에 의해 역사가 서술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지배적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가장 먼저 서구화되어 사회가 발전하였다고 하는 일본에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역사의 왜곡이 우의 권력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일본 교과서에서의 한국사 관련 내용 왜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 서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 왜곡된 한국사 관련 내용이 전파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사례로써 1999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의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 분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내용의 왜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동남아시아(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 왜곡 사례

동남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교과서에는 동아시아를 설명할 때 한국에 관한 언급은 매우 적고

대부분이 일본과 중국을 서술하면서 부수적인 내용으로서 한국이 소개되고 있다.

1. 태국 =====

태국 교과서의 경우 중국에 대해서는 문화와 정치적 내용,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적 내용을 주로 서술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신흥공업국의 예로만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중국 및 한국의 관계 설명에서 중국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한반도에서 받아들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한민족 고유의 문화가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 침략국이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으므로 당연히 일본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였으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과 더불어 일본의 자료가 그대로 인용된 데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한국에는 예전부터 일본의 신도교와 유사한 Sinkyo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그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불교와 중국의 유교도 한국에서는 그리 발전하지 못하였고, 반대로 후에 전래된 기독교가 오히려 널리 전파되어,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한국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서기 7세기경에는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였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신라이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 통치하였다. 그러나 17세기경에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이 관계는 서양의 영향력이 중국에 확대되어 중국이 약해진 19세기 말까지 지속되었다.”라고 하여 한국사의 전반적 내용이 일제 식민 지배하에 들어가기 전까지 중국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문구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다. 즉, “한국의 역사는 길고, 고통으로 점철되어 왔다. 외세의 침입과 점령이 끊이지 않거나 종속국으로서 존재했다.”, “한반도가 북쪽으로는 중국과 접해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후 1910~1945년 간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였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존재하므로 한국은 항상 이 두 나라와 종속관계를 형성했다.”라고 서술되고 있다. 한국의 역사에서 1910년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국가의 주권을 잃었던 시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식민지배를 받은 것으로

기술하여 한국사 전반적인 내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태국 교과서의 서술 특징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태국이 한국의 6·25전쟁에 UN의 참전국으로서 참전하였기 때문에 6·25전쟁에서의 UN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부각시키고 있다. 즉,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이후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951년 2월 1일에 유엔 총회는 남한에 군대를 파병하여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고, 소련과 중국은 이 결의에 반대하지 못하였다. 그 후 북한은 남한에서 후퇴하였으며,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상을 제의하였다. 한국 동란을 종식시킨 일은 유엔의 업적으로 간주된다.”라고 하고 있다. 6·25전쟁의 여러 가지 발생 원인, 경과 및 결과 등이 세계사 전반적인 구조상에서 기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UN의 업적에 의해 전쟁이 종결되었다는 내용만을 강조하고 있다.

2. 필리핀 =====

필리핀 교과서 서술의 특징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보다 강조되고 한국인의 독자적인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 내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최초의 왕조인 고조선에 대해서는 신화로 대체하고 있는 반면 한국사를 한나라에 의한 4군현의 설치와 식민지 경영에서부터 기술하여 한반도의 역사가 고대부터 타율적인 역사로 시작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록된 역사에 따르면, B.C. 1122년에 중국인 망명자들이 평양에 왕국을 건설했다. 이 왕국은 7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西漢(202 B.C. - 9 A.D.): 광대한 영토를 가진 제국을 보면 북쪽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와 베트남과 같은 안남이 한제국에 포함되어 있었다.”, “분열과 통일(220-618 A.D.): 이 시기의 중요한 측면은 중화세계의 경계로부터 떨어져 있던 지역들이었다. 분열기에 있던 북 베트남의 번영은 단지 중국 역사의 일부분일 뿐이다. 동시에 북동쪽에 있던 한국은 중국문화에 속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방식대로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중국의 식민지 : 중국의 영향력은 한무제가 흉노를 멸망시키기 위해 한국을 침략했을 때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B.C. 109년 경 육군과 해군력을 사용하여 조선을 멸망시켰다.... 중국,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은 확산되었다. 한국

고대부터 중국의 지배설 · 임나일본부설 · 타올의 역사 · 일본의 침략=근대화 등
 한국사의 왜곡 내용은 동남아시아 교과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한국사의 내용이 세계사 속에서 객관적 · 과학적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은 중국 왕조의 여러 지배자들이 점차 약화되고 파멸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00년 동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하여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한국사 설명의 주된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정권 : Jingo 천황(200-269 A.D.)은 정복자로서 한국에 왔으며, 일본의 한국 통치는 668년 한반도가 권력조직을 확립하기까지 지속되었다.”라고 하여 일본의 식민지배 역시 근대 이후가 아니라 고대부터 시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고대부터 한반도를 지배하였다고 하는 임나일본부설이 일본 교과서 이외에 필리핀의 교과서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일본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다음에는 한국인의 독자적인 역사 문화적 전통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적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 키가 크고 강건하며 더 하얗다. 이는 그들이 몽고 혈통이기 때문이다. 남한 사람들은 말레이 인종과 혼혈이며 검고 작다.”고 하여 남북한 주민이 다른 인종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의 중국적 방식을 보여주는 증거는 중국에 대한 공물 제공; 불교의 소개; 중국에서 만들어진 법령의 강제; 유교와 중국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과 교육기관의 설립; 중국식 교육과 중국식 방법의 활용; 그리고 427년 낙랑에서 평양으로의 수도 이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여 중국 문화가 끼친 영향을 과도하게 설명함으로써 한국인이 만든 독특한 문화가 없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의 문화가 한반도로 역류하였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신라의 금관에서 볼 수 있는 곡선 모양의 보석들은 일본 제국 상정의 흔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대동아 공영권이 여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실리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1938년 일본은 동아시아의 ‘새 질서’를 선언했다. 그것은 만주국, 한국, 내몽고 및 중국을 일본의 일부로 상정하는 것이

었다. 1941년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을 선언하였는데 그것은 태평양 군도, 전체 동남아시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인도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상의 목적은 그 지역들을 통합하고 일본의 지배 아래 서구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군국주의화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새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위에 언급한 나라들에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주려했다.”라고 하여 일본이 한국과 아시아를 침략한 사실을 합리화시키는 대동아 공영권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사항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 전쟁은 깊고도 오랜 상처를 남겼으며 이 나라를 변화시켰다. 과거의 행정은 사라졌으며(권력의 상징), 경제는 추락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산 가족이 되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거지가 되고 집을 잃었다. 이 나라에는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곤경이 찾아왔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기독교가 들어왔다. 1. 한국 전쟁 이후 미국, 필리핀 및 기타 나라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남한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 2. 한국의 초대 정권은 감리교도인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하여 기독교인들이 이끌었다. 그들은 근대화 세력이 되었다. 3. 한국 토착민들은 충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믿음이 주는 도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복음주의의 ‘황금시대’가 퍼져나갔다. 도시로 이주한 지방 출신 시민들이 개종하였다. 4. 1980년에 한국 군대의 60%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들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소수가 되었다.”라고 하여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과도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필리핀 교과서 서술의 전반적인 특징은 일본 식민사관의 영향에 의한 서술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경향으로 파악된다.

3.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교과서에서도 한국관련 내용이 매우 적으며 다소 취급되어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

이다. 그리고 역사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통킹, 안남 그리고 캄보디아 지역 등이 당나라에 점령당하였다. 당나라는 또한 한국, 일본을 지배하였다.”라고 하여 한반도는 고대부터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서술되고 있다. 또한 “1894년 일본은 중국을 침공하였다. 중국은 일본에 쉽게 항복하였는데, 그 결과 중국은 대만과 한국을 일본측에 넘겨주어야 했다.”라고 하여 한국의 역사가 고대부터 장기간 중국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논조로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1905년에는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의 승리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다. 일본은 1910년에 한국에 산업기지와 철도를 세우게 된다.(한국의 근대화)”라고 하여 일본에서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인도네시아의 교과서에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요 논조는 일본의 침략은 한국의 근대화를 앞당겨 주었고, 미개국에서 문명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식민 통치는 오히려 한국에 은혜를 베푼 것이었다고 역사를 미화시킨 식민지 시혜론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전세계 교과서에 그대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II. 외국 교과서 속의 한국사 왜곡 원인과 대책

이상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 왜곡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역사는 고대시기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이것은 청·일 전쟁시기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고조선의 건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한군현을 가장 먼저 언급함으로써 한국사 시작의 상한선을 끌어내림과 동시에 시작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다고 기술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 역시 근대 이후부터가 아니고 이미 4세기 후반부터 가야 지역에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다고 일본에서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일본이 한반도에 세력을 뻗치기 시작한 것은 고대시기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사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타국의 지배를 받아온 타율의 역사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다.

넷째, 역사의 뒤안길에서 주체적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한민족은 일본의 침략으로 식민지배를 겪은 후에야 근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관시정연구실에서는 1999년도의 동남아시아 교과서 분석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교과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교과서 개선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각국의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의 오류가 무엇이며, 이에 대해 각 국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여기에서 한국사 내용이 잘못 서술되는 주된 원인은 첫째, 일본의 식민사관이 세계 각 국에 여과 없이 유포되기 때문이며, 둘째, 한국에서 발행한 한국사에 대한 소개 책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미국과 일본의 자료를 주로 인용하여 교과서를 서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학술회의는 한국 이해자료를 포함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교과서 시정자료집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태국의 경우 학술회의에 참가한 교육부의 교재개발센터 소장이 시정자료집을 만들어 태국으로 보내주면 약 5만 권의 태국교과서를 시정할 수 있다는 확답까지 해주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각국 교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과 함께 한국을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집을 보다 많이 배포하여 일본의 잘못된 역사관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사 왜곡에 대한 중요한 대책으로는 한국이해자료집을 보다 많이 발간하여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보급함으로써 그 나라들의 교과서 저자나 출판사가 한국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최대한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하겠다.

IV. 역사교육의 과제

세계 각국의 교과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특히 사회과의 한 교과로서 역사 학습은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국사 중심과

강대국 중심의 역사 서술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에는 역사 교과서의 분쟁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 정치, 경제, 문화적 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 이해와 국가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은 교과서 특히 역사 교과서 개정의 필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유네스코가 창설되면서 교과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다 활성화되었다. 유네스코는 1946년에 제 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교과서를 통해 세계 보기' 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당시 교과서들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민족적인 성향이 강한데 반해 지구적 입장에 대한 요구가 매우 약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에 유네스코는 '교과서와 교재 개선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였는데, 이것은 최초로 교과서 개정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국제 이해의 입장을 보다 강화시킨 것이었다. 즉 "교과서 개선은 학교 교과 내 모든 분야에서 장려되어야만 한다. 역사와 지리학이 특히 중요하지만 문학, 예술 자연과학과 다른 분야에 대한 교육 역시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유네스코 인문·문화·국제교육국장이었던 Kaisa Savolainen이 "교과서 개선과 분석은 틀린 것에 대한 정정, 과도한 감정적 표현 방법에 대한 주의, 세계적 중요성을 가진 주제 선택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 일은 학생들에게 보여질 자료가 갖는 함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학자와 교육자, 심리학자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각 국 역사 교과서가 상호 올바르게 기술되고 가르쳐지도록 21세기 지구촌 시대에는 더욱 더 많은 노력이 요청된다.

그러나 21세기가 지구촌 사회로서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여도 실제 지금까지의 역사 서술은 강대국 중심과 자국사 중심의 역사 서술이 커다란 흐름이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에서 백인 중심의 역사 교과서 서술을 지양하는 움직임이 시도되었지만 모든 나라들이 세계사 속에서의 자국사 우월주의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이러한 경향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서술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은 21세기의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것은 21세기가 평화의 세기가 되리라

고 믿었던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이며, 얼마 전에 돌연히 발생한 미국의 뉴욕사태와 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또다시 세계는 강대국 중심의 역사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 전개 추세 속에서 일본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군국주의적 침략주의 사관이 부활하는 가운데 과거 일본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실현해보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자라나는 세대들의 역사관을 일본 우월주의로 세뇌시키려는 의도로서 나타난 것이 올해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역사교육 동향에 대한 반성을 촉구해야만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역사교육 동향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자국사의 최근 발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사와 함께 자국의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교육은 이러한 흐름에 완전히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1세기에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의 학생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함께 국론을 통일하여 제 2세대들에게 이 세계를 살아나가기 위한 멋진 비전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한국사 관련 내용이 왜곡되어 일본의 학생들이 한국사에 대해 잘못 인식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학생들이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역사교과서 편찬과 역사교육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외국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사 왜곡은 끊임없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은 한국사의 내용이 국수주의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세계사 속에서 객관적, 과학적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과학적, 객관적 역사 연구와 함께 우리의 역사 교과서가 올바르게 기술되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될 때만이 다른 나라에 한국사 왜곡 내용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정당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우**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방향

글 / 이원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한국관 시정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은

각박한 세계사 전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확고히 알리고, 이해 어린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인류의 공동번영에 공헌하려는 우리들의 적극적인 역사추진의 민족적 노력인 것이며,

현 대 사 적 민 족 당 위 의 역 무 수 행 인 것 이 다 .

1.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세계는 제2차 대전 이후의 냉전 체제가 붕괴되어 ‘하나의 세계’로서의 역사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는 무한경쟁의 조류 속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자기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민족적 당위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인류를 공존·공영의 밝은 미래로 인도할 것인가, 또는 무한 경쟁의 격랑으로 몰아넣을 것인가,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이 온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의 거센 조류에 직면한 우리 민족은 세계사적 보편을 추구하며 민족사적 개별을 획득하려는 역사적 현명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세계를 향한 국제적 협조를 다지는 한편 민족적 자아를 증진시켜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민족의 위상을 세계에 바로 알려 국제적 우의와 신뢰를 다져가며 인류의 공존·공영을 증진시키면서 그 속에서 민족적 실리를 착실하게 추구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동양의 은둔국’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피압박의 식민지 백성’이 아니다. 광복 후 반세기의 짧은 세월에 무에서 유를, 낙후에서 발전을 추진하여 세계적 주목을 받는 국가로 치솟아 오르는 나라이다. 이제 가슴을 펴고 한국인임을 내세울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진 거 레이다. 한반도에 뿌리를 둔 사람의 십분의 일 이상이 세계 각지에 진출하여 나라를 펴고 있는 활력에 넘치는 민족이기도 하다. 유구한 역사를 거치는 동안 밖으로부터 끊임없이 주변 민족의 침략적 도전을 받으면서도 이를 극복하여 오늘날까지 민족적 자존을 지켜오며 자랑할만한 독자적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온 역사적 전통을 지켜온 민족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위상과 현실을 세계인들에게 바르게 인식시켜야 한다. 새로운 세계사 창조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파트너임을 세계사회에 알려야 한다.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 관계가 증진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발전의 귀한 열매를 얻게 되고, 또한 밝은 세계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과거 접촉이 별로 없었기에, 굴절되었던 불행한 근대

사 때문에, 자국만을 의식하는 폐쇄적 민족주의나 정치적 조작 때문에, 우리나라를 인식하는 세계 각국의 한국관은 유감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바 기대 이하이다. 거의 '무지'에 가까운 예도 있고, '착인'과 '왜곡'으로 얼룩져 있기도 하다.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바라는 바 수준은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우리 민족을 바르게 인식시키는 일은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긴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관 시정(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세계를 현혹시키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각박한 세계사 전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확고히 알리고, 이해 어린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인류의 공동번영에 공헌하려는 우리들의 적극적인 역사추진의 민족적 노력인 것이며, 현대사적 민족 당위의 역무수행인 것이다.

2. 잘못된 한국인식의 유형과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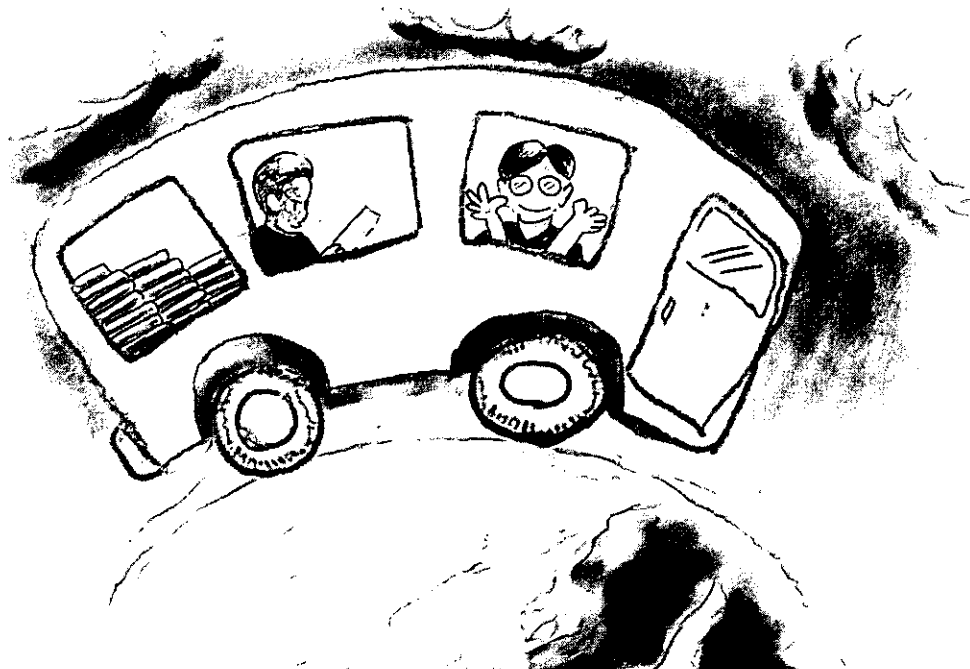
우리는 한국이 미화되고 예찬 받기 위해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국을 과대 포장하여 선전하려는 것도 아니다. 한국·한국인에 대한 세계의 '무지'를 깨우치고, '착인'과 '왜곡'을 바로잡음으로써, 우리와 우리 것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 알려주

는 노력을 펴자는 사업이다.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릇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착인'으로 인해 우리에게 오해를 품게 되고, '왜곡'으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는 위험을 해소시켜, 국제적 우의를 다지고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세계사의 발전에 함께 기여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무지'나 '오해'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서는 한국과 교섭이 거의 없는 나라도 있다. 또 정보과학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화적 변방 민족도 있다. 그들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의도적인 '무지'라기보다 접촉이 별로 없거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나라 또는 지역 사람들에게 잘못된 한국 인식이 심어지기 전에 바른 한국이해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대사는 편비한 세계 변방도, 미개한 후진 민족도 고립된 채로 고고함을 유지하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지 세계체제 속에 끌어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미래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는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전체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인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후진 국가뿐만 아



나라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사람들 중에도 많다. 이들은 올림픽, 한국전쟁, 값싼 상품, 자동차 생산, 줄부행세, 정력제 탐닉 등,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유치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지적으로나 행동적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한국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착인'의 한국관이다. '착인'은 '왜곡'처럼 사실을 의도적으로 그릇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잘못된 인식이다. '착인'은 한국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자료의 부족이나, 잘못된 사실을 담은 자료를 접함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 이것은 대부분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의 부류는 의도적인 '왜곡'이다. 편협한 역사관식을 가지고,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한국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차별·천시·모멸로 한국을 대하며,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내포한 한국관이다. 그들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릇된 한국관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한다. '왜곡'된 한국관은 한국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불행의 저지를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국제감각과 역사관식을 오도함으로써 자국민마저 불행한 미래로 이끄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근원적·조직적·학문적으로 끈질기게 대처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현주소

국가가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전개되었다. 그것은 신생 대한민국을 세계에 홍보하려는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과는 다른 활동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은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왜곡 사건에서 연유한다. 당시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교육부 편수관과 대학 관계자들이 마련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제작관계자에 한국 교육자가 희망하는 몇 가지 문제 문건'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에 전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역사교과

서에 반영된 한국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외무부가 외국 공관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 및 사회 교과서를 수집하고, 그것의 잘못된 한국관계 기술에 대해 시정문안을 만들어 해당 출판사에 보내는 '한국관 시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에는 상대할 국가가 많아 여러 가지 외국어로 된 교과서를 검토하고 시정문안을 만들어 해당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리하여 1982년부터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이 사업을 위임하였다. 지금까지도 이 체제에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이와는 별도로 국정홍보처 해외 홍보원이 중심이 되어 백과사전, 연감을 시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전문학자나 문화인을 위촉하여 해외에 나가 강연회와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사업과는 달리 민간인이나 기업체·재단 등이 자료수집·경제지원 등을 아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무한경쟁 시대로 치닫고 있는 세계사의 조류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바로 알리고 제대로 대접받아 민족적 실리를 확보해야 한다. 즉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인식시키고 미래가 무엇인가를 세계에 바로 알려야 한다.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은 이제 '관'만이 아니라 '민'까지 적극 참여하여 범국가적으로 짜임새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4.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의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은 다분히 임상적이고 일과성적인 것이었다. 이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미미하여 피상적으로 흘렀고, 국민의 무관심 속에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좀더 조직적이고 다각적이어야 하며 민관이 합심해야 한다.

첫째, 추진 주체조직이 외국처럼 제도화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을 바로 알리는 데 유용한 여러 형태의 정보 자료를 신속하게 해외로 공급해야 한다.

셋째,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학 학자를 키우고 그들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해외의 한국학과의 한국학 관계 강좌의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해외 여행 때 진행되는 한국인의 행태를 바로잡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일년에 수 백만 명의 한국

정보의 부족과 부적절한 도서의 유포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책들을 능가할 만한 권위 있는 저작물을 외국어로 만들어 널리 보급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지식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관광객이 가까운 외화를 소비하며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때이다. 이들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의 대표이며 민간외교사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관광객이나 여행자를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요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들에게 해외 여행 수칙을 교양화하는 사전 교육 프로그램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생활 터전을 잡고 활동하고 있는 수백만의 해외 동포를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첨병으로 활용해야 한다. 돈 들여 전문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도 중요하나 동시에 특별한 여행경비 부담 없이 자진 협력할 수 있는 해외 거주, 해외 주류의 우리 동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나 관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일은 때로 외국인이 斜視로 보거나 경원할 수도 있다. 또 관이 하는 일은 활동에 제약 조건이 붙게 되는 특수 사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며 활동할 수 있는 민간 조직이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해외에 주재하는 기업과 상사원은 매우 중요한 요원이 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 관리나 사업추진과도 깊게 관련된 것이다.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성공 요체는 어떠한 자료를 제공해주는가의 자료문제와 어떤 사람이 요원으로 나서 주는가의 인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의 문제는 심각하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읽을거리가 절대로 부족하고 또 손에 넣기도 힘들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왜곡된 내용을 일본인의 저서나 피상적인 전문기에 불과한 천박한 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해독이 담긴 좌파계열의 서적들이 여과 없이 서양어로 출판되어 유포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고 부정적인 한국관을 심어주는 점이다. 일제시대의 식민사관적 한국사 왜곡을 담은 일본인의 서적이거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얼룩진 좌파적 연구물이 널리 유통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

거나 착인·오인으로 흐르는 사례를 흔히 대할 수 있다.

정보의 부족과 부적절한 도서의 유포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책들을 능가할 만한 권위 있는 저작물을 외국어로 만들어 널리 보급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지식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외국에서의 한국학 연구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외국의 한국학 연구자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의 연구성과를 간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외국인의 유려한 외국어 문장으로 꾸며진 한국 관계 서적이 때로는 더 객관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고, 더 호소력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해외의 한국학 학자들을 동원하여 한국을 바로 알리는 노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선전하고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준다고 해서 외국인의 한국관이 정립되고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람직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인식할 때,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참전용사 중에 한국을 잊지 못하고 평화봉사단을 자원하여 다시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중에 열렬한 한국 이해자가 되어 저명한 한국학 학자가 된 경우가 있다. 그들이 귀국하여 모국에서 한국학과를 개설하여 한국을 바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예가 있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학 강좌의 담당교수가 중국학이나 일본학을 전공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그들은 한국학을 주변학으로 대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강의는 저급하던가 착인 내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한국학을 전공한 외국인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후원하는 것도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중요 수단일 것이다.

또한 최신의 정보과학의 힘을 빌어 한국에 관한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하는 과학적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시디롬 등이 그것이다. 국내에서 정보교육의 자료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외국인

에게 또는 외국의 전문기관에게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지인과 현지기관을 활용하면 그들의 정서에 맞는 포맷을 구상하고 그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어 좋다.

5.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기저를 다지자.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근원적 대책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칭 <국제교과서정보센터>를 반관·반민의 법인체로 설립·운영하기를 바란다. 한국을 세계인이 바로 이해하고 인식해 주기 바란다면 핵심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국의 교육 현장에 투입되는 교육내용을 담은 각종 교과서를 문제삼아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도 외국의 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의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 민간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관 시정연구실이나 「한국국제교과서연구소」라는 사설기관이나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와 같은 몇몇 학술조직이 그 일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극소수의 연구위원이, 그것도 다른 업무에도 관계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를 검토하고 시정자료를 작성 송부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거나, 또는 하부조직도 없는 한 개인연구소의 개인 플레이 식의 세미나, 간헐적인 학회의 세미나 활동으로는 세계 각국의 교과서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차제에 정부가 상당액을 출연하고 이에 민간기업들이 찬조 출연하여 재단법인체로 세계교과서를 연구하고 대처하는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할 것을 제창하는 바이다. 소수의 실무 진용을 편성하고 배후에 교과마다 자문교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과서 수집과 연구 결과나 시정 참고자료의 배포 등에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반관·반민의 교과서대책 전담기구를 설립 운영하자는 것이다. 민간기구이어야 하는 까닭은 정치성을 배제한 교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에는 민간기구가 보다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적 안목을 가진 책임자와 그를 자문할 수 있는 각계의 위원들, 그리고 소수의 행정요원과 그 활동을 협찬할 배후의 전문교수집단을 가지는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평소부터 꾸준히 세계 교과서를 검토하고 연구하여 대처하도록 하자. 필요하다면 세계 각국의 교과서 관계자와 전문학자를 초청하여 수준 높은 학문적 세미나를 자주 가지며 그들에게 한국을 직접 보여 주자. 한편 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최신의 자료와 참고할 도서를 외국어로 제작하여 각 국에 배포하는 책임을 지우자.

이제 우리의 한국관 시정사업도 고식적·임상적이고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학문적이며 통상적으로 점잖게 대처하자는 것이다.

「국제교과서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함에는 민간기업도 국가적 차원에서 또 기업발전의 차원에서 상당한 역할을 분담하고 운영에 참여하여 자기 목소리를 보태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한국학 문헌의 해외 홍보를 위하여 한국학자들의 귀한 연구성과와 한국문화 소개책자의 외국어 번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연구물이라도, 귀한 작품이라 하여도 외국학자가 읽지 못한다면 상대에 전달되지 않는다. 상대에게 우리를 바르게 이해 해주기 바랄 수는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굴절된 우리 근대사의 불행으로 말미암아 식민사관적 해독을 담은 일본학자의 한국관계 서적이나 유인물이 널리 세계에 유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의도적인 왜곡의 것이 아니더라도,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에 의해 저작된 한계적 서적이 세계적으로 나돌아 한국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으며 오도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

지금은 외국어로 직접 한국관계의 서적을 발표 저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국인이 늘었다고는 하나 아직 부족함이 많다. 그러기에 새로이 연구되고 발견된 한국학의 성과를 외국인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내외의 유능한 번역인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도 정부나 민간 문화재단이 이런 일에 많은 도움을 주어 왔음이 사실이나, 한국학 관계 서적의 역간과 반포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 추진하여야만 한다. 「한국학문번역원」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산만하게 벌여 온 한국문헌의 번역간행을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함이 어떠할지?

셋째로,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세계의 한국학열에 따라 「한국학과」를 가지거나 「한국연구과정」 또는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는 외국의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대학에서 종래 관계해오던 한국학 교수가 차차 노쇠해지거나 또는 퇴임에 따라 후임교수의 충원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한국학의 교수요원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과거 한국전쟁 때 참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 또는 전후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서 활동한 것이 인연이 되어 한국을 연구하고 한국학자가 된 사람들이 귀국 후 모국에서 한국학과를 창설하고 교수로 봉직하면서 한국학 연구와 후진 양성을 주도해 왔다. 그들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 정년 퇴직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을 젊은 한국학 교수와 새로이 개설되는 한국학과나 강좌를 담당할 교수요원이 절대 부족하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술진흥재단이나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에서 해마다 수 십 명의 한국학 강의를 담당할 한국학자를 해외에 파견하거나 교수요원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선발 파송할 한국인 학자도 인플란이라고 한다. 차제에 한국학의 장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외국인 교수요원을 조속히 키워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재단은 힘을 합하여 해마다 100명 내외의 외국인 한국학 우수 학도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2~3년 동안 같은 수의 포스트·닥터 코스의 한국인 소장학자와 같이 합숙 생활토록 하고, 고급의 한국학 세미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며 국내의 한국학 자료에 접하게 하고 자기 문제를 연구하도록 배려하여 서로의 인간 관계를 다지게 하는 「한국학교수요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지금까지 이런 일을 분산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내 여러 재단의 재력을 하나로 모으고,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포스트·닥터 연구생 지원사업」과 연계시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훌륭한 숙박시설을 활용하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

니라고 생각된다. 세계의 한국학을 활성화시키는 일이 곧 한국의 세계화와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근원적이고 영속적인 대책이 아니겠는가?

끝으로, 이미 해외에 나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해외봉사단」, 그리고 작금에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익요원(군복무를 대행하는 공인사업 투입자)의 해외 파견제도」를 활용하면 한국을 바로 알게 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공익사업을 위해 해외 각국에 나가 활동케 되는 젊은 봉사단원들을 한국 바로 알리기 요원으로 제도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외파전에 앞서 그들을 계획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외로 나갈 때 그들에게 한국에 관한 학문자료와 계몽적인 홍보자료를 주어 보내고, 현지에서 한국을 알리는 활동함에 필요한 과학기제도 휴대케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에 관해 평소 품어오던 생각을 피력해 보았다. 또한 근원적 대책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노력을 활발하게 추진하여도 일부 관광객들의 해외에서의 사치 유람 행위, 부질없는 수준 이하의 일부 유학생의 호화생활이나 외국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접근을 꺼리게 하는 관광객들의 부끄러운 행태가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에게 한국·한국인을 바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에 국민 모두가 한국을 대표한다는, 발령 받지 않는 외교관이라는 자각과 자세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행동하여야만 외국인들의 한국관도 바로잡아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한국의 국력이 세계적으로 자라났을 때 한국·한국인을 보는 세계인의 안목과 평가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런 믿음에서 국민 모두 합심하여 우리나라 발전에 정진하여야 할 것이다. **■**

어느 곳에서든 **국민 모두가 한국을 대표**한다는,

발령 받지 않는 외교관이라는 자각과 자세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행동하여야만 외국인들의 한국관도 바로잡아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상설기구 설립과 새로운 구상

글 /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관시정연구실장, chlee@ns.vedi.re.kr)

세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전인

6~14세 어린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통한 이미지 형성은,

한국사(관)의 이미지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상설기관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1. 글을 시작하면서

오늘날 국제 사회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을 형성하여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류문화가 과거와 같이 편협된 지역성을 벗어나 세계화 내지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국가간의 상호 이해를 더욱더 필요로 하고 있다.

국가간 상호 이해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구촌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는 개선되고 있으나 한반도의 변화상황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실상이 국제 사회에 잘 알려지지 못했거나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국제이해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필수적인 교육이며, 특히 아직 세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전인 6~14세 정도의 어린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실제 이러한 연령의 학생들에게 외국에 대한 역사나 문화, 지리 등의 지식

이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현실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세계사 세계지리 교과서를 통해 외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들에게 한번 가르쳐진 지식은 매우 오랫동안 기초지식으로 남아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은 이 시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 각국 교과서에 서술된 한국 관련 내용의 왜곡, 오류 문제는 단순히 대내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대외적으로 국제 이해 관계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련된 국가 사이에 역사적으로 발생하였던 갖가지 국제 관계 이상으로 현재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은 주변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개인이나 단체가 맡기 보다는 연구의 전문성과 조직의 불변성이 보장되는 상설기구의 지원을 통해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효율적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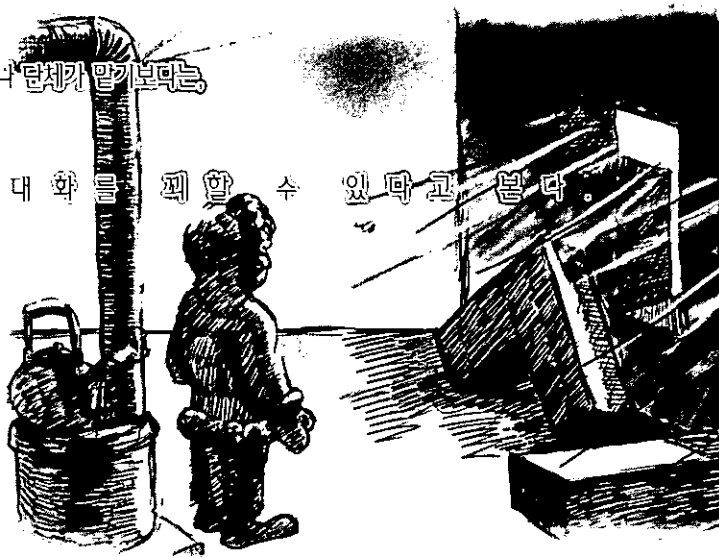
2.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상설기관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가 외국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2년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이후이다. 일본 역사 교과서에 한국 침략과 지배의 사실이 왜곡 기술되었다는 비판이 비등하자 정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외국 교과서의 한국관(觀)을 시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관시정연구실(교과서국제비교연구실)은 지금까지 외국 교과서(역사, 지리, 공민 등)의 한국관련 내용 분석 연구의 중심축을 이루어왔다. 교과서 분석연구의 대상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동남아, 서남아, 동구권 등 제3세계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시정사업도 교과서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일을 뛰어 넘어 교과서 집필자, 교육관계자, 출판사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교과서 개선을 위한 국제학술회담을 열고 문화 유적지와 산업시설을 견학하는 방법으로 확대하였다.

동일한 취지로 민간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업으로서의 역사교육연구회와 그 회원들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일본측과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교과서 뿐만 아니라 역사교육 내지 역사인식 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일본 역사교육연구회와 한일교과서 문제를 공동연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리고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가 미국의 사회과교육 관계자를 초청하여 심포지움을 개최 하였던 것도 이러한 유형의 활동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각 단체의 학술잡지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은 국가에 따라 그 양과 시각에서 천차만별이다. 그것은 주로 상대국이 지리적·역사적·정치적으로 한국과 얼마나 가깝고 먼 것이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점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평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다. 대체로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이 왜곡되는 것은 외국의 교과서 연구자들이 한국학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없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자국의 입장에서 연구, 서술하여 대량으로 배포한 한국학 도서를 2차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의 단순한 오류, 낙후된 자료, 잘못된 2차 자료 인용은 곧 우리의 노력 부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가졌던 잘못된 사실에 대한 시정 요구라는 소극성에서 탈피,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바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기획, 연구, 개발 등 관련기능 전반을 책임지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상설기구와 안정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3. 상설기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지구상에는 200여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자적인 언어와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이 모든 국가의 교과서를 모두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하여 한국에 관한 그릇된 인식이 무작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내버려둘 수도 없는 일이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지고 추진해갈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의 상설기구화가 필요하다. 현대전이 총력전인 것처럼



한국에 관한 이미지 개선 사업도 한국인 모두의 역량이 결집되었을 때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해당 부처와 그 출연 연구기관 또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와 시민들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국관 시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관시정연구실은 부족한 연구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실적을 쌓아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업들은 개별적, 분산적, 단발적으로 진행되어 체계성, 효율성, 지속성이 부족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종래의 사업에서는 외국 교과서의 수집(또는 교과서 관계자의 초청)-한국 관련 내용 분석(또는 국제학술회의 개최)-검토의견 및 개선안의 제시(또는 현지어판 시정자료 개발)-서술 방향의 변화 확인(또는 시정조사 활동을 통한 수정 여부의 확인) 등, 한국관련 내용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 연구 및 시정조사활동을 하여 왔다. 그리하여 이 과정에서 사안별로 엄격하게 체크하고 추적하는 작업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개별 사업의 피드백을 받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검사와 평가해두지 않으면 사업의 성과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한 노하우도 체득할 수 없다.

그런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은 주변 상황이 수시로 바뀌게 되는 개인이나 단체가 맡아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전문성과 조직의 불변성이 보장되는 상설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설립 초기에는 이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적 전문 인력과 최소한의 공간 및 정상운영비가 보장되면 주무기관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외국 교과서의 수집은 해외 공관이나 기업체의 지사망을 통해, 한국관련 내용의 분석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검증은 자문교수단을 통해, 각종 언어의 번역은 각 대학의 관련학과나 해당 국가에 장기 체류자에게 각각 의뢰하면 된다. 주무기관의 15~20명 정도의 전문 인력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종합하는 일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일의 많은 부분은 계약제 근무의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국제적 감각과 해당 국가 언어를 충분히 익히고 돌아온 고크력의 주부들이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이 작업에 참여한다면 얼마든

지 범국가적인 국익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어느 한 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하루 아침에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보수성이 강한 학교교육 그리고 그 기반을 이루고 있는 교과서의 경우에는 더욱 어렵다. 물리적 시간으로 보더라도 대개 한 나라의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교과서는 5~10년의 주기로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자국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국에 관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정보가 없으면 과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외국 교과서의 서술된 한국관련 내용을 개선하는 일은 그 성과는 빈약하면서도 오랜 세월과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사업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외국 교과서가 하루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가 열리면 거의 단골 메뉴로 한국관 시정 문제가 거론된다거나, 신문과 방송도 심심치 않게 외국 교과서의 한국관련 오류, 왜곡 내용의 문제점을 이슈로 내세운다. 이것들은 외국에 한국을 바로 알려야 한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고마운 질책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이에 호응하여 빠른 성과를 올리기 위해 해당 관계자들이 상대국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킨다거나 무리한 행동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가 있다.

한국을 바로 알리는 사업은 상대방이 한국측의 제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그 결과만을 채근하는데, 여기에는 성실한 교육교류와 참을성 있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학문적 성격의 문제를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들다가는 더욱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외국인에게 한국을 바로 알리는 사업은 정치적 선전 활동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과 수준 높은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자, 전문가, 정부관계자, 시민들은 평소부터 외국 교과서와 교육, 그리고 그속에서의 한국 취급 등에 대해 평소 꾸준히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가칭 '외국교과서연구회', '비교역사교육연구회' 등과 같은 연구모임이 활

성화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은 일이다.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도 동호인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외국인과의 심포지움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회의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빈약한 연구활동을 가지고는 세계의 다양한 한국관을 개선해가는데 충분한 학문적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 연구모임이 제대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학, 지리학, 민속학, 사회학 등 한국학이 토대가 되면서 교과교육전문가, 지역연구 전문가들과 상설기관이 연계된다면 이 사업은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학계의 연구모임이 부진한 데는 이러한 활동이 순수 학문연구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자리잡고 있다. 심지어는 국제교류재단, 학술진흥재단 등도 이것은 순수학문이 아니라고 해서 연구비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한국학의 토대위에 교과(역사교육, 지리교육 등)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외국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을 분석하다보면 한국학 연구에서 취약한 부분과 결락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논리 개발과 연계한다면 이것은 한국학 연구 그 자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자체가 순수학문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학문을 창출해낼 가능성도 충분하다. 설사 순수학문에서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국내외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읽힐 수 있는 한국이해자료(Understanding Korea Series)를 연구·개발하는 쪽이 훨씬 더 유용할지 모른다.

외국의 교과서 관계자들에게 한국을 바로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보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한국에 관한 다양한 이해 자료를 해당국가의 언어로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일이 효과적이다. 특히 교과서 집필자나 교육관계자들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어로 만들어진 한국학 관련 문헌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 따라서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한 사업에서는 한국학 전문가, 교과서 관계자들의 정보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문제되는 사항

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공급하는 일을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국학 일반에 대한 정보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안에 대한 정보는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개 사안별로 독자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외국인들이 잘못 이해하기 쉬운 한국관련 내용의 유형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데이터 파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교과서 전문가들에게 한국학 관련 자료를 공급하는 실무적인 일은 이제 상설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만들고 번역하는 일은 자문교수단이나 학술 연구모임이 담당하면 좋다. 이처럼 각자의 능력과 전공에 따라 협업과 분업이 잘 조화를 이루면 어렵게 보였던 이 사업도 차차 본궤도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는 이구동성으로 한국에 직접 와 보거나 한국인과 직접 사귀고 나서부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외국의 한국학 연구자, 교과서 집필자, 교육관계자를 한국에 초청하거나 동학의 한국인들과 인적네트워크를 만들고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교과서 전문가들과의 교류는 여러 학술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들은 평소부터 외국의 교과서와 교육에 대해 연구해 왔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공동으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거나 한국관련 내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사회과 교육연구학회, 한일관계사학회 등의 관련 학회의 지원은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본다.

4. 독일과 일본은 이미 40여년 전에 상설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에서 설립되는 상설기관은 이러한 국내의 학술단체와 교과서 관련 외국의 전문가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주선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개인별 혹은 연구소, 학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전문가와의 교류 실적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합분석·평가하는 작업은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고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노하우도 축적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의 수립도 불가능하다.

독일은 1954년 게오르그 에케르트 국제교과서 연구소 (<http://www.gei.de>)를 설립해 관련 주 정부 보조 및 각종 기금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연구소는 교과서의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독일 교과서에 제시된 역사적·정치적·지리적 사실을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건의하며 교과서의 검토와 수정을 위해서는 독일과 외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문을 만들어 시정해 나가고 있다.

일본도 1958년 이와 유사한 국제교육정보센터 (<http://www.isei.or.jp>)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센터는 외무성 산하의 재단 법인으로 설립돼 있으며, 이곳에서 재정의 반을 지원 받으면서 민간기업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센터는 국제교육정보, 교과서, 교육자료의 조사·연구와 함께 외국의 잘못된 일본 관련 내용을 분석,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펴는 동시에 외국의 학교를 비롯한 출판사 신문사 등의 일본 연구관계자들에게 일본의 문화·사회·산업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교육자 및 교육기관이 일본의 교육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출판하며 외국 학자를 초빙하거나 외국으로 전문가를 파견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세계 속에 한국을 바로 알리는 사업은 정부나 유관단체에서만 추진할 일은 아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할 일이다. 세계 속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관련단체는 국민들의 참여 의지를 북돋우고 이를 조직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5.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바로알리기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동참을 이끌어내는 방법의 하나로서 외국의 교과서와 문헌에 실려있는 한국 관련 내용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전시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일도 생각해 볼만하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세계 속에 우리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처지에 맞는 방법으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컴퓨터에 능한 사람은 인터넷이나 시디롬에 실려 있는 한국관련 내용을 뽑아낼 것이고, 해당국가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은 이를 번역하고 시정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이미 이러한 작업을 헌신적으로 해낸만한 고급인력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현재 맹렬히 활동하고 있는 반크(<http://www.prkorea.com>)와 같은 자원봉사단체는 좋은 예이다. 앞에서 제안한 상설기관과 연구단체는 이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고 지원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대 세계는 국가간·민족간의 공존공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간·민족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것이다.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에서도 이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이미지를 한국에 바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교과서에 서술된 외국관련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올바르게 수정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상호간에 열린 자세를 보여줄 때 참다운 공존공영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외국 교과서에 국한하여 한국관련 내용을 분석·연구하였던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백과사전, 연감, 해외전시물, 인터넷 등에 나타나는 한국관련 오류 내용을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는 연구사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외국 문헌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오류를 범하기 쉬운 내용들을 시정할 수 있는 한국이해자료집을 개발하여 세계 각국에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교과서 관계자(한국학 교수, 교육과정 개발자, 교과서 집필자, 사회과 교사 등)를 초청, 교과서 개선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한국관련 오류 내용 시정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연수를 통해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스터디 투어를 실시함으로써 교과서 수정,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할 때 반영토록 한다.

이제 “한국바로알리기(<http://koreana.kedi.re.kr>)”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한국에 대해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을 한글 및 영어로 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인터넷상의 왜곡된 한국 관련 내용 찾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한국바로알리기사업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인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국의 역사·지리·문화관련 학술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탑재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었다. 나아가 외국의 교과서 출판사, 집필자, 사회과 교사들에게 '한국 탐구', 교수·학습을 위한 멀티미디어자료(CD-ROM,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등)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한국과 교류가 있는 외국의 교과서 출판사, 집필자, 편집자를 방문하여, 교육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외국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 시정활동을 전개하며, 외국에서의 교과서 관련 학술회나 전시회 등에 한국바로알리기센터 관계자를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외국교과서 도서관을 운영하여 외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지리·사회 교과서, 부교재, 참고서, 백과사전 등의 교육자료와 특히, 외국의 한국관련 교과서, 부교재, 교육자료, 백과사전, CD 등을 수집하여 도서관에 비치하고 오류, 왜곡 및 시정사례들을 D/B화해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교과서 연구자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함으로써 교과서 비교연구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6. 글을 맺으면서

세계화 시대를 맞아 한국(한국인, 한국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제반 분야에서 대외협력과 교

류를 증진시키는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필요하다. 본 사업은 해당 국가와의 외교상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학문적인 토대에 입각한 중·장기적인 대처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상설적인 연구조직(교과서국제비교연구실, 국제교육연구실, 국제협력실 등)과 15~20명 정도의 전문인력, 비상임 전문위원 50명 정도를 초빙해서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검증을 통한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3차에 걸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을 겪으면서도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상설기구 설립이 무산된다면,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에 외국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분석에 대한 기초 연구, 체계적인 자료수집, 한국이해자료집 개발, 정기적인 교육교류를 통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교과서 시정조사활동 등 적극적인 왜곡 대응 전략이 거의 불가능해지리라고 본다.

금년도 후반부에 드러나고 내년초에 검정 합격 여부가 판명될 일본 고등학교 일본사, 세계사 교과서의 검정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학술적인 대응 논리 개발이 어려워지며, 다른 나라의 교과서상의 한국관련 왜곡내용의 수정은 요원해진다.

이제 외국 교과서뿐만 아니라 백과사전, 문헌, 인터넷의 오류 왜곡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왜곡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대응책을 개발할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새롭게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오류나 왜곡된 내용을 지적하고 시정해 달라는 소극적인 요구보다는 설득력 있는 논리나 자료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한국을 바로 알릴 수 있는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 나아가 교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부, 재외공관, 역사학자, 지리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이들 전공 교육전문가, 교과서 관계자(편집자, 집필자 등), 교수, 교사, 학생 등을 연계하여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

‘한국바로알리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인 대처를 위하여,

상설적인 연구조직과 전문인력·비상임 전문위원을 확보하여

이 사 업 을 활 성 화 시 켜 야 한 다 .

역사 교과서 왜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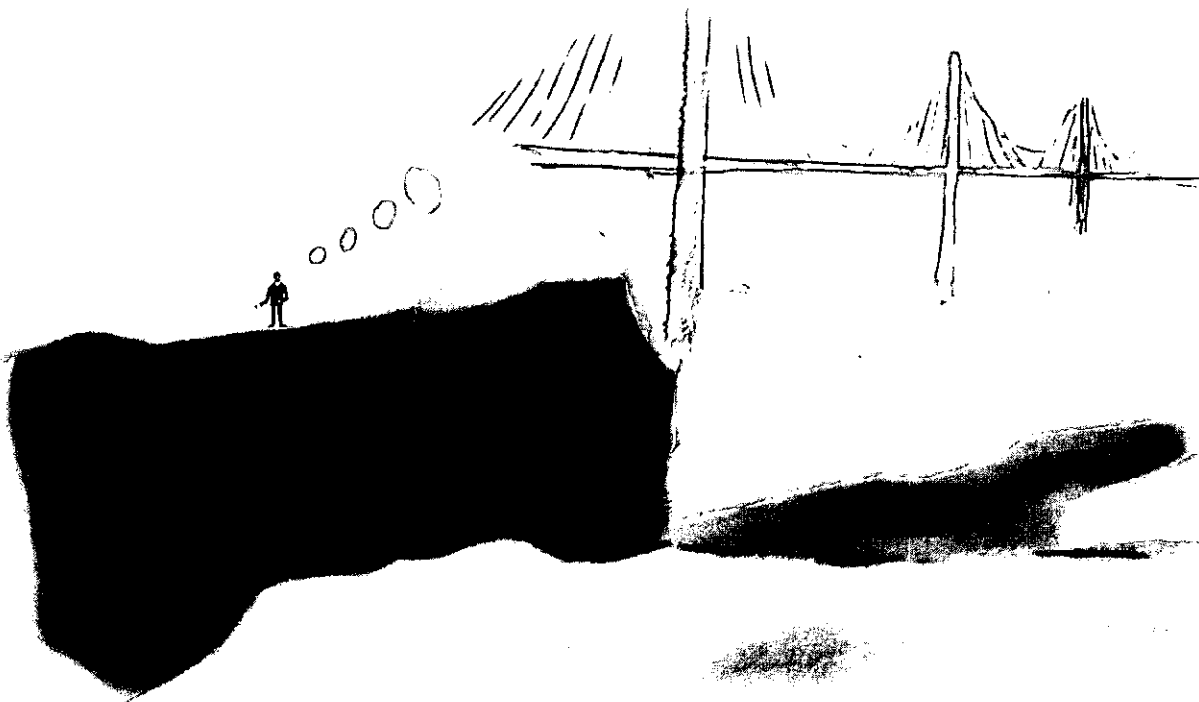
글 / 구난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jupiter@moe.go.kr)

I. 왜 역사교과서가 문제인가?

올 상반기 우리사회를 들끓게 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각계의 다양한 왜곡 시정 노력이 추진되어 왔다. 다행스럽게도 0.1% 미만의 낮은 채택률로 격앙된 목소리는 낮아졌지

만 이를 계기로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역사 교과서를 면밀히 점검하여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체제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는 증배되고 있다.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료 선택과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의 학문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역사사건에 대해 이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단언하



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이런 점에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각국은 제각기 나름의 교육목적과 교과서 발행 시스템 속에서 역사교과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자신과 다른 것대로 그것을 평가하여 수정을 요구할 때 그것을 수용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요즘과 같이 지식에 대한 기본인식이 변화해 나가고 학생들이 교과서 이외에도 다양한 텍스트를 접할 수 있는 시기에 있어서 역사교과서의 효용성과 역할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 속에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러한 여러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역사교과서를 문제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우리정부가 지난 5월 일본정부에 수정요구한 자료의 서문에 요약되어 있다. 간략한 내용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역사교육은

첫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국제적인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역사 교육은 학생들에게 역사적 자료를 수집·분석·해석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해 주고,

셋째, 역사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실과 증거를 존중하는 습관과 인간 행위의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역사교과서 내용을 문제삼는 것은 우리역사의 밝은 면만을 강조하여 미화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국에 대한 민족감정에 의한 것도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2세들에게 비판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함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길러줌으로써 국제협력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교과서 문제는 단순히 특정국가와 해당국의 역사를 잘못 서술하고 있는 상대국간의 대립이나 민족간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자국사 중심의 편협한 역사를 고집하여 인류의 공존과 평화우호를 파괴하려는 집단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통해 선린우호와 국제협력을 이룩해 나가고자 하는 집단간의 대립의 산물이며, 따라서 그 해결은 후자간의 연대 속에서

전자의 입장을 불식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일본 역사교과서 채택시 우리나라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불채택 운동과 일본의 양심적 지성이 보여 준 불채택 운동은 이를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글은 이러한 기본 인식 속에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다양한 재조건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근원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역사교과서 왜곡의 유형

지난 1982년 이후부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관시정연구실에서 추진해 온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성과를 통해 보면 역사교과서 왜곡은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번째는 전근대 시기부터 오랫동안 교류와 접촉을 행해왔던 국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왜곡이다. 대개는 양국이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자국사를 미화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역사를 폄하·왜곡하는 저급한 수준에서부터 각기 다른 사료가 남아 역사해석이 상반되는 경우, 동일 사료를 두고 서로 다른 역사인식과 다른 해석을 행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두번째는 우리나라와는 직접적인 역사적 교류가 없었거나 적었던 제3국의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왜곡으로, 그 원인은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자료 부족 탓에 서술이 소략한 것으로 일괄하기에는 다른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자료가 부족한 틈새에 일본에서 제작한 역사 홍보물 등이 파고들어 왜곡 기술을 일조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III.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조건들

그렇다면 왜곡은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며 해결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를 살펴봄으로써 대응책 마련의 전거로 삼고자 한다.

1. 교과서 발행 체제

교과서 문제발생시 즉각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는 교과서 발행체제의 상이성이다.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민간에서 발행하되

올바른 역사교육은 국제적인 상호이해와 우호협력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수집/분석/해석하여 문제능력을 함양해주고 사실과 증거를 존중하는 습관과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로부터 검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으며 심사 과정없이 자유롭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주요국가의 교과서 발행 체제를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각국의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국명	초등학교		중등학교	
	발행체제	발행자	발행체제	발행자
한국	국정+검정	교육부 위탁기관	초등과 동일(국사) 검정(세계사)	
미국	인정	주마다 다름	인정	주마다 다름
일본	검정	민간	검정	민간
중국	국정+검정	국가 또는 민간	국정+검정	국가 또는 민간
러시아	인정	국가 또는 민간	인정	국가 또는 민간
말레이시아	국정		국정	
인도네시아	국정		검정	민간
태국	국정		국정	

이러한 발행체제상의 차이는 교과서에 대한 기본입장 파도 관련이 깊다. 교과서 발행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교과서에 기술되는 내용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으로서의 권위를 발휘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교과서 발행의 자율권이 넓어질수록 교과서의 서술은 절대적 객관적 지식으로서의 권위보다는 정보 활용과 탐구력 제고를 위한 자료로서의 기능이 중시된다.

그렇다고 해서 후자의 경우로 갈수록 교과서 문제 발생 빈도나 그 파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전자의 경우 국가가 직접 관여하고 교과서 서술에 신중을 기하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단순한 반면,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층단계를 통해 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검정이라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는 객관적 사실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발행자측에서 이를 수용하여 고치기까지 절차가 번거로우며, 객관적 사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시비를 가리기가 어렵다. 그것이 역사해석과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와 연

결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2. 교과서 내용의 수용·전달 체계의 단단계화

교과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은 바로 교과서 내용의 전달과 수용이 중층적 구조로 단단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 내용만을 문제삼는다면 이 부분에서의 서술은 그다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에서 지적하였다시피 우리가 다른나라의 역사교과서를 문제로 삼는 궁극적 원인은 학생들에게 내면화되는 역사상과 그것을 토대로 한 역사인식관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내면화되는 다양한 역사상과 인식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포괄적 시스템을 논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우리 역사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가. 교육과정 마련(정책입안자) ▶▷ 일단 교과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통해 가르쳐야 할 내용과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수립되는데 대개 국가차원에서 교육과정 등의 형태로 고시된다. 국가마다 교육과정이 미치는 범위나 효력은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과 같은 경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없이 아예 교사에게 일임되는 경우도 있다.

이 단계에서 제시하는 주요내용은 인류의 공동선인 국제이해, 우호협력, 평화증진 등으로 내용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목표가 굴절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나. 교과서 발행(집필자, 편집자) ▶▷ 위의 과정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은 교과서 발행과정을 통해 구현된다. 특히 교육과정은 추상적인 서술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교과서 집필자에 의해 마련된다. 이로 인해 때때로는 교과서 기술 내용이 교육과정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배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을 마련

한 사람과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의 텍스트(교육과정)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과서 내용의 교육과정 위배 여부가 명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번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발생시 문부성측은 "일부 교과서집필자의 역사인식관이 우리 정부의 공식 견해와는 다르다". "검정 제도상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등으로 답한 바, 이는 바로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수정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다.

왜곡된 내용이 수록될 수 있는 요인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역사연구 단계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고 역사적 기록을 오용 또는 문서를 위조하여 잘못된 역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는 특정사실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강조함으로써 발생될 수도 있다. 둘째는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일정한 서술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연구 성과만을 오려내어 수록하거나 특정사건이나 기억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왜곡, 생략에 의한 왜곡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한정된 지면을 통해 교과서를 제작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술량과 비중을 결정하는 데는 집필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교과서 발행과정에서의 재창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집필자의 의도에 의해 작성된 내용은 다시 편집자의 편집에 의해 전달내용의 가감, 글자체 컬러도수 지면 배치에 의해 재편집된다. 때에 따라서는 집필자가 강조하고자 한 것과 전혀 상반된 역사상과 역사인식이 독자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컨대 본문에서는 관련 기술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지도 등에서 전달하고 싶은 부분을 돋보이는 컬러로 제시하는 경우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더욱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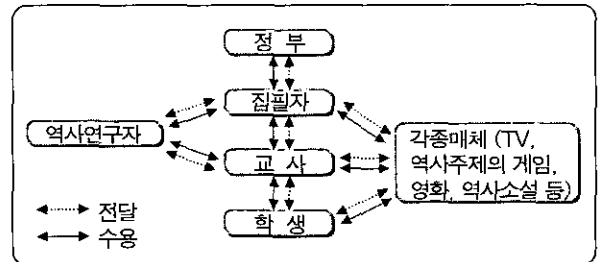
다. 교과서 내용의 정라-전달(교사) ▶▷ 교육과정과 교과서보다 학생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매개체는 교사이다. 교사는 교과서를 수업을 위한 보조교재로 삼아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형성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을 축으로 한

다양한 활동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바른 역사인식관이 내재화된 교사들이 자국의 잘못된 교과서 내용에 대해 먼저 이를 개혁해 나가는 풍토가 마련될 수 있다면 굳이 타국이 문제제기하는 등의 번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라. 교과서 내용의 수용, 역사관 형성(학생) ▶▷ 이제 최종적으로 학생들은 교사의 계획에 따라 학습활동을 수행하면서 해당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나름의 역사상을 형성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 할지라도 자신이 의도한 바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시킬 수는 없다. 학습자의 조건과 학습환경에 의해 얼마든지 다양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학습환경이나 매체들 속에 잘못된 역사인식관을 형성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역사교육에 있어서도 되돌아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표2〉 교과서 내용 전달 체계의 종층 구조



3.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텍스트에 의한 영향력

앞서 언급한 바대로 학생들이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는 반드시 수업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개별적으로 겪었던 다양한 경험에 의해 상호작용을 주고 받는다.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결정자로부터 교과서 집필자, 교과서 편집자, 교사 등에 이르기까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정보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문자중심의 텍스트보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텍스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또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발휘한다.

다양한 텍스트에 의해 파생될 수 있는 잘못된 영향력 중 가장 우려되는 바는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

해 행해지는 텍스트의 과장이다. 사극물이나 기획 시리즈물은 생생한 재연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과거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주지만 그로 인한 잘못된 역사상을 심어줄 우려도 많다. 한때 모방송국의 사극 드라마 중 '이 부분은 작가에 의해 재구성된 부분'이라는 설명이 첨가된 적이 있다. 언뜻 보아 매우 신중한 배려라고 생각되지만 뒤집어 보면 더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사실과 다르다는 부연설명이 없는 대부분의 장면과 대사 하나하나의 과거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믿게 만들 위험이 있다. 특히 영웅이나 특정인물 중심의 극화는 그 위험성이 높다. 이는 역사소설물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학생들이 즐기는 역사를 소재로 한 컴퓨터 게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IV. 다차원적 대응방안 강구

이제 앞장의 검토를 토대로 각각의 단계에 걸맞은 이론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응방안은 그 실천적 행위가 중요하므로, 세부실천을 추진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항목을 분류하였으며 각 항목별 내용은 각 주체들이 단계별로 역사 교과서 제작과 배포 및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과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각 단계별 주체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활동대상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일이 분리하여 서술하는 것을 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양자의 관계를 혼용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가. 정부 ▶▷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라 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과서 문제에 관한 모든 일을 정부가 나서서 주관할 수도 없으며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교과서를 둘러싸고 다양한 환경과 시스템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필요할 경우 관련국의 정부당국과 직접 교섭을 추진해야 하며, 각국의 교과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긴밀히 제공하고 적절한 단계 조절과 시정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후술하겠지만 특히 역사연구자나 교과서 집필자 또는 교사들에 의한 국가간 인적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국외용의 다양한 홍보자료를 개발하는 등의 역할은 현 시점에서 역점을 두어 개발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 생각한

다. 아울러 동일한 역할수행을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는 우리나라의 교과서 질을 제고하는 일이다. 다른 나라의 교과서와 벤치마킹하여 우리 교과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모범을 보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내 국수주의적 역사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정을 담당해야 하며, 만약 타국으로부터 수정을 요구받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겸허히 포용해야 할 것이다.

나. 역사연구자 ▶▷ 역사연구자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역사의 왜곡이나 오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일이다. 역사의 특성상 자연과학과 같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부 역사가는 자신의 독단적인 역사해석을 객관이라는 이름하에 포장하기 위해 사료를 왜곡하거나 생략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역사가는 주관과 객관과의 경계를 가능한한 진실하게 밝혀야 한다. 즉 주관적인 부분을 객관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자체를 주관적인 것으로 드러내어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은 역사가 개인의 연구영역에 빠져서는 안된다. 관련분야 연구자와의 특히 다른 국가의 연구자와의 상호연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주관성(intersubjectivity 명백한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해 인정되는 주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제와 연구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그 연구성과가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역사가가 노력해야 할 또 하나의 역할은 역사연구의 대중화이다. 앞서 지적했다시피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논리나 역사를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다양한 매체들을 무시하거나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연구 성과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일본의 홍보자료 등에 의해 잘못 알려진 외국인의 역사인식을 전환시키는 데도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내셔널리즘화를 제어하는 역할을

지적하고자 한다. 교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피해체험과 가해체험이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개념을 준거로 나아가거나 또 이에 맞대응하려는 흐름을 제어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공동 연구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바로 역사연구자의 몫이라 하겠다.

다. 교과서 집필자 ▶▷ 교과서 집필자가 가장 유념할 사항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는 일이다. 동시에 다른나라의 교과서 집필자에 대해서도 자국내 규범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 연구성과에 대한 천착과 균형감각을 유지함으로써 신화나 신빙성없는 사료에 근거한 내셔널리즘화된 역사 기술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건이 성숙된다면 {유럽의 역사} 등과 같이 관련국과 공동 교과서를 집필한다면 교과서 문제 해결의 큰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8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한·일 공동 역사교재 개발 작업에 큰 기대를 걸어 본다.

라. 교사 ▶▷ 교사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른 어느 주체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발간·배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모두에서 제기한 선린우호와 국제협력을 이룩해 나가고자 하는 집단간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교사간 교류는 더없이 중요하다. 다양한 수업실천 사례를 축적하고 이의 좋은 성과들을 공유하고, 나아가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장애들을 함께 제어해 나가는 것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 의미있고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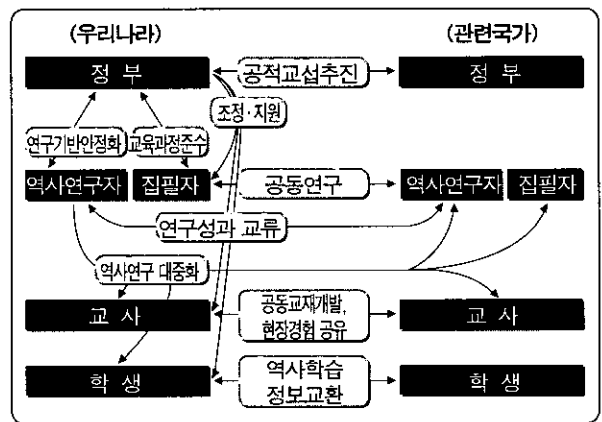
직접적 대면 접촉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상의 다양한 교류 공간을 지원하고 확보함으로써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 학생 ▶▷ 흔히 학생들은 역사과목을 암기과목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접하는 지식을 비판없이 수용하고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역사 해석을 수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개방적 태도를 함양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역

사관련 멀티미디어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는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자료 개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이 접한 역사관련 텍스트를 확산·보급하고 자신이 체득한 역사인식관을 토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간의 의사소통체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N세대에 걸맞게 직접적 대면접촉뿐만 아니라 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체제를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소통 체계가 원활해 진다면 부차적으로 다른 나라의 교과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일도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표3〉 역사교과서 왜곡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V. 맺음말

역사란 현재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다시 쓰여질 수 있다. 따라서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 절대 진리의 지식이라는 기존관념을 벗어나는 것이 교과서 문제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역사 교과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소극적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는 적극적 차원에 있다. 따라서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통해 선린우호와 국제협력을 이룩해 나가고자 하는 집단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역사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결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부디 지난 일본교과서 왜곡 시정 및 불채택 운동에 보여 준 국민적 관심과 열의가 역사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저변 활동의 구심이 되기를 바란다. **교육**

“세계의 교육”



- ▶ **미국** 김영주(시카고 통신원) 66
저소득층을 위한 조기 교육 프로그램
- 헤드 스타트(Head Start)
- ▶ **독일** 장은희(베를린 통신원) 70
전쟁을 두려워하는 어린이들
- ▶ **영국** 하태욱(런던 통신원) 74
교원부족 현상
- ▶ **프랑스** 이부련(한국교육개발원 해외자문위원) 78
프랑스 교육 소식 1. 2. 3.
- ▶ **러시아** 김형욱(모스크바 통신원) 86
러시아와 러시아 교육 : 개황
- ▶ **싱가포르**
박보배(국제교육진흥원 유학연수지원과 교육행정사무관) 90
싱가포르의 대학운영제도 :
국립싱가포르대학교의 대학평가 사례
- ▶ **중국** 강영민(북경사범대학 국제비교교육연구소) 94
21세기를 지향한 교육과정시행안



저소득층을 위한 조기 교육 프로그램 - 헤드 스타트(Head Start)

글/김영주 (시카고 통신원, ykim30@uic.edu)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조기 헤드 스타트(Early Head Start)는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부모들의 육아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이로움을 주고 있다.”

“근래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는 잘 짜여진 우수한 유아 교육 프로그램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아동들에게 긍정적 교육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효과는 아동의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말들은 미국에서 널리 읽히는 교육 주간지인 Education Week가 연방 정부의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실시해오고 있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각각 지난 1월과 5월 그 효과를 높이 평가하며 보도한 머리기사이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은 가정이 빈곤한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갓 출생한 아이부터 학교에 입

학하기 전 단계에 있는 아동에 이르기까지 매년 팔십만 명을 웃도는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

☞ 유아기의 중요성과 가정 환경이 미치는 영향

아동 발달 전문가들은 유아기에 아이의 신체적, 두뇌성장의 상당부분이 이루어지며,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하는 시기라고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을 누구도 강조해왔다. 한 인간이 태어나 어린 시절 동안 갖게 되는 물리적, 지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 어떠한지 이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그 주춧돌이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유아, 유치 아이들이 왕성하게 성장·발달을 이루는 이 시기에 환경의 결핍을 겪을 경우 이는 곧 그 결과를 드러낸다고 한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유아기에 몸의 각 부분을 발달시키기 위한 놀이나 사교를 촉진하는 활동이 적은 아이들

은 유치원에 들어서면서 이미 다른 아이들에 비해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발달 상태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학교에 갓 입학한 아동들 사이에서도 유치원 시절의 교육적·발달적 경험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학습 준비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빈약한 자극은 아동이 가진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기회를 차단할 뿐 아니라, 아동 자신이 가진 능력 보다 낮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고 한다.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이미 아동들 사이에 학습 격차가 크게 있으며, 이 격차는 고등학교에 이르도록 계속된다.”

위는 News Week지가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의 생활 수준이 아동의 학업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기사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News Week지가 말하고 있듯이, 더 심각한 문제는 가정의 여건상 주어지지 못하여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쳐진 발달과 학습 상태는 아동이 성장해 가는 내내 걸림돌로 작용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아동기 때의 다른 출발은 청소년이 되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국 교육 성과에 있어 다른 결론에 이르도록 한다는 말이다.

유아기나 유치 아동기가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이런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자녀들에게 유익한 교육 여건을 충분히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성장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생활 형편은 아이들의 식생활 습관과 이에 따르는 영양 상태나 신체적 건강 상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들이 누리는 문화 생활과도 많은 관련을 갖게 된다. 쉽게 납득할 수 있듯이, 가정의 빈곤은 아이들의 고르지 못한 영양 상태를 초래하기도 하고, 생계를 이어가기에 바쁜 탓에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이나 중산층 가정 자녀들이 쉽게 접하는 여러 사회적·문화적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아이의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정의 생활 형편은 미국 아동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는 탁아·보육 시설과 오늘날 초등학교 교육만큼

「헤드 스타트(Head Start)란...」

헤드 스타트(Head Start)는 집안 형편이 곤란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회인으로 자라는데 빈곤한 가정 환경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교육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출생에서 다섯 살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삶의 초창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잠재적 능력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회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도로 1965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처음 창설될 때에는 여름에만 8주 동안 실시되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일년 내내 실시하는 연중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으며 저소득층의 공공 초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정부가 규정하는 빈곤층 부류 기준에 속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보조와 여러 부가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무료 식사를 통한 기본적인 영양 공급 뿐 아니라 건강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유아원과 유치원과 같은 시설을 운영하며, 대상 아동들에게 초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들의 신체적·인지적 발달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더 나아가,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는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부모가 가정에서 바람직한 형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 내에서 아동에게 보다 나은 성장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헤드 스타트 관계자들은 앞에 언급된 여러 활동들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자녀들에 비해 취약한 언어, 인지 영역에 발달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학교 준비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먼저, 3세에서 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헤드 스타트와 0세에서 3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 헤드 스타트(Early Head Start)를 들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헤드 스타트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 역시 이 시기의 아동들만이 받을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95년부터는 초기 헤드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갓 출생한 아이에서

3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기존의 헤드 스타트를 시작하는 세 살이면 발달의 여러 측면에서 중산층이나 부유층 아이들과 벌어진 차이가 크며, 이 차를 좁히기에 이미 때가 늦다는 지적과 함께,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초기 헤드 스타트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십대(Teenage) 임신부들에게 육아와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헤드 스타트는 그밖에도 노동자층 이민 자녀들을 위한 이주자 헤드 스타트, 인디언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렇게 여러 종류로 분류하는 것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혹은 가정의 배경에 따라 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어떤 활동들을 교육 과정에 포함할 것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빈곤층 아동을 위한 '헤드 스타트(Head Start)'는 유아기의 중요성을 헤아려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그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갖지 못한자, 스스로를 돕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회와 정부가 '돕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나 보편화된 유치원 교육의 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에서 다섯 살 이하의 아이를 탁아·보육 시설이나 유치원에 맡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달 평균 약 325달러로, 가정 수입의 약 10퍼센트에 이른다고 한다. 수입이 적은 가정에서 이러한 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저소득층의 가정에서는 값싼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탁아 현황에 대한 보고서들에 따르면 자녀의 조기 교육 기관에 투자하는 비용은 가정의 생활 소득과 비례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자녀들이 다니게 되는 유아 교육 기관의 대부분이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부유층 자녀가 다니는 고가의 유아 교육 기관에 비해 낮은 보육 서비스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즉,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빈약한 가정 환경에 던진 격으로, 조기 교육 시설에 있어서도 중산층이나 부유층 자녀에 비해 뒤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 빈곤층 아동을 위하여 내미는 손길, 헤드 스타트(Head Start)
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유

아기 중요성을 헤아리고, 교육이나 정부의 보조를 통해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데 있어 그 질을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에서 생겨난 프로그램이 바로 헤드 스타트(Head Start)이다. 건강과 교육의 측면에서 공공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열악한 가정환경이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과, 사회·문화적 발달에 미치는 불이익을 줄이자는 것이다. 헤드 스타트를 통해 아이들은 유아 교육 분야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과 함께 지능 발달을 촉진하는 놀이나 낱말 습득, 수의 개념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영양 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한다.

더 나아가, 아동의 성장 과정과 자녀 양육 기술을 비롯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는 아이가 태어나 어떠한 인간으로 성장하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 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라는 간과할 수 없는 사실 때문이다. 아이는 일상 생활 속에서 부모와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세상에 대한 이치를 배우게 되고 인성과 행동 습관의 틀을 형성하게 된다. 또 부모가 아이와 어떤 식으로 대화하고

아이의 지적 사고를 자극하는 환경을 어느 정도 갖게 해 주느냐는 학습의 바탕을 이루는 언어력, 인지력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헤드 스타트를 통해 부모들이 아이 양육을 잘 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은 아동-부모 센터를 운영하며 유아원 혹은 유치원 교육을 하는 등 센터에서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가정 활동이 중심이 되어 실시되는 프로그램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의 두 가지를 적절히 혼용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아동 개인 뿐 아니라 아동 발달에 직접적 영향력이 있는 가정에서의 육아 수준까지 관여하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을 하는 헤드 스타트가 이끌어내는 효과는 주목할 만 하다. 지난 1월에 헤드 스타트를 운영하는 정부 기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연구를 조사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헤드 스타트 교육은 아이들의 인지적 발달에 실질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연구가들은 두 살 된 아동들에게 인지 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헤드 스타트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인지 수준이 이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헤드 스타트에서 실시하는 보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언어와 행동 발달에 있어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아동의 부모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헤드 스타트 교육을 받으면서 아동의 어휘력이 상당히 늘었으며, 다소 복잡한 문장도 곧잘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헤드 스타트 교육을 받지 않는 다른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공격적 행동을 하거나 비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횡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연구는 헤드 스타트에 참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십여 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 헤드 스타트가 아동의 발달에 가져오는 이로운 효과들은 유아기나 학교에 입학한 초등학교 저학년에 머물지 않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된 후 까지도 지속된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그 교육적 영향력은 학교에 입학한 후의 학업 성취도는 물론이고 사회성과 적응력, 그리고 행동 성향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 미치고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헤드 스타트와 관련한 연구물들은 이 프로그램이 발휘하는 공헌은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에서 뿐 아니라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은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의 발달과 육아에 관하여 보다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준다거나 노래를 불러 주는 등 교육적

인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컸으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고를 유도하는 방식의 대화법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이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따뜻한 애정 표현을 하거나 칭찬을 자주 하는 등 아이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기에 적합한 행동을 많이 보여주었으며,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횡수가 더 적었다고 한다. 그리고 헤드 스타트에 참여하는 가정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책을 구비해 주거나, 장난감도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을 사주는 등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환경 역시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이의 교육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배려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헤드 스타트가 부모 교육에 가져오는 이러한 이점들은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에 근간이 되는 부모들의 자녀 교육 방식과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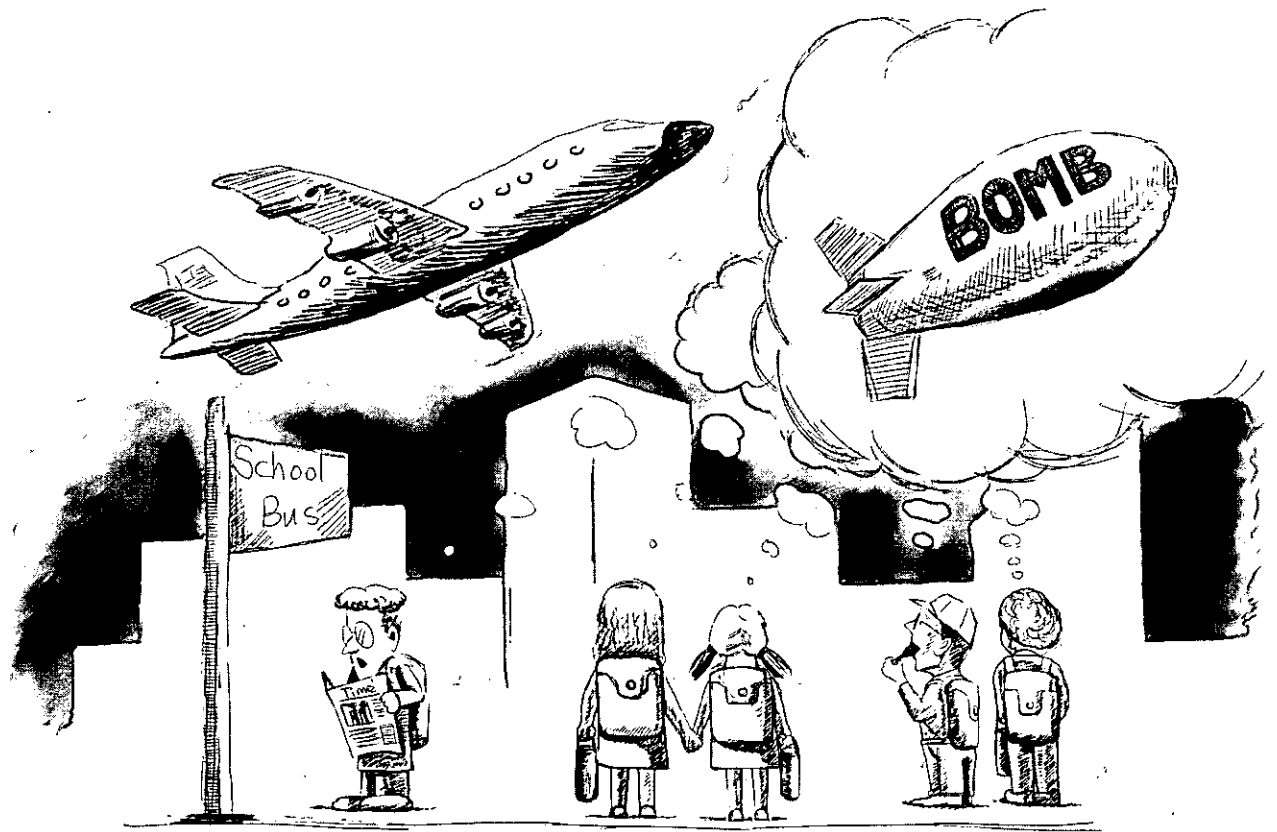
가난한 아동을 위해 생겨난 헤드 스타트가 앞에 열거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재정적인 투자를 들 수 있는데, 헤드 스타트에 들어가는 비용의 80퍼센트인 6조 달러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

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속적인 인력 개발과 재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교육과정과 실천을 세밀히 점검해 오고 있다. 또 각 센터가 양질의 보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도 조언 창구를 열어두는 등 우수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상으로 미국에서 조기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오고 있는 헤드 스타트와 이의 성과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들에 대해 소개해 보았다. 미국인들은 헤드 스타트가 인간이 잠재성을 발현하고 사회인으로 커나가는 데 있어 유아기는 그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하지만, 헤드 스타트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유아기의 중요성을 알고 체계적인 조기 유아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 있지 않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그 무엇보다 가치있는 이유는 이를 통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배움의 길과 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갖지 못한 자, 스스로를 돕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회와 정부가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보조해 준다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

전쟁을 두려워하는 어린이들

글 / 장은희 (베를린 통신원, eun-hee.jang@student.hu-berlin.de)



☞ 독일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미국이 겪은 참담한 테러 공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뉴욕 맨해튼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은 독일인들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세계는 영망진창이 되었다. 모든 것이 그 전과 달라졌다. 그 날 이후로 어디에서나 가장 큰 화제는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이었고, 그 점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독일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슬퍼하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더 놀라고 불안해하며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린이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이해할 수

➤ 'No revenge please-No World War III (제발 보복공격을 하지 말라: 3차 세계 대전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미국을 향한 포스터 문구는 독일인들이 뉴욕 맨하탄에서 일어난 테러공격을 두려워 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없는 많은 장면들을 보았다. 건물로 돌진하는 비행기들과 불타는 건물, 그리고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이러한 장면들은 아마도 오래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차츰 이 사건이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잔인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기에 그렇게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우리의 고층 건물과 비행기는 과연 안전한가? 아니면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왜 많은 미국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도 이러한 물음에 몰두한다. 이러한 극한 상황을 예기치 못한 부모들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아이들과 학생들을 진정시켜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다. 어떤 교사는 이 사건을 수업에서 다루지 않으려 하고, 또 다른 교사는 학생들과 같이 묵념의 시간이나 추도 행진을 준비한다.

독일 아이들은 미국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하면 교사들과 부모들이 가장 분별 있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한가지 확실한 것은 독일의 학교들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독일에서는 수 천명의 학생들이 추도 행진에 참석했다**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이 있는 이후 베를린에 있는 많은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정상 수업 대신에 미국의 사건에 대해 토론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김나지움에 다니는 19세의 다니엘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 학교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께서 미국대사관 앞에 꽃을 놓거나 테러 사건에 대한 토론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학생들은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에 참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라는 세계 대전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많이 불안해했다. 미국을 향해 호소하는 한 포스터에서 "No revenge please-No World War III(제발 보복공격을 하지 말라-3차 세계

대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글귀를 읽을 수 있다.

테러 공격 다음날 베를린의 미국 대사관 앞에는 출입이 엄격히 차단되었는데도 온 종일 수 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경찰들은 수많은 꽃을 받아 미국 대사관 입구에 놓아주었다. 40명으로 구성된 베를린 소방대 대표단도 직접 참석해 큰 화환을 내려놓았다.

사흘 후 금요일에는 전 독일의 교회들이 조종을 올렸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테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수 천 명의 학생들이 추도 행진에 참가했고, 6일 후인 9월 17일, 월요일에도 여러 도시에서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에 반대하는 자발적인 시위가 있었다. 하노버에는 11,000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고, 튀닝이라는 소도시에서는 600명의 학생들, 도르트문트 시내 중심가의 평화 광장에서는 400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참석했으며 초, 화환, 꽃을 내려놓았다. 많은 학생들은 미국이 반격을 한다면 엄청난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교사들에게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초미의 관심 주제를 수업시간에 다루는 것이 올바른 교육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학교에서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선생님들은 어린이들과 이러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특히 아이들의 감정과 느낌을 그림과 편지로 표현하여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려 한다.

각 주의 교육부 장관들은 각 학교의 수업 시간에 테러 공격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호소한다. 교사들은 이러한 테러 행위가 특히 학생들에게 큰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의 감정을 토로하게 하고 테러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들은 '바로 아이들에게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학교의 중요한 역할이다'고 말한다.

하지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니더작센 주, 함부르크 주, 작센 주, 라인란드-팔츠 주 그리고 메클렌부르크 주에서는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방침을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헤센 주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전의 주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제를 다룬다고 한다. 예를 들면 테러 행위, 이슬람교 그리고 근동 지역의 충돌 등을 수업시간에 집중적으로 분석하거

나 인간 관계와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다고 한다.

☞ 심리학자들의 의견: 아이들이 가지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야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교사들에게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초미의 관심 주제를 수업시간에 다루는 것이 올바른 교육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그들은 교과 과정을 급작스럽게 바꿀 필요는 없지만 평화를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10살이 넘는 아이들에게 사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대중 매체 시대에는 어차피 아이들에게 이 사건을 숨긴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독일 어린이 보호 연맹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아이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감정, 느낌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감성적인 토론에만 멈추게 되면 안 되고 더 나아가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성적인 태도라는 것은 테러 행위의 배경이

나 정치적인 관계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테러, 전쟁, 범죄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복수 감정을 극복하고 심리적인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함부르크의 나버(Dieter Naber) 교수는 "자신의 감정을 의식하도록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나 토론하고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각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특히 부모들이 세상이 무사하다고 속일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무엇보다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누구도 우리 가족을 해칠 수 없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거야' 라는 표현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하지만 심리학자 헬게(Helge Halbensteiner)의 말에 따르면 '끊임없이 두려움에 대해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각 개인은 스스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야만 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거나 자발성 훈련을 통해 도움을 받지만,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즐기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 세계의 어린이날

지난 2001년 9월 20일은 세계의

어린이날이었다. 그런데 또 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국을 겨냥한 테러 때문에,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유엔의 '어린이 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어린이 유엔 정상 회담의 관심사는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의 생존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일이었다. 1990년의 첫 '세계 어린이 정상회담'에 이어 세계적으로 어린이 사망 수를 줄이고, 영양 실조를 극복하며,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을 악용과 혹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비록 어린이 정상 회담은 개최되지 않았지만 독일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언론사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의 사건이 아이들의 중심적인 주제였다.

앨리나(Alina, 9): "미국의 고층 건물이 무너진 날 우리 학교에는 정상 수업이 없었습니다. 수학 시간에도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원래보다 훨씬 더 일찍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슬펐기 때문에 별로 즐거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줄리아노(Giuliano, 10):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설탕을 뿌린 것처럼 달라 보였어요. 가장 나빴던 것은 손수건을 흔들다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본느(Yvonne, 9): "우리는 세

계 대전이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레베카(Rebecca, 11): "나는 정치인들이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우리 엄마랑 싸웠을 때 다시 화해하거든요. 폭력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악순환이죠. 나는 매일 뉴스를 지켜봐요. 무슨 일이 계속 이어지는지 알아야 하나까요."

라우라(Laura, 12) 그리고 카타리나(Katharina, 12): "우리는 촛불을 켜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왜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나요? 아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가족을 도와주겠다고 다짐을 받았을 거예요."

☞ 미국 테러 공격 이후의 베를린의 대학들

아직 대학 내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한 동요는 없지만, 대학마다 공포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대학들은 학생들과 대학 직원들에게 시위와 추도에 참여하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미국 세계무역센터의 테러 공격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독일 대학까지 언급되면서, 대학에서 외국 학생들의 연구, 수업, 친교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외국 학생들에 대한 '마녀 사냥'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욕 테러 공격의 용의자들이 함부르크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언론의

분위기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10월 중순까지는 방학이기 때문에 상황은 아직 조용하다. 그러나 전투적인 이슬람교도들은 인터넷을 통해 더 주의 깊게 관찰될 것이다. 베를린의 대학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제안도 있었지만, "열린 정보정책이 우리 사회에서는 삶에서의 공기와 다름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베를린에는 아랍인들이 총 800명이 등록되어 있다. "국적에 따라 종교적,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하는 것, 더구나 이 아랍인들을 테러리즘과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훔볼트 대학의 외국학생처가 경고한다. 함부르크 대학 뿐 아니라 베를린 소재 대학의 학생들도 테러그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에 대해 대학 담당자들과 학생들은 놀라움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는 현재 43,000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 그중 11%는 외국학생들이다.

"많은 아랍 출신 학생들이 압박을 받을까 두렵다"는 것이 자유대학의 걱정이다. 자유 대학만이 아니라 베를린에 있는 대학 전체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로 표현할 수 있다. ☞

교원부족 현상

글 / 하태욱 (런던 통신원, tae.ha@blueyonder.co.uk)

2001~2002학년
도 신학기, 캠브리지에서 서쪽으로 얼마 멀지 않은 소도시 세인트 네오츠에 자리잡은 전교생 1,100명의 비교적 큰 종합중등학교 어널프 커뮤니티 스쿨 (Ernulf Community School) 7학년 반에서 벌어지는 풍경.

“가방은 바닥에 내려놓고, 책은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자 여러분, 조용히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저를 Mr. A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제 이름은 발음하기가 아주 어려우니까요. 저는 아주 멀리서 왔어요. 어딘지 맞춰볼 사람?” 모두들 손을 든다. “미국이요!” “하지만 미국 어디? 일리노이주의 큰 도시인데...” “플로리다요!” “LA요” 아이들은 신이 났다. “시카고예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출신지를 알려주고는 출석을 부른다.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잘못 발음하면 고쳐주기 바래요”. 이어 수업은 시작되었다.



이 시간은 통합 인문학 시간. 역사, 지리, 그리고 종교교과의 통합교과목이다. 선생님은 칠판에 “휴머니티 (Humanities)”라고 적고 말한다. “인간(Human)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겠지요. 이 두 단어를 묶었을 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서로 다른 문화들이 함께 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영국의 역사만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종교도 마찬가지구요.”

오늘은 이 시카고 출신 미국인 교

사 로버트 아라조키 (Robert Alajoki)가 영국에 와서 맞는 첫 수업 날이다. 이런 외국인 교사들의 수업은 더 이상 영국인들에게 생소한 풍경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국제 교사 교환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쯤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는 영국의 심각한 교사부족 현상

으로 이번 학년도에 수입된 3,000여명의 외국인 용병 교사(?) 중 한 사람일 뿐이다. 지난 해 한 교사 알선기관의 주선으로 일군의 교장들이 호주와 뉴질랜드에 가서 교사모집을 해 온 것을 두고 언론들은 ‘캥거루 작전’이라는 비아냥섞인 별칭을 붙여준 바 있다.

작년 학기가 시작되던 때 언론에서 10년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떠들어대던 교사부족 현상은 정부의 갖가지 당근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채 다시 새 학년을 맞았다. 교원양성과정 (PGCE: Postgraduate Certificate

▶ 일반교사의 몇 배에 해당되는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슈퍼 티처(Super Teacher)제도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당근책. 그러나 이와같은 제도도 이미 땅에 떨어진 교사직종에 대한 인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of Education)에 등록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비면제와 생활비 보조, 특히 극심한 부족현상을 보이는 수학, 과학, 외국어, 기술 교과에 지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추가 보조금 'golden hello', 일반교사의 몇 배에 해당되는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슈퍼 티처(Super Teacher)제도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당근책. 최근에는 집값이 비싼 런던 및 영국 남부지방 근무자에 대해 정부가 주택 구입비를 무이자 대출 및 저리 융자해주는 획기적인 지원책 까지 마련되었지만 이미 땅에 떨어진 교사직종에 대한 인기를 끌어 올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상황은 계속해서 절망적이다. 교원양성과정 등록 학생의 중도 이탈율이 5%로 증가한 가운데 남아 있는 학생들의 40%가 교직으로 들어 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입 교사들의 40%는 3년 이내로 교직을 떠날 것이라고 하고, 이들을 포함한 반 이상이 5년 이내에 교직을 떠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와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지 못한다는 유명한 교육적 명제를 감안할 때, 실로 크게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교원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얼마전까지 신바람나게 달려온 호경기를 내세우는 견해도 있다. 교원수급은 일반적으로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불경기에는 교직의 공급과잉 현상이, 호경기에는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정보통신 관련 업종에서는 학교 정보통신 과목 교사의 월급에 몇 배에 해당하는 보수를 제안하고 있으니, 젊은 대졸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그 동안 내놓은 해결책들은 이런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봉급 및 보조금 인상이나 성과급제도(Performance Related Payment) 도입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해 현실인식의 안일함을 질타하고 있다. 그들은 교원부족 현상의 조짐이 영국이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1990년대 초반에서부터 이미 발견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번 교원부족 사태는 단순히 박봉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문제점들

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교원부족 현상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교원부족 사태는 1990년대 말, 정부가 연금을 줄이려고 하자 조기 퇴직 열풍이 불게 됨으로써 경험 많은 교사들이 대거 교단을 떠나면서 더 심각해졌다. 한편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던 보수당 정부의 중앙집권적 개혁과 이를 이어받은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정책들은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현저하게 악화시켰다. 학급당 인원수 축소, 수리력과 문해력에 대한 강조, 국정 교과과정에 대한 강조 및 잦은 교과 내용 변동, 성과급 제도 등은 교사의 부담을 늘리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 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우리가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들을 성취하도록 강요 받고 있으며 이는 교사에게 커다란 부담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3년간의 교사생활을 접고 교단을 떠나기로 한 중등학교 사회학 교사 애너벨 로즈(Annabelle Rose)의 경우는 교사들이 교직을 버리게 되는 이유를 집약적으로 설명해준다. 그녀는 1998년 교원양성

▶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교사들의 융통성과 창조력이 학교를 내부로부터 개혁시킬 수 있는 특성인 동시에 젊은 교사지망생들을 학교로 이끄는 동인이 된다는 것이다.

5

과정을 마치고 우리나라 수능준비 과정(고2~3)에 해당할 식스폼 콜리지(Sixth-form College)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초임교사시절 그녀는 열정에 불탔지만 현실은 상당히 힘들었다. 수업 하나를 준비하는 데만도 두 시간씩 걸려서 저녁과 주말에 집에서 일도 해야만 했으며, 담임으로서 아이들의 생활과 진학문제를 상담해야 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일관성 없는 업무량, 예를 들어 11월에서 2월 사이에는 평소의 수업시간표 이외에도 공개 수업, 학부모 면담, 과제물 평가가 몰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한편 정부의 장려로 인한 고등교육 지원자 증가로 학급당 인원수가 1.5배 가량 늘어난 것도 학생들의 작문과 숙제를 일일이 평가해야 하는 교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2년이 지나자 그녀는 자신이 맡고 있던 각 과목들에 대한 수업안과 교재들이 모두 마련되어 앞으로의 수업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2000년을 맞아 새로운 교육과정과 내용을 도입했고 그녀는 모든 수업을 이에 맞춰 새로 짜야하는 상황에 다달았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과목 그 자체에 대한 학습보다는 평가와 시험성적

에 민감해져서 교사로서는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었다. 주변 친구들과의 비교도 그녀를 위축되게 했다. 그녀가 받는 월급은 지난 3년동안 별반 오르지 않은 반면 초임때부터 그녀보다 많던 친구들의 월급은 매년 큰 폭으로 올랐다. 그녀는 물가 비싸기로 악명높은 런던에 살면서 자신이 받는 박봉의 반을 월세로 쏟아부어야 했다. 정부는 최근 신규교사 채용과 경험있는 교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당근책들을 내놓았지만 이는 교원양성과정 지원자나 경력 7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녀같은 경력 3년의 교사는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은 결국 경력 3~5년 된 교원들이 대부분 3년 이내에 교직을 떠나겠다고 밝히게 된 원인이 되었다.

다시 처음의 미국인 교사 로버트 아라조키의 예로 돌아가 보자. 해외의 인력 수입은 교사부족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의 경우는 전형적으로 젊은 미국인의 도전정신이 영국의 암울한 교육현실과 만나 만들어 낸 작품이었다. 대학 마지막 학기 비오는 날 캠퍼스에서 우연히 영국 교사 알선회사 직원과 만난 그는 영국에서 일할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마지막

시험이 끝나면 근처의 중등학교에서 일할 계획이었지만 한번도 북미 밖을 벗어나 본적이 없었던 그는 '에라, 일년쯤이면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려고...' 하는 심정으로 영국행을 결심했고, 신학기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영국에 도착했다. 그가 가르쳐야 할 캠브리지 부근의 세인트 네오츠로 가기 전 런던을 관광하고 싶었던 그는 며칠동안 런던에 머무른 후 목요일에 있었던 교사 알선회사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상황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알선회사가 마련해주기로 했던, 그와 함께 영국에 온 미국-캐나다 출신 교사 몇 명이 함께 살게 될 집은 집주인의 태도 돌변으로 다른 영국인 가족에게 넘어가 있었고, 그들은 알선회사 직원과 함께 근처를 헤매다가 임시로 여관에 짐을 풀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그는 은행구좌를 개설하고, 핸드폰을 마련하는데 하루를 다 소비했고 토요일에서야 그가 다음주부터 일하게 될 학교를 찾았다. 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떠나고 싶지만 하던 생각을 다잡기는 했지만, 영국의 교육 시스템은 그에게 생소하기만 하다. 그가 배정 받은 것은 주당 18시간, 사회학 수능(A-level)과목은 그런 대로 해볼 만 할 듯 싶었고 7학년과 10학년의 통합

인문학 과목은 생소했지만 어찌하던 될 듯 싶었다. 하지만 국가 일반 직업 자격증 과정 (GNVQ: 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의 '건강과 사회보장' 과목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도무지 이 과목이 뭔지 감이 잡히질 않아요" 하지만 그는 최대한 빨리 이해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이 학교의 교장 조 파작 (Joe Pajak)에게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것조차 호시일 뿐이다. 그저 로버트 아라조키를 비롯한 외국인 교사들이 성실해 보인다는 것에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가 학교가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몇 년 전. 그동안 그는 보조교사들, 시간강사들, 전직 교사들을 활용하여 그럭저럭 학교를 끌고 왔다. 물론 교육의 질 같은 것은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고 학교 학생들의 성취도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왔다. 지난해부터 그런 땀질 처방으로는 부족한 교사 수를 메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근처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학교 교장들과 함께 신문에 교사모집 광고를 냈다. 그러나 수준 높은 교사는커녕 자격을 제대로 갖춘 교사조차 구하는데 실패하자, 그는 결국 교사 알선회사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로버트 아라조키가 일하는 날짜 수대로 알선회사는 일당 136파운드 (약 27만원)를 받는다. 로버트 아라

조키가 알선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하루에 90파운드(약 18만원), 결국 과 특별휴가 없이 일하면 하루에 95파운드씩 받을 수 있다. 나머지 40~45파운드는 알선회사의 몫. 물론 이것저것 용병교사들 뒤통수까지 리를 하느라 얼마간 돈이 든다고 하지만, 실로 엄청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이 회사는 십여년 전 교사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을 내다본 교사 몇 사람이 학교를 그만두고 설립한 것이다. 이 회사 임원들은 일년의 대부분을 세계를 날아다니며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일차적 대상은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영어권 국가들. 유럽국가들에서도 종종 모집해오지만 각종 서류작업에 서툰 동유럽 출신들은 꺼리는 편이라고 한다.

교장도 알선회사도 그리고 용병 교사 자신들도, 해외파 교사들이 일년이상 영국에서 가르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6개월만에 때려치우는 일없이 한 학년만 채워주기를 기도할 뿐이다. 다음해에도 교장은 알선회사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봉급 인상이나 각종 보너스 제공 같은 당근책은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교원부족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교사들의 박탈감이다. 스스로 교육내용과 교재를 결정하고 교안을 짤 수 있는 자율권을 가졌던 교사들이 '성취도 향상'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내몰려 단순 지식

전달 노무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융통성과 창조력을 발휘 할 수 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경직되고 중앙 통제적인 곳으로 바뀌면서 교사들은 일하는 재미 속에 묻어두었던 보수 문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고, 교직을 떠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연구기관이 내놓은 다음의 제안은 한국의 교육계에서도 깊이 새겨야 할 충고가 될 듯하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교사들의 융통성과 창조력이 학교를 내부로부터 개혁시킬 수 있는 특성인 동시에 젊은 교사지방생들을 학교로 이끄는 동인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영국의 교사들도 국정교육과정이나 성취도에 대한 강조가 필연적인 대세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교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자신들의 스타일로 변형시켜 아이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표준치의 강압적이던 장학검열은 현재의 적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제안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변화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내부에서 스스로의 해법을 찾아내야만 하며, 이는 교사들에게도 주인의식과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것만이 교사라는 직종이 다시금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는 길이다. (Matthew Home의 글 요약) **교육**

프랑스 교육 소식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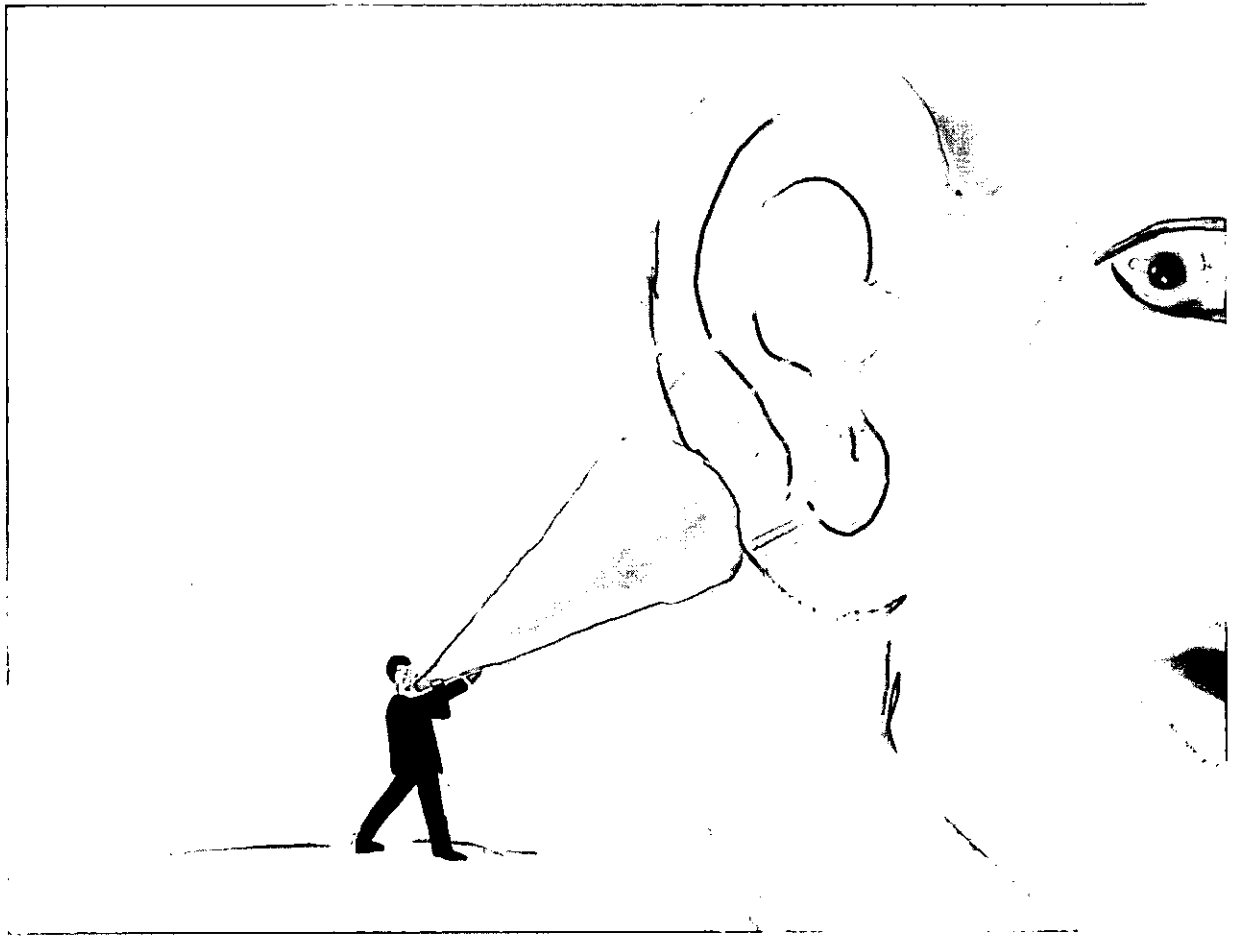
글 / 이부련 (한국교육개발원 해외자문위원, bouriane.lee@noos.fr)

☞ 1. 프랑스 교육부의 교원수급난

“비상! 교육부장관, 교원 급구” 이게 웬 코미디 같은 문구인가 싶지만 이것은 코미디가 아니라 프랑스 교육부가 처한 현실을 이곳 일간지가

대서특필한 기사의 한 제목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머지않아 있을 전후 1세대 교원들의 무더기 은퇴와 젊은 세대들의 교직경시 및 기피현상이 맞물려 사상 최대의 교원수급난

에 봉착해 있다. 이에 대비하여 프랑스 교육부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써 왔으나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궁여지책 끝에 프랑스 교육부 당국은 이번에 새로



▶ 전후 세대 교원들의 무더기 은퇴와 젊은 세대들의 교직 경시·기피 현상으로, 사상최대의 교원 수급난에 처한 프랑스 교육부는 2001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교원수급 5개년 계획'이라는 비상책을 세워 추진키로 했다.

운 묘안을 내었다. 작고 랑 현 교육부 장관이 젊은 세대들을 교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TV방송 광고와 캠페인에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2001년 5월말에 일차 방영되고 오는 9월에 다시 전국적으로 전파될 이 TV방송 광고는 향후 2년간 간헐적으로 지속될 예정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현재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앞으로 상황을 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담하고는 있지만 일국의 교육부 장관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구인광고와 캠페인에 직접 나설 정도라면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음을 누구라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프랑스는 향후 10년간 거의 절반에 가까운 현직 중·고·대학 교사·교수들이 은퇴로 교직을 떠나게 된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진 대중교육의 확산과 함께 대거 기용되었던 전후의 교육주체 1세대들인데 오늘날 이들이 한꺼번에 은퇴 연령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프랑스 교육계는 바야흐로 전후세대가 물러가고 신세대들이 '그 바톤을 물려 받게되는 무

더기 세대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와 상황을 앞두고 오늘날의 젊은 프랑스 세대들은 교직에 대한 매력을 별로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기피하는 경향까지 완연해 긴급 비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프랑스는 앞으로 교사 채용난을 심각하게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가 처해있는 이러한 상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1년부터 매년 3만 5천명의 교사가 은퇴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현직 초등교사 37만 2,000명중의 1만 6,500명, 중등교사 47만 1,000명중의 1만 7,500명, 대학교 정교수 1만 7,000명중의 절반, 3만 명의 부교수 중 약 1/4이 매년 교직을 떠나게 된다는 소리이다. 이들 모두 1970~80년대 대중교육의 확산과 함께 기용된 첫 세대들이다. 프랑스 교원들의 현재 연령별 피라미드에서 50대에 이르는 교원수의 비율이 학교급별 총 교원 수에 비해 초등이 41.5%, 중등이 43%에 달하고 대학은 학문영역에 따라 51~54%에 이르고 있다. 초등교사들은 대부분 55세에 이르러 조기은퇴를 하는 경향이 있어

세대교체 문제가 더 시급한 실정이다. 중등에서는 국어, 역사, 지리 등의 일반과목 교원들의 절반에 이르는 수가 50세 이상이며 과학, 수학, 생물, 외국어과는 약 1/3의 교사가 이 연대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직업기술교육과 교사들은 다소 젊은 편이나 기계공학, 시민공학, 첨단기술 과목 교원들은 정수의 1/3이 역시 50세 이상의 연령층이다. 이들이 떠난 후의 공백을 메우려면 현재의 대졸 3명 중 1명은 교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교직을 기피하고 외면하는 경향을 보여 앞으로의 교원수급 현실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프랑스 교육부는 2001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교원수급 5개년 계획이라는 비상책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부 장관의 방송 캠페인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써, 능변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젊은 세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교직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대학 입학지원자들에게 교직의 사명감을 불러일으켜서 이들을 교직으로 끌어들이는 목적 아

▶ 교원부족현상의 주된 이유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원들의 사명감'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프랑스 사회와 학교 폭력, 무질서가 난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관리와 통제가 점점 어려워졌고 많은 젊은 교사들이 그러한 시대환경적인 상황앞에서 개인적인 무능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에 따라 교직에서의 보람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래 이루어진 것이다. 작고 랑 교육부장관은 교원수급 5개년 계획을 통해 2005년까지 총 16만 5천명의 교원을 신규 임용할 계획이다(초등 7만 5천명, 중등 8만 8천명). 그리하여 2001년도부터 초등교원 임용이 9%(1만 1천 석) 증가하고 중등은 10%(1만 5천 석) 증가한다. 2003년도까지 이러한 증가율은 10~15% 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은 향후 3년간 매년 3,600명의 교원을 신규 임용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고용정책의 일환으로 97년부터 유한계약으로 기용된 7만 5,000명의 교육보조사들을 이러한 교원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여 정식발령을 내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 양성교육과 교직연수 등의 점수를 가산하여 올해 안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있다. 현재 프랑스의 초등과 중등 교원선발 경쟁률은 최고 9대1, 최소 6대1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98년의 경쟁률 11대1에 비해 상당히 하락된 숫자로서 그 이유는 90년대에 들어 교원선발 경쟁률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경쟁률은 과목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역사지리과, 정보학과, 미술과 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스페인어, 수학 및 물리, 화학은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낮은 경쟁률은 직업기술교육분야에서 더욱 심각하여 4대1 또는 5대1의 경쟁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지원자들의 자격, 수준미달로 인해 공고된 채용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교원부족 현상은 몇 년 전부터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온 각 대학들의 학과별 입학정원수와도 관련이 있다. 오늘날의 프랑스 대학들은 국어국문과,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의 인문계 학과로 진출하는 입학생수가 계속 감소되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이러한 특정과목의 정원 감소현상이 눈에 드러날 정도로 심각하여 지역 교육장학관들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진로 지도할 때 이러한 학과들의 지원을 특별히 장려하도록 하라는 특별공문을 발송하기까지 했다.

현재 교육부를 비롯한 프랑스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교원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혁신적인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그중 가장 새로운 안은 '교직희망자 사전채용'으로서 교직을 희망하는 대학 입학생들을 사전 선발해서 2년간의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거나 또는 8만 프랑(한화 약 1천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안이 적용되면 오는 2001년 9월 신 학년부터 직업기술 계열에 입학하는 대학생 200여 명이 일차적으로 그 혜택을 보게 된다. 이외에도 작고 랑 현 교육부장관이 내놓은 기발한 안은 대학지원자들이 전공학과를 선택해서 등록하기 한 달 전인 9월초부터 각 학과목별 교원공석을 미리 공고한다는 것이다. 낚싯대에 지렁이를 매달고 물고기를 쫓아들이듯이 공석을 미리 보여주면서 대학 입학생들을 교직으로 유인하겠다는 기발한 발상이다. 작고 랑 교육부장관의 낚시가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릴지는 두고 볼 일이다.

프랑스 대학생들 사이에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이처럼 바닥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현재 프랑스 교육계가 처하고 있는 열악한 교직환경과 그에 따른 교원들의 사명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프랑스 사회와 학교 폭력, 무질서가 난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관리와 통제가 점점 어려워졌고 많은 젊은 교사들이 그러한 시대환경적인 상황앞에서 개인적인 무능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에 따라 교직에서의 보람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신규 임용된 교사들 중 많은 수가 초기 교직생활 1~2년차를 넘기지 못하고 이직을 위해 사임한다고 한다. 한편 타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현재의 교원급여문제는 교직 비선호의 주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교육부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프랑스 교사들의 급여수준은 일반 국가행정요원의 60%, 일반 사기업체 간부의 24%~45%에 불과하여 숫자상으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교그룹의 실제노동시간을 비교해볼 때 사기업체 간부들의 실제 노동시간은 교사들의 2배에 이르고 있어 노동시간에 비례한 급여는 아그레제 자격을 취득한 고등학교의 교사들과 대학교수들이 이러한 사기업체 간부보다 오히려 더 많음이 드러났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잦고 랑 교육부장관은 교사수급난이 예상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라도 그로 인한 현직 교사들의 급여인상 문제는 논의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직 교사들도 급여인상보다는 근무환경의 개선을 더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신세대들이 교직을 선호하지 않고 외면하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21세기 사회전반의 흐름이 깔려있다.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현대사회의 경제구조에서 젊은 세대들은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공공 서비스직으로의 진출에 그다지 이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프랑스 한 나라만이 겪는 현상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현대화와 첨단기술이 가져다주는 눈부실 정도의 물질적인 성과에 매혹되어 점점 물질만능, 기술만능주의로 내닫게 되면서 보다 검허하게 꾸준한 노력을 요하거나 봉사와 희생을 요하는 분야를 도외시하게 된 데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대학에서 인류의 바탕 학문으로 꼽히는 인문사회과학과 순수과학이 점점 등한시되고 대신에 첨단기술, 상경무역 또는 응용과학 계열이 터져나가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교원수급난은 대졸이 넘쳐나 갈곳이 없는 우리의 현재 형편으로서는 무슨 코미디물에서나 있을 것 같은 꿈같은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한 꺼풀 들쳐 그 원인을 짚어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순수과학의 바탕 없이는 응용과학이 있을 수 없듯이 인류의 생활에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토대 없이는 인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첨단기술공학이 있을 수가 없다.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과 교육계획은 항상 백년지 대계의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록 개인차원에서는 한 발치 앞만 보고 소위 “당장 잘 팔리는 학과”, “남들이 알아주는 학과”, “오늘날의 붐을 타는 학과” 등

에 별뿔처럼 모인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교육을 이끌어 가는 교육주체 차원에서는 기존해 있는 모든 학문들의 양적, 질적인 균형을 잘 조정하여 학문영역의 부조화와 불균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미래의 결핍이나 곤궁을 예방할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원시안적인 교육정책으로 시대적인 붐과 모드를 타는 교육에서 벗어나 한 인간의 향후 삶의 질을 높이고 그로 인해 국가의 근본과 역량을 탄탄히 해주는 기초교육을 항상 중요시해야 한다. 언어교육에 비유해서 말하자면 우선 잘 팔리고 편리하다고 해서 모두들 다른 외국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영어만 배우면 된다는 편의주의 안일한 사고나 지나친 실용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남이 안 하는 언어, 또는 희귀한 언어 등을 의사소통 도구라는 당장의 실용가치는 없더라도 한 문화의 자산으로서 또는 개인의 인격과 지식을 함양한다는 다른 목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물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를 거쳐 21세기는 인류가 다시 정신주의 (spiritualism)로 회귀하는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프랑스의 대작가이자 전 수상인 앙드레 말로의 말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 2 대입 수능고사와 인터넷 과외학습

프랑스는 오늘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간 2001년도 프랑스 대입 수능고사인 “BAC” 고사가 전

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프랑스나 한국이나 대학수능시험에 대한 열기는 마찬가지로여서 고사를 며칠 앞둔 프랑스 고교 수험생들은 막바지 시험준비로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프랑스에서 수험생들의 인기를 얻고있는 인터넷 과외수업 현황과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초조와 긴장에 빠져 있는 수험생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한 마지막 복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프랑스의 여러 멀티미디어 회사, 대형 교과서 출판사들과 자원봉사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인터넷상에 다양한 과외 학습 사이트를 개설했다. 그 중 몇몇 사이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www.lettres.net 이 사이트는 수능시험 전기 국어시험 대비 복습용 사이트로서 독해와 작문 학습을 위주로 한다. 학습방법은 교육 과정에 명시된 텍스트들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텍스트를 읽고 요점 파악하기 등의 학습방법을 지도한다. 또한 수능고사 기출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제시, 분석하면서 실전에 대비한 학습을 시키고 있다.

2. www.philagora.net 이것은 철학학습의 on line 사이트이다. 100여 편의 전년도 기출문제와 학생들의 답안과 그에 대한 채점 등을 분석하면서 철학시험에서 주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의 정

의와 작문을 위한 구도잡기방법, 독해방법 등에 대해 가르친다. 43가지의 철학적 개념을 어떠한 구도로 어떻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가르친다. 한편 주제별로 인용할 수 있는 명언과 명구 리스트를 작성,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기출된 철학시험 문제를 보면 "한 손바닥은 어떤 소리를 내겠는가?" 하는 초현실주의적인 주제의 질문이 있다. 고3학생들이 이러한 막연한 주제로부터 시작하여 우주의 진리를 철학적으로 논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프랑스 고교생들은 모두 레변론자들이나 갖음직한 능변술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다행히도 철학은 정답이 없는 학문이므로 학생들의 답안 내용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어떠한 눈으로 사물과 현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방법적인 서술면이 중요한 채점기준이 된다.

3. www.sosphilo.com 한편 대형 교과서 출판사 Hatier에서 무상 철학 복습사이트를 연중 개설해 수험자들을 돕고 있다. 교육과정에 명시된 작품들을 매월 몇 편씩 학습 시키고 있다. 필요한 경우 개인지도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도교사의 이름과 전공, 능숙한 주제, 작가, 작품 등을 명시하고 있다.

4. www.annabac.com Hatier



는 3번 사이트 외에도 수능시험에 대비한 무상과외학습을 일년내내 실시하고 있다. 전과목에 걸쳐 매월 새로운 학습주제를 선정, 복습 또는 예습으로 수험생들을 훈련시킨다. 학습방법은 수험생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작문을 해서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면 출판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현직교사들이 개별적으로 교정 지도한다. 보통 6월 중순에 있는 수능고사를 두어 달 앞둔 4월 중순부터 학습리듬이 보다 강화되어 월 단위의 새 주제학습을 주 단위로 당기고 매주 월요일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수요일은 교정 지도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전부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진다.

5. www.cionautes.org 역사지리과 복습 사이트로서 현직교사들이 자원봉사로 많이 참여하므로 질적인 보장이 우수한 사이트이다. 학습방법은 주로 문답형식의 연습활

▶ 프랑스의 멀티미디어 회사나 대형교과서 출판사, 자원봉사단, 그리고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실행하는 질 높은 인터넷 무상과외(또는 적은 경비)는 한국의 교육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등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수준을 최종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별한 내용의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때는 특별교사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질문하면 교사가 개인적으로 답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 교사들은 학생들의 질문내용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먼저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사전학습을 하고 탐구한 노력이 보일 경우에 한해서만 질문에 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자진 학습하되 혼자서 해결이 어려운 것만 교사가 보충으로 답해준다는 원칙인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사이트들 외에도 많은 무상의 사이트들이 있다. 연중 복습 또는 예습과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시기에 과외 학습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신청은 미리 해야한다. 이러한 시험대비 과외학습은 대부분 학교의 교재 및 부교재를 펴내는 공신력 있는 유명 출판사들과 의식 있는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상업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유상 사이트도 몇몇 있지만 학습비가 아주 저렴하다. 두 달 복습에 68프랑(한화 약 1만원)이니 공짜나 다름없다. 간혹 수학과와 같이 Calcul Mathcad 2000 (360프랑-한화 약 7만원)과 같은 특별한 logiciel을 사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학습자 부담이다.

프랑스에서 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인터넷 무상과외는 우리의 의식 있는 교사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주리라 생각한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고액과외 열풍을 다스리기 위한 한 방법으로 숙고해서 도입해볼 만한 현대적인 과외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음성적으로 황행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고액과외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상과외 밖에 없다. 과외를 양성화시키고 민주화시켜 질적인 보충학습의 기회가 더 이상 부유층 자녀들만의 전유물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지금 우리의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되어 있는 인터넷 망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많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첨단 통신 기술을 주로 전자게임이나 오락, 서신교환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 기기를 훌륭한 민주적인 학습도구로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성인들의 책임이다. 교육연구가, 교사, 출판업계, 일반 시민, 학부모 등 모두가 우리의 청소년 교육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현재 많은 사설학

원들이 인터넷 공부방 사이트를 개설,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또 다른 형태의 사설학원의 범람을 꼭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러한 유상 과외 및 공부방 사이트에 병행하여 상업적인 이윤이나 개인적인 이익추구를 떠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여러 가지 무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새로이 부상하는 이러한 시장이 유상과 무상 사이트라는 대칭형으로 형성될 때 수요자들의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며 공급되는 내용의 질이 상호 향상되는 역동적인 견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차원에서는 자신의 전공과 전문적인 지식을 살려 사회를 위해 무료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길이 무진하게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도 이제 많은 분야에서 고급전문직의 은퇴자 층을 두텁게 갖고 있다. 이러한 고급인력을 평생교육, 사회봉사단체, 사회교육단체 등 여러 가지 사회와 교육개선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 일환으로 의욕이 왕성한 우리의 실력 있는 각 과목 은퇴교사들이 주축이 되고 스타트 업계의 참신한 젊은이들의 참여로 양성적인 인터넷 무상과외 사이트를 만들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의 학업을 도와주면서 교육에 동참한다면 그보다 더한 사회기여가 어디 있을 것인가? 무상으로

또는 적은 경비로 질적인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교육환경 속에서는 음성적인 교액과외는 자연 도태되지 않겠는가? 사회변화와 그로 인한 학교교육의 위기, 교액 과외문제 등의 만연하는 문제 앞에서 더 이상 학교나 기관을 질타하면서 수수방관할 수 없다. 전통적인 학습과 교육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제 개인과 사회가 동참하는 열린교육을 구축하는 외는 다른 길이 없다. 서양에서 일찍부터 학교교육을 개방하고 그를 보완, 동참케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축하고 발전시켜온 각종 사회교육기관 인프라가 우리 나라에는 거의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모두 사설기관으로서 공교육의 철저한 외면을 당하고 있다. 사회교육기관 인프라구축이 오늘날의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한다면 이미 엄청난 물적, 인적자원을 갖추고 형성되어 있는 사교육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음을 자명하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면서 미래교육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 모두 함께 짜내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의식 있는 많은 이들의 과제로 남아있다.

☞ 3. 프랑스 초등학교의 읽기교육

강화

최근 프랑스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능력조사에서 조사대상 아

동의 10%가 읽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린이들은 대부분이 주의산만증(디스렉시)을 보이는 아동들과 불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부모를 둔 이민가정의 자녀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연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읽기 자체의 어려움은 없으나 책읽기에 어떠한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아동들의 수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대중 통신기술과 매체가 발달한 오늘날의 사회에서 “독서를 왜 해야 하는지, 독서는 해서 무엇하는지, 어떠한 즐거움이 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저 학교과제나 시험 등에 필요한 텍스트만 읽고 그것이 독서인 것으로 아는 아동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 이곳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프랑스의 공공 사회 여론 조사기구인 Insee가 지난 5월 15일 “읽기는 가정교육문제”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발표에 의하면 책을 즐겨 읽는 성인들의 독서습관은 어린 시절의 읽기습관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조사대상 중에서 책읽기를 좋아해서 독서를 규칙적으로 한다고 답한 성인들은 모두가 이미 8~12세의 청소년시절에 독서습관이 형성되어 있었던 사람들로 드러났다. 반면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성인들은 청소년 시절에도 독서를 즐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유년 및 청소년시절의

읽기습관이 평생의 독서습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책읽기 습관은 어떠한 경위를 통해 형성되는가? 같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책읽기를 좋아하고 독서를 규칙적으로 하는 성인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어린 시절에 자신의 부모가 독서하는 것을 자주 보면서 자란 사람들이었음이 밝혀졌다. 반면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성인의 반수(47%)가 어린 시절 부모가 독서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란 아동들이었다. 한편 어린 시절 아동들의 읽기습관 형성을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환경보다는 자녀의 학습에 대한 가정에서의 부모의 태도에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평생 시 자녀들이 어떠한 주제와 내용의 책을 읽고 있는가



또 자녀가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습의 내용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주의하고 실제로 내용을 살펴 면서 관심을 표명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들은 수박 겉핥기가 아닌 진정한 읽기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부모가 학교를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학습과 읽기 등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부모의 태도가 아동의 독서습관 형성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에 비해

TV가 끼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TV 시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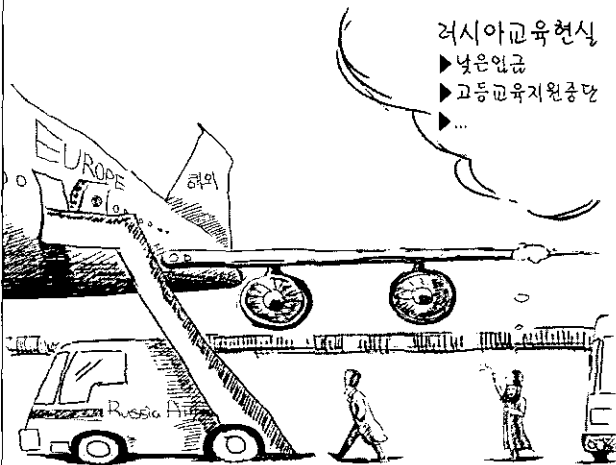
이 독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TV시청이나 다른 활동을 많이 하는 아동들일수록 독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문화적 수준이 높은 중산층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여가에 균형을 위해 부모들이 독서를 권장하고 있어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은 스포츠, 시네마 등의 다른 여가활동과 병행하여 사실상 독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프랑스 교육부는 현재 시청각시대, 인터넷 시대를 살고있는 아동들을 책으로 되돌고 가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유·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수업 시간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간단한 내용의 글이나 이야기를 가능한 많이 읽어줄 수 있는 교수법을 권장하는가 하면 새로운 읽기학습 및 교수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위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아동들의 조기의 읽기습관의 형성은 그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학부모의 의식개선도 병행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프랑스 아동들의 읽기 능력에 관한 조사와 그 결과는 프랑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시청각시대, 인터넷시대에 공통되는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문제이다. 오늘날의 매스미디어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색채로와야 하고 동서남북으로 종횡무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어야 아동들의 관심을 끈다. 백지

에 검은 색의 글자가 내리 찍힌 책은 고리타분하게 여긴다. 이것은 성인도 마찬가지이다. 책이건 잡지이건 구분 없이 또 내용이 학술적이건 정보 시사적이건 무조건 화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더 심하다. 이제는 이러한 현혹적이고 컬러풀한 외형의 세계에서 아이들의 눈을 돌려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흑백의 묘미를 깨닫고 음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독서란 게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조용히 사색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 바로 독서가 아닌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진정한 자신의 내면과의 만남은 세상과 떨어져 홀로 고독하게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들어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했다. 독서자체는 아동들에게 삶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게 해주는 수단이지만 독서행위는 아동들의 인격과 품성을 도야시키는 방법이 된다. 아동들에게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연마해서 깊이있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어야 한다. 독서의 즐거움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이들의 읽기습관은 학교의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이여! 먼저 독서하라, 그러면 아이들도 독서하리라." **최옥**

러시아와 러시아 교육 : 개황

글 / 김형욱 (모스크바 통신원, hwline@hanmail.net)



핵

잠수함 쿠르스크호 인양 작업을 하는 바다에 벌새 눈발이 날리고 있는 걸 보면 여기 모스크바에도 곧 긴 겨울이 찾아온다. 10월말이나 11월초면 눈이 오기 시작하고, 내년 4월 중순까지는 지리한 겨울을 경험해야만 한다. 따스한 태양 아래 맥주병을 들고 학교 앞 광장에서 삼삼오오 모여 있는 젊은이들을 볼 수 없는 시절이다. 거리의 걸인들에게는 더욱 혹독한 계절이다. 그러나, 기나 긴 겨울이 끝나면 다시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희열이 찾아 올 것이다.

러시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먼저, 모스크바의 지하철을 구경해 보자.

모스크바의 지하철 역은 지상으로 기차 역사 같은 건물 이 서 있고, 거기에 지하로 향하는 출입구가 있다. 역사 바로 앞에는 지하철을 가리키는 M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볼 수 있다. 시선을 지상의 역사 건물 상부쪽으로 향하면, 예외 없이 '블리자미르 일리치 레닌의 이름으로 모스크바 지하철 ○○역'이라고 적혀 있다. 지상의 출입문을 통과해서 내려가면 매표소(까사)가 있고 매표소 앞으로 개찰구가 있다. 각 개찰구는 마그네틱선이 입혀진 종이카드나

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개찰구 한 귀퉁이에는 조그만 개찰원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 앞쪽으로는 기계식 개찰구가 없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쪽으로는 무료로 지하철 탑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나 다닌다. 이제, 에스컬레이트나 계단을 이용해서 플랫폼으로 내려가 보자. 시가지 중심에 있는 지하 플랫폼은 지상으로부터 매우 깊이 위치하고 있다. 가장 깊은 곳이 지하 65m 라고 하는데, 에스컬레이트는 수치상 약 90~100m 정도는 될 것이다. 플랫폼은 몇 군데의 역을 제외하곤 양쪽 지하철선로의 중앙에 위치해서 어느 쪽으로든 탑승이 가능하다. 필요한 곳에 노선 표시나 환승역 표시가 잘 되어 있지만, 러시아어로만 표시되어 있다. 지하역사 내부의 인테리어는 역의 이름이나 그에 관계된 역사를 테마로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여행 시즌이 되면 역사를 구경하는 단체 여행객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양쪽의 선로 위로는 심한 소음을 내면서 들어오는 지하철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기네스 북에 올라 있을 정도로 배차 간격이 짧은데, 어떻게 제어하는 지 참 궁금하다(출퇴근 시간에 평균 2분 미만). 지하철에 올라서면 백열전등의 조명과 우리 나라의 구식 열차(객차의 수명이 30년이라고 하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객차 중에는 이 기간을 넘긴 것들도 많이 있다)와도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승객들은 개의치 않고 다들 무언가 열중하고 있다. 10명중 7,8명 정도는 책을 읽거나 낱말 퍼즐을 하고 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소련 사회주의의 작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1930년대부터 소련의 역사와 함께 건설되

> 1941년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 모스크바 시내엔 160여개의 역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현재 지하철 1회 탑승용 패스의 가격은 5루블(0.17달러), 대학생들에게 주어지는 1개월 패스(탑승 회수는 상관없는)는 단 48루블(1.64달러)이 된다. 무료 개찰구로 출입하는 승객들도 물론 많다.

어 왔기 때문이다. 레닌을 계승한 스탈린은 제1차 5개년 계획(1928~1932)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중공업 발전과 함께 사회주의의 기적을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 공사를 시행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모스크바 지하철이다. 1941년 첫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모스크바 시내에 총 160여 개의 역으로 모스크바 전역을 거미줄처럼 엮고 있어서 모스크비치에게는 가장 유용한 대중 교통 수단이다. 현재 지하철 1회 탑승용 패스의 가격은 5루블(0.17달러), 대학생들에게 주어지는 1개월 패스(탑승 회수는 상관없는)는 단 48루블(1.64달러)이 된다. 무료 개찰구로 출입하는 승객들도 물론 많다. 참고로, 지상 교통 수단의 경우 합법적이든 불법이든 이런 무료 탑승객은 전체 승객의 약 75%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러시아의 상황을 좀 더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화, 가스, 수도물에 대한 세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화의 경우 시내 통화료는 내지 않는다. 시외 혹은 국제 통화를 하지 않을 경우 기본 요금 60루블(약 2달러)만 내면 된다. 가스, 수도물은 사용량에 상관없이 주거인 1인당 얼마, 가스레인지만 사용할 경우 11.5루블(0.4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구 소련 시절의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레닌으로 대표되는 70여 년의 긴 사회주의의 터널을 거쳐온 나라. 그러나, 아직도 러시아 전역의 각 도시, 지역마다 사회주의의 흔적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모스크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크레믈린궁 옆, 붉은 광장에는 아직 레닌이 누워 있다. 일주일에 2번의 방부제 목욕으로 그 육체를 유지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지방 도시에는 레닌의 동상이 그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 익히 회자되다시피,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후 일련의 개혁 과정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더욱이 뒤를 이은 엘친 대통령의 실험적 경제

정책은 러시아 사회 전체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버린 결과를 낳고 말았다. 70여 년간의 긴 사회주의의 경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고, 급진적인 이행으로 이에 상응하는 법제의 개편과 세부적 사회 시스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흔적과 성숙하지 못한 자본주의적 체제가 얽혀져 있는 것이다. 연방 해체 후 이제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러시아는 그 일그러진 자화상을 회복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그야말로 삐레스트로이카(삐레, 다시 혹은 새롭게; 스트로이카, 건설의 파생어)의 시대이다.

러시아 민족은 혹독한 자연 환경과 지정학적 조건들을 이겨내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한계까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인내한다. 물론 그 한계를 넘어설 만큼의 교통이 주어지면 그들은 폭발하고 말지만, 자신의 계획이나 리듬에 맞춰서 목표를 향하여 초지일관하여 나아간다. 평소에는 생각이나 행동에 무척 느리게 반응한다. 혹자는 이를 러시아인의 나태라고도 일컬을 정도로 이들은 일상에 무관심하고, 무기력함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축적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들은 생존을 위한 힘든 투쟁에서 자신의 의지를 내 보이고 운명의 부름에 합치되는 정답을 그들의 삶에서 양산한다. 흔히 이런 말을 한다. 러시아인들은 오랫동안 마구(馬具)를 꾸리지만, 그 후에는 빠르게 말을 타고 움직인다고.

우리의 예상보다 러시아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것은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러시아 정교회 신자(전국에 걸쳐 약 11,000의 정교회)라고 말하는 데, 오랜 구 소련 시절을 러시아 정교회는 잘 버텨온 것 같다. 혁명 전 국교로서 전 국민의 95%가 정교회 신자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앙의 두터움 때문이었을까, 구 소련

▶ 러시아의 교육은 전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전 교육의 무상 교육화를 표방하면서, 개방과 더불어 교육의 다양화·개별화·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

때에도 정교회 신자의 수가 공산당원의 수를 앞지를 만큼의 교세를 유지했다. 크레믈린궁 안에 러시아 정교회 본부가 위치해 있고, 국가의 주요 행사에는 대주교가 항상 배석하는 것을 보면 정교회의 위치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빵을 살 돈이 없어도 발레, 연극, 오페라 극장을 찾는 사람들, 어디서든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러시아의 일인당 평균 월급이 \$80이 조금 넘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각종 공연장이나 지역 문화회관, 공공 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공연 행사들을 보면, 그리고 시설을 다른 사회 시설과 비교해 본다면 이들이 얼마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이 사회주의 때의 정책적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문화를 사랑하는 국민성에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긴 겨울 모스크바 및 삿페르부르크가 위치한 기후대의 경우 거의 6개월간의 혹한을 이기고, 형편없는 금전적 수입에도 삶을 영위하는 것은 러시아인들만의 생존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들 한다. 그만큼 절약하고 인내한다. 누군가 러시아 민족을 숨결이 긴 민족이라 하지만, 척박한 땅 위에 자기들만의 부드러운 숨결을 그들은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1,707만 5,400km²면적의 세계에서 제일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에 동서로 걸쳐 있고, 겨울 영하 70℃까지 떨어지는 저 동토의 땅 시베리아로부터 한 여름 30도를 넘는 기후를 나타내는 흑해 연안까지 방대한 국토 위에 약 1억 4천5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행정 구역은 크게 7개의 큰 지역(연방 지구)으로 나누어지고, 연방 지구는 다시 총 21개의 공화국(리스뽀블리카), 6개의 테리토리(Territory), 49개의 오블라스찌(Region), 1개의 자치 오블라스찌, 10개의 자치 오크록으로 나누어진다. 전국에는 1,097개의 도시가 있는데,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를 살펴보면 모스크바(840만명), 삿페르부르크(470만명), 노보시르비스크(140만명), 니쥬

니 노브고라드(130만명), 예카제린부르크(130만명), 사마라(110만명), 옴스크(110만명), 카잔(110만명), 우파(110만명), 첼리아빈스크(110만명), 로스토브나도누(100만명), 삿름(100만명) 등이 있고, 이외에도 관광지로 잘 알려진 흑해 연안의 소치, 바이칼 호수 주변의 이르쿠츠크, 극동의 블라디 보스톡과 하바롭스크는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들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 교육은 전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전 교육의 무상 교육화를 표방하면서 구 소련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체제에 맞는 교육의 다양화, 개별화,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 중앙 관청인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 하에 세 명의 수석 차관, 7명의 차관이 구분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총 750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각 행정구역마다 지역 교육부가 편제되어 있다. 러시아의 교육체계는 7세 이하의 아동이 입학할 수 있는 유치원, 우리 나라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쉬콜라 1~9학년,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쉬콜라 10~11학년, 초등 직업 학교, 중등 전문 학교 그리고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있다. 초등 직업 학교(직업 기술 및 다른 부문의 우칠리체를 포함하는)는 쉬콜라 9학년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 소유자나 11학년 졸업자에게 입학 허가가 주어지고, 중등 전문 학교(college를 포함하는 기술 사범학교)는 쉬콜라 10~11학년을 마친 자나 초등 직업 학교 졸업자에게 입학이 허가된다. 쉬콜라를 비롯한 초등 직업 학교, 중등 전문 학교, 그리고 대학을 합친 총 교육 기관의 수(지방 자치 교육 기관은 국립 교육 기관에 포함)는 전국에 68,804개교가 있고, 이중에 사립 교육 기관은 635개가 있다.(2000/2001학년도 기준) 1993/1994 학년도에 비해 사립 학교의 수가 2배 증가하였지만, 그 수는 위와 같이 미미한 수준이다. 재학생의 수는 총 2,055만 4천명, 이에 비해 교원의 수는 총 176만 7천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약 12명이다.

8,800개에 560만명의 유아들을 교육하고 있는 유치원은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탁아소 기능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소득) 수준에 비해서 시설 및 교육 내용이 탁월하다. 초·중등 교육은 일반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기술학교, 장애인 학교 등으로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1~

11학년제로 운영된다. 수업 단계와 수업 연한에 따라 분류해 보면 제1수준으로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3~4년, 중학교에 해당하는 제2수준은 5년,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제3수준으로 2~3년이다. 대부분의 학교명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예컨대, 모스크바 1,086 학교)하는 것이 이색적이다. 2000학년도 기준으로 쉬콜라 9학년 졸업자는 총 220만 명, 11학년 졸업자는 145만 8천명 정도의 규모이다.

초등 직업 학교는 개방 이후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전국에 3,893개교(1992년 4,269개교)에 167만 9천명이 재학하고 있고, 작년에는 76만 3천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초등 직업 학교는 학력별 9학년 졸업자, 11학년 졸업자, 쉬콜라 중퇴자 등으로 나누어져 교육하고 있으며 이중에 367개교에는 야간반을 개설하고 있다. 칼리지를 포함하는 중등 전문 학교는 전국에 2,703개교(989개의 college, 사립 114개교 포함)에 236만 1천명의 재학생들이 있고, 작년에는 56만 8천명이 졸업했다. 그 중에 주간 학부 졸업생의 취업률은 약 31% 정도라고 한다.

대부분 5년제의 수업 연한(1~3학년은 학사, 4~5학년은 석사 과정 마기스트라뚜라)을 지향하고 있는 대학 교육은 전국에 국립대 607개, 사립대 358개교(1994/1995년도 157개교를 시작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에 총 474만 2천명이 재학하고 있다.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는 327명이며 강사를 포함하는 교원 수는 전체 30만 740명, 대학 교원 1명당 학생 15명의 비율이다. 2000년도 입학생의 수는 총 129만 2천명, 같은 년도의 졸업생은 63만 5천명이며, 그 중에 국립 대학 주간 학부 졸업자의 약 46% 정도가 취업했다. University, Institute, Academy, Faculty, Conservatoire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종합 대학(University)은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총 45개 교). 이와 함께 공학, 의학, 경영, 항공, 외국어 등의 전문 분야를 특성화한 단과 대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근래 들어서는 대학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대학 4년제, 석사 2년제의 형태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년제 대학을 마치면 우리 나라의 대학원 졸업에 해당하는 학위가 주어지고, 5년제 대학을 마치지 못한 학생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마기스트라뚜라 과정(우리 나라의 대학원에 해당)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박사 과정에 해당하는 아스빠란뚜라 과정을 통해 연구를 계속하게 되는데, 마지막 과정인 독또란투라는 오랜 연구 경험과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통상 40세 이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학문 연구에 적합한 국민성과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교육자들의 진지한 학문 탐구의 열의, 그리고 나름대로의 교육의 다양화, 개별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교육 재정의 턱없는 부족으로 러시아 교육은 정체 상태에 있다. 2001년도 정부 예산 편성 중 교육 재정을 위해 할당된 것을 살펴보면, 총 예산 1조 1,934억 8,290만 루블(약 409억 달러) 중 약 4%에 해당하는 488억 루블(약 16억 7천만 달러)이다. 각 교육 단계별 예산을 알아보면,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한 재정으로 462,349,800 루블(약 1594만 달러), 초·중등 교육(쉬콜라)을 위한 재정으로 872,807,200 루블(약 2,989만 달러), 초등 직업 교육을 위한 재정으로 10,831,194,500 루블(약 3억 7931만 달러), 중등 전문 교육을 위한 재정으로 6,748,725,800 루블(약 2억 3112만 달러), 고등 교육(대학)을 위한 재정으로 28,599,091,000 루블(약 9억 7942만 달러), 기타 1,289,064,300 루블(약 4,414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중단된 실정이고, 다만 초·중등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국가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빈약한 교원 보수(초·중등 교원 월 \$50, 대학교수 월 \$50~100내외)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교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첨단 과학 인력, 외국어 분야 인력의 해외 유출로 교원의 질의 저하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든 러시아 교육의 미래, 나아가 러시아의 미래는 과연 어떠한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느냐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

싱가포르의 대학운영제도 : 국립싱가포르대학교의 대학평가 사례

글 / 박보배 (국제교육진흥원 유학연수지원과 교육행정사무관, bobaepark@yahoo.com)

☞ I. 들어가는 말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상위권에 속하는 태국도 대학개혁의 세계적인 동향을 인식하여, 태국의 대학성(Ministry of University Affairs)은 세계 선진국의 대학운영체제를 연구하고 자국 대학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글은 2000년 11월 8~10일 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고등교육 운영평가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사례를 발췌·번역한 것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국토가 우리나라의 수도 면적에 견줄 수 있는 크기의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선진국으로서 권위있는 각종 국제지표에 우수한 국가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안정된 국가성장과 발전에는 사회 모든 부문에서 합리성에 기초한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일반교육은 물론 고등교육 분야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양성을 위하여 정부와 교육관계자들이 고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II. 대학운영 평가 개혁

세계 최고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국립싱가포르대학교는 외국의 우수대학 운영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운영방식의 개혁동향을 감지하여 교육과정 운영, 시험방식, 교수개발, 학사운영 등 대학운영 전반에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전문인 양성을 위하여 세계 우수대학들이 보다 세분화된

전공제도를 실시하는 추세를 대학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세계 우수대학과 경쟁하기 위하여 기존의 낙후된 학과는 과감하게 폐지하였다. 이와 동시에 핵심 능력을 개발하고 신속하게 다학문연계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함으로써 비교우위분야에 있는 학과를 개설·운영하는 등 우수대학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싱가포르대학교는 비교 우위의 분야를 선정하여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계 우수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학과 컴퓨터분야에서는 미국의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을, 의학분야로는 존스 홉킨스대학, 로지스틱에 있어서는 조지아 공과대학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다. 세계지식인공동체 구축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학은 과학, 공학, 의학, 컴퓨터 관련 학과를 주축으로 하여 해외 협력대학들의 교수진들과 공동으로 교수 및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수월성 추구를 통한 우수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세계전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한편 전향적인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립싱가포르대학교는 대학운영의 주요관건으로 3가지(우수한 교수활동, 탁월한 연구활동,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획득한 국제적 명성과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대학평가 방식(Quality Assurance Schemes)을 도입함으로써 교수학습, 연구 및 인사관리에 중점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왔다.

1. 교수 학습 활동에서의 평가

가. 교육활동에 대한 피드백(Feedback on Education Processes)

대학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공학과 선정, 개발, 운영에 대한 학생의 피드백 평가를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학생의 평가는 교수학습 활동 개선의 토대로 작용한다.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으로는 1) 학생의 직접적인 피드백, 2) 동료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3) 강의활동 녹화 시청에 의한 평가, 4) 산업체 고용주 및 동문으로부터의 피드백, 5) 학과 자문위원회를 통한 피드백, 이 5가지 영역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 학생의 직접적인 피드백

강의활동에 대한 학생의 피드백은 벌써 10년 이상 계속되어 왔으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과정이 끝나갈 무렵 평가에 참가하여 교육내용과 강의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평가를 내리게 한다. 학생으로부터 수집한 평가자료는 효과적인 교수활동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그리고 강의활동이 학과목 운영과의 상관성을 측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2) 동료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같은 학과 동료 교수로부터의 피드백은 교수경험이 많은 원로교수가 강의와 개인지도 활동에 개인적으로 참관함으로써 교수방법 개선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게 된다.

3) 강의활동 녹화 시청에 의한 평가

대학은 강의를 담당하게 되는 교수들에게 자신의 강의를 녹화하여 강의방식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을 독려한다. 또한 교수 본인이 원한다면 강의 녹화테이프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강의의 질에 대하여 동료 교수진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4) 산업체 고용주 및 동문으로부터의 피드백

산업체 고용주와 동문들은 교육과정 구성을 비롯한 전문인 양성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의견

조사 방식에 의하여 이들의 견해와 기대가 정기적으로 대학운영에 반영된다.

5) 학과 자문위원회를 통한 피드백

학과자문위원회는 관련학과 운영진과 정부 대표 및 여타 개인으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게 된다. 학과 자문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대학이 선정한 교육과정이 학계 이외의 사회 다른 분야의 발전에 병행하는지 그리고 대학 교수진에게 학사운영이 산업체 관련인사와 졸업생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나. 평가단 이사회 구성(Boards of Examiners)

평가단 이사회는 종합대학으로서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운영방식이 다양한 학문분야의 요구를 얼마나 잘 수용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학과의 운영이 타 대학들과 균형감있게 운영되고 양립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치한다. 평가단 이사는 시험점수를 조정하고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상장관계 및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결정에 참가한다. 그 외에 시상, 메달 및 기타 상장수여에 관련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하게 된다.

다. 전문가 단체에 의한 평가(Assessment by Professional Bodies)

대학은 적합한 전문가 단체를 대표하는 산업체 인사를 심사평가에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에게 심사를 의뢰하고 이들 단체의 피드백을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요소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하는 학부인 공학, 건축학, 의학, 치의학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전문가 단체에 소속한 외부인사가 정기적으로 교육과정을 평가하게 된다. 컴퓨터학과의 경우에 있어서도 관련 전문가 단체인 미국의 컴퓨터기계협회(ACM: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의 권고에 따라 교육과정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게 된다. 이러한 관례는 현재 설정한 학문적 기준이 시의성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알아보는 평가기준이 된다.

라. 외부 심사진 위촉(External Examiners)

일류 고등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학위과정 운영과 관련된 국제적 인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인식하에 기관 외부의 심사진들에 의한 평가방법을 도입했다. 이들 외부 심사진으로 위촉되는 인사들은 저명한 외국대학 소속의 원로 학자로서 시험문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어도 2년에 한번 정도는 관련 학과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학과 프로젝트 발표에 참석하고 발표내용과 논문을 심사하게 된다.

이들 외부심사진들은 대학의 교육과정이 높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교육활동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교육활동의 질이 제대로 정의되었는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는지, 교육의 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교수활동, 교육과정 구성에 대하여 자문을 하게 된다.

대학원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학위논문에 대한 구두심사가 있기 전에 외부 심사진들에게 발표예정인 논문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정 활동이 대학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케하고 교수간 파벌형성의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하게 해준다. 이러한 대학운영방식을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싱가포르에 적은 숫자의 고등교육기관이 있고 제한된 분야에서 전공이 개설된다는 사실을 잘 반영하여 보다 경쟁력있는 대학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진다.

2. 연구활동의 평가(Quality Assurance in Research)

세계 일류 대학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교수활동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립 싱가포르대학교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주요방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국제 학계자문위원회 구성 (International Academic Advisory Panels)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이 관련 분야의 최근 동

향에 병행하는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자문진으로 구성된 패널이 모든 학부 단위로 구성·운영된다. 패널의 구성원은 관련 전문분야의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는 물론 연구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는 등 상당한 책임감을 부여받게 된다. 선임된 패널진들은 2년에 한번 꼴로 대학을 방문하게 된다. 이들 패널들은 관련 학부의 연구활동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하는 활동이외에도 동료패널과 학과교수와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하여 교수활동에 대한 시너지 창출은 물론 향후 연구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

나. 연구프로젝트 평가(Research Project Evaluation)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립싱가포르대학교는 특히 연구활동부문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특히 고도의 책임성을 발휘한다. 일반적으로 연구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평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연구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재원으로 대학자체연구비, 대학 외부의 정부기관 혹은 산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조달의 주체를 결정하게 된다. 기본연구비 책정액을 초과한 연구비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독립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대학의 연구담당국과 대학원과 공동으로 추진된다.

이미 수행중인 연구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연구진들은 추진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운영위원회는 교수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하게 되며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우수한 연구결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소로는 특허권 신청 건수, 연구업적이 저명한 저널에 실렸는지 여부, 연구결과가 관련분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판가름나게 된다.

다. 연구물 발표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Research Publications)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준은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이렇게 채택된 기준은 학부 혹은 학과단위로 적용된다. 국립싱가포르대학교에서 현행 사용되는 방식은 유관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로 인정받고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잘 알려진 저널에 게재된 연구결과 목록을 정리하여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목록은 끊임없이 평가되고 개정되도록 하며, 보다 적극적인 학부의 경우에는 이들 목록의 정확성 검증을 위하여 외국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절차를 마친 후 선정된 연구목록은 다시 교수진에게 배포함으로써 대학은 자연적으로 교수들로 하여금 권위있는 저널에 자신의 연구결과가 실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컴퓨터 학과의 경우 새로운 연구결과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회의에서 발표되는 것을 감안하여 학과 자체적으로 내부기준을 만들어 질과 평판을 근거로 각종 학회에 대하여 평가를 내린다. 이러한 내부기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의 권위있는 연구자들의 자문을 참고하기도 한다.

3. 교수관리에 대한 평가(Quality Assurance in Staff Management)

국립싱가포르대학교는 대학의 인적자원에 대한 경영과 개발에 철저한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교수진에 대한 관리가 그러하다.

가. 교수 임용(Recruitment of Faculty)

교수임용방식에 있어 오직 유능한 지망자만이 최종 임용을 위한 후보자명단에 오를 수 있도록 대학 자체의 평가방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첫째, 중견교수 임용시에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임용위원회를 구성한다. 한편 관련 학과 교수들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외부 참고인들의 의견이 임용의 참고자료가 된다. 또한 대학은 이렇게 선발된 교수 후보자들이 대학에 방문하여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토론에 참가하길 희망할 경우 방문에 따른 여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앞으로 채용될 교수들에 대한 학교 근무환경을 익히도

록 배려하고 있다.

나. 업적평가(Performance Review)

대학은 교수진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교수, 연구, 행정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 평가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 이러한 정기평가는 해당 교수의 봉급 인상 혹은 승진시 후보자로서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정기 평가시, 모든 교수진들은 대학당국에 일년 동안 교수자신이 강의, 연구, 행정활동에 공헌했는지 참고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의 직속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학과장은 필요시 해당 교수의 성과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실시할 수도 있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권고를 하기도 한다.

교수 차원의 평가단계로서 관련 학과의 원로교수들로 구성되고 학장으로 주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과에서 신청한 추천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종합된 추천사항들은 대학행정당국에 제출하게 된다.

정교수 혹은 종신교수의 선임과 관련된 결정사항들은 승진후보자와 동일한 분야의 명망있는 외부인사로 패널을 구성함으로써 대학 외부 인사들의 평가를 병행한다. 이러한 절차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가장 우수한 자질을 갖춘 후보자만을 교수직에 선임하기 위해서 표준절차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한편 교수 개인별 효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교수 개개인들이 교수로서 기본 의무이외에도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공헌했는지 여부를 해당 교수의 봉급책정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반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인 임용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기존 국립대 교수들이 갖고 있는 낡고 안일한 사고방식을 근절하고 교수 개개인들이 최고 역량을 가진 교수로 정진할 수 있도록 진작하는 보상체계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04**

21세기를 지향한 교육과정시행안

글 / 강영민 (북경사범대학 국제비교교육연구소, k-yuonmin@hanmail.net)

수년간의 준비를 거쳐 제정된 초·중등교육과정 시안이 지난 8월에 발표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의 발표와 함께 발행된 소학교·중학교 1학년 실험용 교과서가 9월 1일에 시작된 2학기부터 전국 38개 실험지역 30만 명의 학생들에게 사용되었다. 새 교육과정은 3년 동안의 실험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21세기를 지향하고 새로운 비약을 꿈꾸는 중국은 사회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 전례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 교육과정은 번(繁)/난(難)/구(舊)/다(多)(지식내용의 반복이 많고, 어려우며, 시대에 뒤떨어지고, 너무 많다): “획일교육+이데올로기교육”으로 평가되는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을 시도하여 학생 개개인의 개성발전을 중시하고 이들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내용들을 엄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교육과정 제정과정에서는 현장 교사들의 참여에 많은 비

중을 두었고 학부모의 의견도 수렴하여 주로 중앙집권 체제하에 교육부에서 위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에 의해 진행되던 기존 교육과정 제정과정과 많은 다른 점을 보여주었다. 이번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국가-지방-학교교육과정제도 실시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관리를 고집해온 중국 교육부는 960만 평방킬로미터의 1억이 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시행해왔다. 지역특성이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성만을 강조했던 이런 운영방식은 개혁개방이래 날로 현저해진 지역차와 더불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고 급기야는 이번 개혁의 중점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서 “국가과정-지방과정-학교과정(“교본과정”이라 칭함)”의 3급교육과정 관리 제도를 제정하였고 지방과정과 학교과정의 제정에서 지방교육위원회와 학교 나아가 교사들의 보다

많은 자율성을 확보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서 출판 개혁도 주목할만하다. 인민교육출판사에서 교과서 출판을 거의 독점해왔던 관례와는 달리, 지난 8월에 발행된 실험용교과서는 전국의 14개 출판사들이 편찬에 참여하였다. 교육부는 출판사나 연구기관들에 교과서 편찬을 권장하고 있으며, 빈곤지역을 상대로 편찬하는 국정 교과서들은 이윤이 적은 대신 상당량을 국가에서 책임·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책적 지원을 보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정부의 개혁안이 발표된 후 북경(北京), 상해(上海) 등 대도시들에서는 즉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의 교육과정안 발표와 거의 동시에 두 도시는 지방교육과정 시행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북경시에서는 11개 구의 200개 소학교들이 시에서 편찬한 1학년 교과서를 실험사용하였고 3학년 과학과와 정보기술과, 7학년의 미술과와 정보기술과 등 지방교과서를 채택하였다. 북경시는 이밖에 기초과

▶ 21세기의 새로운 비약을 위하여 새 교육과정에서는 “획일교육+이데올로기교육”으로 평가되는 현행교육과정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을 시도하여 학생 개인의 개성발전을 중시하고 이들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내용들을 엄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정, 선택과정, 현대과정, 실험과정, 학교자주과정 5종류의 통합과정을 제정하여, 각급 학교에서 본교의 상황에 근거하여 분과 혹은 통합과정을 선택하게 할 예정이다. 또 주당 수업시수를 28~30시간까지 줄이고 1~5학년의 수업시간을 40분으로 제정하며 학교의 상황에 따라 수업시간을 적당히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여유를 주기 위해 상당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경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실험을 거쳐 2003년부터 정식으로 지방교육과정 시행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평등이란 원칙 하에 교육부 주치의 전국동일고사를 대학입시의 유일한 형식으로 실시해온 중국에서 지방교육과정의 성공여부는 대학입시정책 개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과정개혁은 공담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북경시에서는 내년부터 전국 동일고사에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제할 의향을 나타내었다.

☞ 영어교육의 보장

중국의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소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이 각 지방에서 본지방 조건에 따라 영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정보화, 세계화의 발전과 더불어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교육부는 올해 1월에 “소학교에서 영어수업을 진행할 경우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전국 소학교 3학년부터 영어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새 교육과정 발표 후 일부 경제발달 지역에서는 영어교육 보장을 위한 지방과정을 개발하였다. 예를 들면 북경시에서는 교육과정개혁을 계기로 9월 1일부터 각 실험구역 소학교 1학년생들을 상대로 영어수업을 시작하게 하였다. 교과서 사용은 각 구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하게 되어있어, 해전구(海澱區)교육위원회에서는 활동, 유희 등을 중심으로 한 실험용 영어교과서를 직접 편찬하였다. 북경시는 2003년부터 모든 소학교 1학년생들에게 영어수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탐구식 학습방법의 채택

지식중심의 교육내용과 주입식교

육방법은 오랫동안 중국교육의 고질로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습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새 교육과정이 제출해낸 대안으로는 탐구식 학습과정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중국교육보」(중국교육부의 기관지)에서는 본 교육과정개혁의 임무에 관한 서술 중 특별히 “교사와 학생간의 공동연구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프로그램을 고안한다. 특히 탐구식 학습과 그룹 학습을 적극 도입한다...”고 강조하였다. 탐구식 학습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난 세기 90년대로부터 이미 많은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실시되어왔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소학교·중학교에서도 탐구학습을 적극 도입할 것을 권장하였다. 교육과정 서술에서 흔히 써왔던 “교육”이란 표현을 “학습”으로 바꾼 점에서도 학생들의 주체성을 고려한 노력이 엿보인다.

상해시에서는 하루 속히 탐구식 학습에 골인, 9월 학기부터 초·중등학교 전반에 탐구식 학습과정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복안대학부속 중학교에서는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다년간의 실험 끝에 “탐구식 독립설

▶ '현대정보기술의 사용기술과 정보선택에 관한 교육' 진행에 힘입어 2010년까지 전국 초·중등학교에 인터넷 관리시스템 및 정보교육을 보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계과정"을 개발하여 중학생들이 연구과제 제정, 연구경비 신청, 지도교수 초빙, 연구보고서완성, 리포트 평가 등 모든 연구과정을 독립적으로 완성하게 하였다. 상해시 진원고등학교에서는 대학수업형식을 닮은 선택형수업과정을 개발하여 고정된 교실에서 해당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되 학생들은 자주적으로 수업과 정표를 제정하여 학습의 제한이 없이 움직이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였다. 상해시 정안구의 소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의 발달특성에 근거하여 수학과를 취소하고 영어로 진행되는 수학활동과를 개발, 외국어와 수학 활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외 많은 초·중등학교들에서는 실험실과 연구실을 신설하여 탐구식 학습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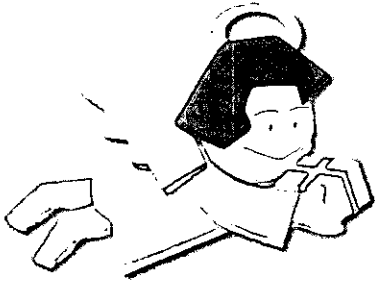
㉞ 정보교육의 도입

중국의 인터넷 산업발전은 근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인터넷 이용자는 1997년의 62만명에서 2001년의 2,600만으로 급증하여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40배의 놀라운 증가속도를 보였고, 인터넷학교·인터넷학원도 속

출하여 더욱 발전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의 평균연령이 20세이며, 계속적으로 저연령화되는 이러한 추세는 학교에서의 정보교육의 실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상황에 따라 수학과에서 "현대정보기술의 사용기술과 정보선택에 관한 교육"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0년까지 전국의 초·중등학교들에 컴퓨터 설비와 인터넷 관리시스템 및 이에 따른 정보교육을 보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계획의 추진은 어디까지나 빈부차이가 상당히 심한 전국 상황을 감안한 장기목표로 일부 발달지역에서는 이미 정보기술과를 개설하여 급격히 발전하는 정보사회속에서 학생들에게 정보 선택기술 및 올바른 정보선택이념을 가르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에 대부분 초·중등학교들에 컴퓨터시설 및 교육조건이 구비되었으며 관련교육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고 북경시에서는 지난 9월부터 모든 중·고등학교와 일부 소학교들에서 정보기술학과를 필수과목으로 제정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사이다. 중국 교육부는 특히 이번 교육과정의 성공여부가 교사의 수준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전국 범위의 교사연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북경대학 고등교육연구소 진항명(陳向明)교수는 "참여식교사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국의 서부지

역인 감숙성, 협서성 등 빈곤지역의 교사양성을 담당해왔다. 진교수는 "다양한 연수내용과 방법 채택", "평등참여와 연대의식 양성", "기존 경험 활용", "이론과 실천 결합", "체험교류", "창조성발휘" 등을 교사연수의 주요원칙으로 하여 교육조건이 비교적 낙후한 지역의 교사들이 교육개혁에 거부감을 갖지 않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북경시 등 대도시들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교수법 연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교육의 지역차이와 교사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나 성급히 교육개혁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교육과정의 초기과 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치지 않는 상태이다. 상세히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교사참고서까지 갖추어 주었던 과거의 교육과정과 달리 이번 교육과정은 지방과정, 학교과정의 여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내용의 서술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의 자주성을 발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세한 진술은 가급적 피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실시될 때 아직 중졸학력의 교사들을 상당수 채용하고 있는 산간벽지의 소학교들에서 교육과정개발을 원만히 완성할 수 있는지, 또 교사가 단기간의 교사연수를 거친 후 상당한 교수실력을 요구하는 탐구식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가 의문이다. ㉞



'교육개발' 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보냅니다!



초·중·고등학교, 자녀들의 담임선생님께 「교육개발」을 보냅니다.

▶ 한국교육개발에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자녀들의 담임교사, 외진 곳 조그마한 학교에 '교육개발'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 교육개발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신청자의 이름으로 기증됩니다.
- ▶ 기능구좌 종류는 1구좌 이상으로 자유로우며 1구좌(1년 정기구독료)는 2만 5천원입니다.
- ▶ 서점에서 날권 구입 가격은 4,500원입니다.
- ▶ 외진 곳이나 모교에 '교육개발'을 기증하시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 회비납부처(예금주:한국교육개발원)
 - 농협 369-01-010147
 - 외환은행 296-22-00296-3

▶ 문의처
137-791 서울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홍보출판팀
'교육개발' 편집실
TEL : 02-3460-0235, 0411
FAX : 02-3460-0151, 0116
E-mail : keditor@ns.kedi.re.kr
'교육개발 보내기 운동 가입신청서'는 엽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기입 후 팩스나 우편, 통신으로 우송 요망)

- 교육개발 보내기 운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은 부수
- | | | | | | | | | | | |
|--------|---------|--------|---------|--|--------|--------|--------|--------|--------|--------|
| 강숙희(3) | 곽병선(20) | 고민훈(2) | 김우종(3) | 김유태(1) | 김은지(1) | 김정래(5) | 김정원(1) | 김정자(1) | 김창환(3) | 권수경(1) |
| 류방란(4) | 박성주(4) | 서혜성(2) | 서한숙(1) | 손용택(1) | 오송자(1) | 우수진(2) | 유효순(1) | 윤여각(3) | 윤인철(3) | 예철해(2) |
| 이규향(2) | 이경희(5) | 이만희(2) | 이순희(5) | 이신야(3) | 이윤미(3) | 이은숙(1) | 이은영(1) | 이정규(1) | 이현주(4) | 임소현(3) |
| 장인식(2) | 전인식(1) | 정수현(2) | 정영순(10) | 정재기(5) | 정종진(1) | 정태희(1) | 지기섭(1) | 천성문(2) | 채경은(5) | 최돈형(3) |
| 하혜영(3) | 한유경(4) | 홍영란(1) | 황연수(5) | 아직도 공간을 채우고 키워야하는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 | | | | | |

역사교과서 왜곡과 한일민간교류

글 / 강원석 (한일문화교류센터 경남지부장, kws211@hananet.net)

II

가까이 있으면서도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 일본. 그동안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는 굴곡의 역사였다. 그래서인지 우리 국민들의 일본관은 그러한 정서를 숨기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한일관계의 새로운 정립이다.

이는 유교문화와 함께 한자를 공통으로 사용하며, 서로의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해온 한국과 일본이 민족적인 이질감과 과거의 상처를 딛고 문화적인 동질성을 찾으며 새로운 시대를 맞아 어떤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도 양국을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국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와 98년 이후 세차례에 걸친 일본 대중문화개방, 그리고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은 양국의 우호적 분위기를 한층 더 진전시키는 매우 뜻깊은 성과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비롯된 이러한 정책들은 양국 국민들의 민간교류에 일대 변환을 가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뜻을 같이 하는 민간교류단체들이 결성되고, 기업, 학교, 자치단체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조직

과 단체들이 기술제휴, 자매결연, 상호방문교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간교류의 정점을 이루었다.

그런데 양국간 이러한 분위기를 뒤엎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였다. 모처럼 맞이한 화해 분위기를 바탕으로 21세기 한·일 관계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 나가고자 하던 양국의 많은 이들에게 '역사교과서 왜곡'은 찬물을 끼얹는 일대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국제관계는 모름지기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상대국과의 역사적 관계는 물론 현재상황, 미래 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선린외교를 해야 한다.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전면에서 나서기 전부터,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와 대중문화개방으로 비롯된 해빙무드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일 양국에는 미묘한 흐름이 일어왔다. 독도 영유권 분쟁,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군대위안부 등의 과거사 문제.

그럼에도 그것들이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비단 해묵은 문제들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모처럼 조성된 화해무드를 흐리지 말자는 양국간 무언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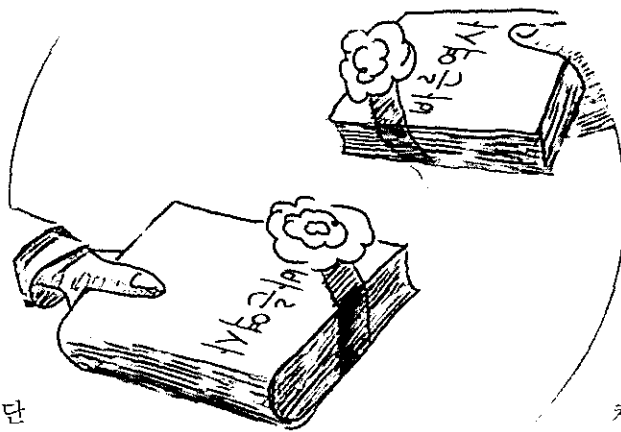
바로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의 현명한 정치요, 외교가 아닐까? 하지만 이번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경우가 다르다. 교과서란 말 그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침이

요. 그 중에서도 역사교과서는 그 나라의 정체성과도 연관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들의 교과서에 왜곡되어 미화된 거짓이 있다면 그리고 주변국과의 선린외교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일이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인 행위이다.

지금 이런 반역사적인 행위가 일본에서 그것도 일부 극우주의자들과 정치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면서 일선 학교나 지자체의 교류 단절을 비롯해 민간교류에 지원되던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삭감되는가 하면 개인적인 교류 단절로까지 이어졌다. 동시에 이러한 우리의 대응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른다는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도 일었다.



최근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불거진 한일관계의 악화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우리 정부의 외교력 부재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일본내의 우익 정치인들에게 있다 하겠다.

그들은 국제여론의 비난이나 주변국의 감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비정상적인 정치인들.

바로 이들이 만들어 낸 감각적인 정치가 한일관계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일성부터가 극우적이었으며, 역사교과서 왜곡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을 통해 국민들을 우경화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일본내의 양식있는 지식인들의 목소리는 묻어버리고, 우리정부와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내정간섭으로 몰아부쳐 자국의 여론을 선동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한일관계를 전면적으로 위기에 빠뜨리게 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비판을 자초하고 말았다.

또한 일본의 양심적인 국민의 저항으로 거의 모든 중학교가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간신히 권력의 작용으로 신체장애자가 배우는 가장 힘없는 양호학교 몇 군데에서 채택하게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일본내에서도 양식있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아시아의 주변국들과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갈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1960년대 대동아전쟁 긍정론이나 80년대 교과서 논쟁에서 나타났듯이 일본내에서 과거를 미화하려는 세력

은 늘 있었다. 과거엔 일본 내 소수파에 불과했던 이들이 최근 세력을 확장, 일본 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교과서 왜곡을 주도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회원수 1만여명에다 전국적 지부망을 갖춘 조직으로 확장했다. "자학사관 시정"을 외치는 역사 수정주의 자체가 전후 리버럴리즘이 주도하던 과거 일본 사회였다면 발붙이기가 힘들었을 흐름이다.

하지만 이번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 이후 일본사회에서는 이러한 우경화의 흐름에 제동을 걸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하자는 움직임도 큰 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비단 주변국들의 반일감정 격화는 물론, 일부 극우주의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일본의 양식있는 지식인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일대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일본내부의 우경화조짐과 국제사회에서 일본 고립을 우려하며, 다각적인 형태로 역사교과서 채택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해 나갔다.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주도하에 빚어진 역사교과서 왜곡은 왜곡교과서 불채택 운동이 일어나는 등 이에 동조하지 않는 반대세력들로 인해 기대이하의 채택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일본은 국수적인 우익세력들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인해 아시아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적인 냉각기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IV

이상과 같은 상황속에서도 향후 한일관계 전망은 낙관적으로 보여진다. 과거 침략전쟁의 미화를 통한 우경화

경향은 일본 중앙정치외교의 문제로서 소수의 극우주의자들에 한정되어 있다.

우익 교과서 파동과 그 뒤를 이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이런 것은 일본의 중앙 정치권력과 그 주변의 우익 세력이 위기의식에서 연출해낸 책동이라고 보아지며, 이는 대다수의 국민과 양식있는 지식인층은 우경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또 많은 일본의 지식인들은 '교과서에서 전쟁책임 부분을 확실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왜곡교과서의 지극히 낮은 채택율(0.04%)은 일본의 양식있는 시민활동이 승리한 것으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단호한 비판과 거기에 상응한 조치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과거 역사를 보면 일본은 문호를 개방하고 세계와 교류했을 때 번영했고, 우경화속에서 그 문호를 닫았을 때 패망하고 말았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국내정치의 위기에서 우익이 대두하고 국제적으로 고립한 나머지 전쟁으로 치달아 패망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이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위험한 우경화는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과거사에 대한 왜곡과 미화, 그들의 자국 우월주의, 그리고 아시아 경시 풍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냉철하고도, 현명한 외교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중앙정부에 대한 자세와는 달리, 한일 양국의 민간교류는 조속한 시일 내에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양국의 시민정신이 더욱 강화되고 국민을 통한 국민간의 민간교류가 더욱 공고해질 때, 우익세력의 반역사적인 책

역사교과서와

한일민간교류

동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관계는 이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경제에만 치우치던 한일관계가 민간교류, 문화교류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소용돌이 속에서 빚어진 민간차원의 교류단절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갈망한다.

앞으로 약 7개월후면 역사적인 2002 한일 월드컵이 공동으로 개최된다. 이러한 세계적인 행사가 성공리에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나라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양국간의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한일관계의 복원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의 성의있는 자세 변화와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일교류가 수개월간 침체했던 늪을 벗어나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한일간의 불행했던 과거를 깨끗이 씻고 발전적인 미래로 가기 위한 양국 모두의 과제일 것이다.

W 끝으로 이번 파동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역사나 교육전문가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역사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문제해결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꾸준히 추진해온 한일 민간교류의 지속이 서로에 대한 인식

우리는 일본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줄 때 비로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대일관계에 있어서 좀더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이성적인 자세로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즉 전략적인 사고를 통한 명분과 실리의 양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언론의 냉정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민간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교류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룬다는 애국적 기초를 바탕으로 양국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왜곡에서 비롯된 일본정부의 국수주의적인 태도는 이런 민간교류 활동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 이러한 우려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내의 한국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줄 때 비로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신체적, 도덕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인간의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 다양한 성적 갈등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고 의사 결정에도 도움이 되는 태도와 기술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성에 관한 지식의 습득뿐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 의식 및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성교육 내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제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성교육 연구들은 가르쳐야 하는 내용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내용체계를 갖고 있고 성교육 내용 체계에 관한 연구 또한 상당히 진행되어 왔으나 성교육 내용과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효율적인 성교육 지도를 위한 방법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제까지 일방적인 강의식 성교육 활동 또는 비디오 시청 등과 같은 교사 중심의 성교육 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다양한 학생 활동 중심의 성교육을 통해 성지식의 습득은 물론 가치관, 의식,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성교육 내용과 주제에 따라 적절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성교육 방법들은 이미 다른 교과지도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방법들로서 2000년도에 개발된 중학교 성교육 지도지침 및 학습지도안 구성시에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별도로 구성한 내용이다. 몇 가지 중요한 교수-학습 방법을 성지식, 성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한 학습 지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예를 제시하였다.

학교의 성/교/육

효율적인 성 교육 지도 방법

글 /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phj@ns.kedi.re.kr)

1) 사례 연구

학생들에게 완성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유인물을 나눠주고 몇 가지 틀에 따라 분석하게 한다. 이야기는 소설이나 잘 알려진 교전을 선택해도 좋으며, 분석틀을 제시할 때는 너무 상식적인 수준보다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유발한 만한 새롭고 흥미있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분석틀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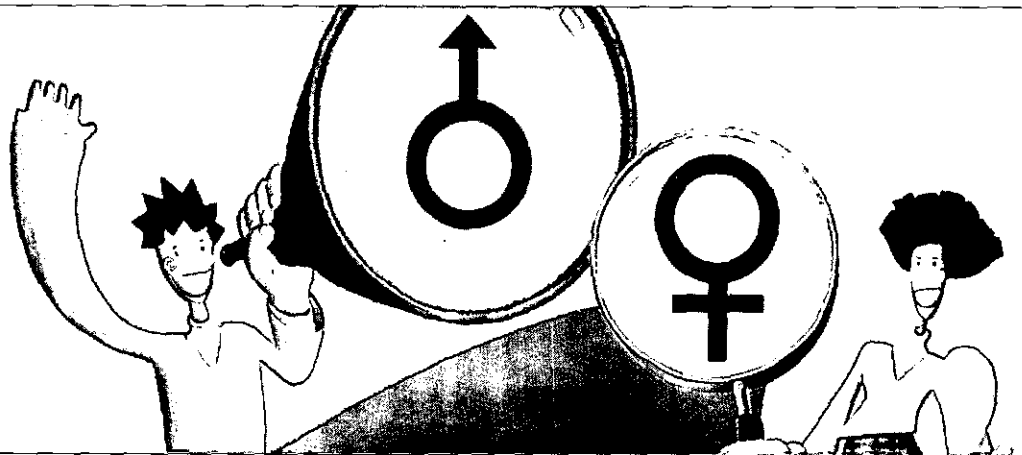
1. 왜 여성은 간호사로 생각하고, 남성은 의사라고만 생각하는가?
2. 성역할은 생물학적 원인인가, 사회적 원인인가?
3. 자신은 남성과 여성 어떤 성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가?
4. 자신과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성역할을 기대하는가?
5. 이런 활동을 통해 어떻게 나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 '사례 연구' 학습지도의 예

- 목표 : 성역할 고정관념의 특성에 대해 안다.
- 절차 : 다음 이야기를 나눠주고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게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탄 차가 사고가 났다.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심하게 다쳤다. 아버지는 그 지방 영안실로 가고 아들은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곧 수술하게 되었다. 외과의사는 환자를 보고 놀라 소리쳤다. "세상에, 내 아들 이구나!" 이게 어찌 된 영문인가? 외과의사는 아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교통사고로 죽은 아버지는 절대 로 아이의 의붓아버지가 아니며, 또한 그 의사도 아들의 의붓아버지가 아니다.

- 결과 : 보통 학습자들은 의사가 아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음을 잘 알아채지 못한다. 위에 제시된 분석틀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다.



2) 이야기 완성하기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 뒷 부분을 남겨놓고 이야기를 완성하게 해 본다. 이 때 중요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중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여 년 동안 사귀어 온 친구 사이인데 남자 친구의 성관계 요구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준다. 단 남자 친구가 "이번에 거절당하면 더 이상 너를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대목에서 이야기를 중단시킨다. 잘 알려진 이야기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후속 편을 꾸며보게 한다.

< 관련질문 >

- ①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여자 친구의 반응 완성하기
- ② 이들은 앞으로 무엇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③ 나(남자면 이야기 속의 남자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여자라면 이야기 속의 여자 주인공이라 생각해서)라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3) 역할극

역할극은 상황을 제시하거나 대본을 주고 극 중의 한 가지 역할을 해보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상상하기는 쉽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보는 것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미와 결과를 음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역할극은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학습자라면 특히 기상의 상황에서 행동을 실습해 봄으로써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할극 하기에 좋은 주제〉

- 귀가시간 : 부모 입장 대 자식 입장
- 조기 성적접촉 :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이 문제로다.
- 결혼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 부모와 성적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유의 사항〉

- (1) 배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상황이 정의되어야 한다.
- (2) 역할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한다.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공감을 개발해야 하는 학생이 있으면 특정한 배역을 줄 수도 있다.
- (3) 15분 이하로 역할극을 하고, 역할극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토론이나 평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역할극은 학생들에게 많은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토론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서로 다른 입장에서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다른 입장에 대해 말하게 하고 교사에게 질문하기 보다는 학습자끼리 서로 토론을 하도록 하고 토론이 끝난 후에는 제시되었던 관점들을 요약 정리해야 한다.

▶▶ '역할극' 학습지도의 예

- 목표 : 생식 기관의 기능 이해하기

- 절차 : 학생을 두 모둠으로 나눈다. 모둠 A는 남자 생식 기관이 되고, 모둠 B는 여자 생식 기관이 된다.

* 촌극으로 배우들은 남성 기관 역할을 하는 데 모둠 A에 필요한 배역은 다음과 같다.

음낭, 음경포피, 고환, 카우퍼선, 전립선, 요도, 음경, 사정관, 전립선, 정자, 분비물, 카우퍼선 분비물, 상피, 정액소포, 팽대부

* 촌극으로 배우들은 여성 기관 역할을 하는 데 모둠 B에 필요한 배역은 다음과 같다.

질, 대음순, 난관, 자궁, 질액, 난자, 자궁경부, 음핵, 소음순

- 결과 : 대체로 역할극은 성에 관한 가치, 태도를 습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나 생식기관에 대한 지식의 지도에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재미없는 해부학적, 생리학적인 여성과 남성의 생식 기관에 대한 내용을 보다 흥미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내용을 예로 들어 보았다.

4) 버즈 그룹(모둠 학습)

모둠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버즈 그룹은 보통 네 명에서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 어떤 하나의 대답을 찾기보다는 몇 가지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이 때 각 모둠은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을 기록자로 지명한다. 기록자는 모둠 구성원들이 논의한 내용이나 결론 등을 기록해야 한다.

〈 버즈 그룹에 적당한 주제 〉

- “책임있는 성적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남성과 여성은 성적 욕구가 어떠한 점에서 서로 비슷한가, 다른가?
- 나는 성(sexuality)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 사랑이란 무엇인가?

▶▶ '버즈 그룹' 학습지도의 예

- 목표 : 여성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기
- 절차 : 학생들을 8명씩 몇 집단으로 나누고 가족이 무언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게 한다. 모둠장이 각 그림을 모아서 맘대로 섞고 임의적으로 각 구성원들에게 그 그림을 나눠준다. 각 구성원들은 받은 그림을 잘 살피고 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그림의 가족이나 가족 역동의 흥미로운 어떤 점을 확인하고 그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통찰을 그림 뒤에 적는다. 학생들은 모든 구성원이 그림 뒷면에 코멘트를 적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코멘트를 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 결과 : 그림 뒷면에 코멘트를 다 적으면, 다시 처음에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찾아서 돌려 준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 1) 그림 뒤 설명 중 어떤 코멘트가 네 가족, 어떤 가족 구성원, 네 가족의 역동이나 상호작용 과 관계가 있는가?
- 2) 네 가족의 삶(life)을 통해 네가 무엇을 배웠는가?
- 3) 어떻게 너는 네 가족의 삶을 도울 수 있는가?

5) 게임하기

게임은 학습자에게 재미를 제공하는 학습 경험이다. 규칙과 규제 속에서 목표를 향하여 서로 경쟁하게 한다. 교육적인 게임에서 때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 다른 집단과 경쟁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때도 있다. 게임은 재미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도 얻을 수 없는 학습자의 참여와 관심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게임 방법을 이용해 수업을 하는 경우, 교사는 스스로 게임을 개발할 수도 있고 친근한 게임의 원리를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데 참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칠판에 축구 구장을 그려놓고 5, 10, 15 센티 미터마다 질문이 있는 카드를 놓고 질문에 정답을 맞추면 골문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게 한다. 질문의 답이 틀리면 그 숫자만큼 뒤로 물러야 한다. 또는 벌점이 나 부가 점수를 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이 게임하기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중요한 점은 게임을 하는 목적이 재미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성교육 게임이라도 학습자가 달성할 수 있는 교육적 목적을 확실하게 정의하고 수업에 임해야 한다.

6) 빈의자에 앉기 (Fishbow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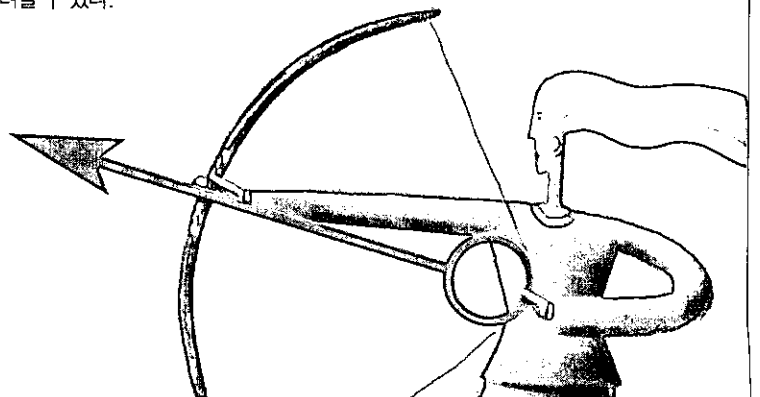
집단 하나를 만들어 참여한 사안을 주제로 토론하게 하고 이 토론을 지켜보는 학생 집단을 관객으로 만든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 관객은 빈의자(공감의자)에 앉아서 끼어들 수 있다. 공감 의자는 모든 관객에게 열려져 있다. 게임 방식이라 토론에 재미를 더해 준다.

빈의자에 앉기 방법은 다음 목적에 유용하다.

- (1) 조용한 학생을 토론하는 집단 내에 위치시켜 더 말을 많이 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 (2) 말 많은 학습자를 관객 입장에 위치시켜 놓을 수 있다.
- (3) 내집단과 외집단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빈의자에 앉기 방법에서 논의하기에 적절한 주제 >

- 낙태는 살인인가?
- 학령기 전의 아동을 가진 어머니가 직장을 가져야 하는가?
- 우리는 어떤 성교육 주제를 공부해야 하는가?
- 외설이나 포르노란 무엇인가?



▶▶ '빈의자에 앉기' 학습지도의 예

- 목표 : 혼전 성관계 의미에 대해서 안다
- 절차 : 학생들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20점 척도로 점수 매긴다(매우 반대하면 -10, 매우 찬성하면 +10). 학생들이 매긴 점수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전지에 크게 써놓는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네 명이 나와서 혼전 성관계와 관련한 장단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다. 두 명은 Plus에 체크한 사람이고, 다른 두 명은 Minus에 체크한 사람을 뽑는다. 이 네 명은 동그렇게 앉고 그 안에 빈 의자를 하나 둔다. 나머지 학생들은 그 네 명이 만든 원 밖에 동그렇게 앉아서 바깥 원을 만든다.
토론을 하는 중에 바깥 원에 있는 학생이 안쪽 원에서 토론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할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빈 의자에 앉아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네 명의 토론자가 승인할 때까지 기다린다. 일단 승인되면, 그 의자에 앉아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다시 바깥 원으로 돌아온다. 안쪽 원에 있는 토론자들은 그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고 거기에 반응을 할 수도 있다.
- 결과 : 안쪽 원의 토론자들이 서로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토론은 아마도 생동감 있게 펼쳐질 것이다. 토론이 끝날 때 짚어는 모든 학생들은 혼전 성관계의 장점 5개, 단점 5개를 찾아서 정리한다.

7) 문장 완성하기

버즈 그룹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법이 문장 완성하기이다.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한 문장을 완성해서 버즈 그룹에서 이 문장을 토론할 준비를 한다. 불완전한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내 신체는
- 성(sex)은
- 내가 생각하기에 결혼은
- 자위행위는 하다(이다).
- 성적 책임이(은)
- 남자친구/여자친구는 보통 ...
- 성역할 고정관념은(이) 로써 나를 제약한다.
- 성적 충동은(이)

이 문장에 대한 답은 어느 것도 정답일 수 없다. 이 방법은 소그룹 토의에 훌륭한 동기를 부여한다.

8) 가치 명료화 (values clarification)

가치 명료화는 학습자로 하여금 그들의 가치를 확인해 보는 활동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점검해서 그것을 계속 소유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한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가치의 순위를 매겨보게 할 수도 있다. 간단한 예로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항목을 제공하고 가장 선호하는 것, 그 다음 선호하는 것, 좀 덜 선호하는 것 등의 순위를 매겨 보게 한다.

- 예) (1) 결혼해서 부모가 되는 것.
(2) 미혼부모가 되는 것.
(3) 부모가 안되는 것.

이 때 가치를 명료화하고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 순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순위를 매겼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가치 명료화 방법은 학습자에게 어떤 특별한 가치를 주입하도록 구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학습자가 기존의 가치들을 명료화하고 더 나은 가치와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가치 명료화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가치 명료화' 학습지도의 예

- 목적 : 가장 가치롭다고 여기는 성역할을 결정하기
- ▶ 절차 : 다음의 예처럼 한 사람에게 여섯 가지의 성역할을 준다. 카드에 적어 옷에 꽂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카드를 읽는다.

남자친구, 남편, 애인, 페미니스트, 약탈자, 여자친구, 부인, 딸, 괴롭히는 사람, 남성 우월주의자, 처녀, 쾌락주의자, 남자다운 남자, 귀여운 여자, 아들, 손자

10분 동안 돌아다니게 하고, 20분 동안 카드를 교환한다. 교환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 1)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역할들을 주고
 - 2)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역할들을 받는다.
 - 3) 최소한 두 개 이상은 교환되어야 한다.
- 결과 : 이 활동이 끝난 후에 다음 질문들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다.
 - 1) 왜 나는 그 역할을 버렸는가?
 - 2) 왜 나는 그 역할을 받았는가?
 - 3) 네가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가?
 - 4) 네가 버리기를 원했거나 받기를 원한 역할들을 실제 네 삶에서는 가졌는가?
 - 5) 네가 현재 갖고 있지는 않지만 원하는 역할이 있는가?
 - 6) 이 활동에서 얻은 결과를 통해 어떻게 네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상에서 제시한 방법 외에도 성교육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즉, 유용한 아이디어나 해결해할 문제 거리가 있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브레인 스토밍 방법과 논쟁하기 적당한 주제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debate)방법, 모의 재판식 방법, 시사 토론 방법 및 거부·장 훈련 방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이용한 성교육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성교육의 효과를 기하는데 도움이 있을 것이다. **교육**



교육관련 세계의 연구

글 / 김정자 (한국교육개발원 전산정보팀장, kza@ns.vedi.re.kr)

Charter school의 교사 인사정책

미국 7개주(Arizona, California, Colorado, Florida, Massachusetts, Michigan, Texas)에 있는 Charter school을 대상으로 하여 교사 인사정책을 비교·분석한 연구를 소개한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charter school의 교사 인사정책을 혁신적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 연구결과 |

- charter school은 공립학교에 비해서 학급규모가 작고, 정규직 교사 비율이 낮았다
- charter school의 교사들은 대부분 교사 경력이 짧고, 사립학교와 같이 교사 이동률이 높았으며, 주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교사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채용되고 있었다.
- 교사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는 charter school은 거의 없었으며, 교사들은 일년 단위의 계약제나 교사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하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교원 노조에도 거의 가입하고 있지 않았다.
- charter school의 교사들은 공립학교에 비해서 일별 근무시간과 연 근무일수가 많았다.

- 교육성도가 낮은 교사의 해고가 흔한 일였고, 30%의 학교가 수학·과학과 같은 어려운 교과 담당 교사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 46%의 학교가 성과급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그 범위는 5%에서 10%였다.
- 지방학교구와 계약한 charter school보다 연방교육위원회와 고등교육기관과 계약한 charter school의 인사정책이 더 혁신적이었다.

| 연구과제명 | Personnel Policy in Charter School

| 연구자 | Michael Podgursky, Dale Ballou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연구기관 | Thomas B. Fordham Foundation

| 연구데이터 | 미국 7개주에 있는 132개 Charter School을 연구 대상으로 함

| 연구발표시기 | 2001. 9.

| 출처 | www.edexcellence.net

학교시설의 공유와 작은 학교

작은 학교 및 학교 시설의 지역사회와의 공유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를 보여 주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작은학교 및 학교시설의 공유와 관련된 그간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미국 12개주 22개 학교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안전하고, 건전하며, 보다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연구결과 |

- 작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졸업률이 높고, 학생들의 비행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작은 학교가 안전하고, 건전하며 만족스러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서비스센터 등 다른 기관과 학교 시설을 공유했을 때 학생들은 보다 폭 넓은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졸업률이 높아졌으며, 국가 기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과제명 | Smaller, Safer, Saner, Successful Schools

| 연구자 | Joe Nathan, Karan Febey

| 연구기관 | Center for School Change, Hunphrey

Institute of University of
Minnesota

| 연구발표시기 | 2001. 9.

| 출처 | National Clearinghouse for
Educational Facilities

방과후 프로그램

미국초등학교교장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lementary School Principals)에서는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 연구결과 |

- 방과후 프로그램의 재원은 48%가 연방정부, 주정부 등 정부기관이며, 33%가 학부모 부담이고, 10%가 기부금 모금활동을 통해서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 의존하고 있다
- 67%의 학교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그 내용도 67%가 가정학습 과제를 돕는 등, 학교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학력이 낮은 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 향상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밖에 오락성 스포츠, 기술수업 등이 제공되고, 점차 리더십 개발, 그룹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초점이 주어지는 추세에 있다.
- 방과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장들이 지적한 문제들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유능한 프로그램 담당 교사의 확보 등이다.

| 연구과제명 | Principals and After-School Programs: A Survey of PreK-8 Principals

| 연구기관 | Belden Russonelo & Stewart

| 연구후원 | National Association of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 연구방법 |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의 공립학교 교장 8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 5월24일부터 6월18일까지 전화를 통해 실시한 조사연구임

| 연구발표시기 | 2001. 8.

| 출처 | www.naesp.org

고등학교 등교시간의 변경

미국 Minneapolis 학교구에서는 1997년 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아침 7시에서 8시 40분으로 늦추고 하교시간도 오후 1시 45분에서 3시 20분으로 늦추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의 변화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행사했는지를 분석한 연구를 소개한다.

| 연구결과 |

-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수업에 충실하기 위한 평균적인 수면시간을 8시간30분에서 9시간14분이라고 했을 때, 수업시간 변경전의 학생들의 수면시간은 평균 이하였던 것으로 밝혀 졌고, 변경후에는 일주일에 평균 5시간 더 수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등교시간 변경이 학생들에게 안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학생들의 출석률이 향상되었고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향상률이 높아 졌으며, 학교간 또는 학교구간의 학생들의 학교 이동률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학교 이동이 심했던 것은 지각으로 인한 수업 불참 기록을 학생기록부에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 이유였던 것으로 연구자는 분석하고 있다.

| 연구과제명 | School Start Time

| 연구자 | Kyla L. Wahlstrom, Mark L. Davison

| 연구기관 | CAREI (Center for Applied Research and Educational Improvement-University of Minnesota)

| 연구데이터 |

이 연구는 Minneapolis의 7개 고등학교 학생 50,962명을 대상으로 하여, 1995년과 1996년의 2년간의 데이터와 1997년에서 1999년까지의 3년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 연구발표시기 | 2001. 8.

| 출처 |

www.education.umn.edu/carei/Programs/start_time/ 교육



신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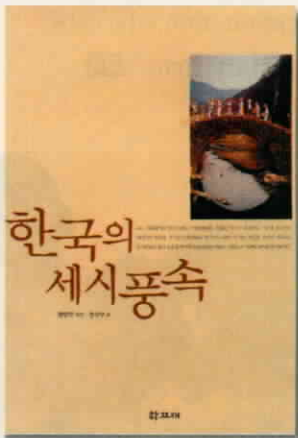
건륭황제 1·2·3

二月河 지음 / 한미화 옮김 / 출판시대

중국 작가 이월하(二月河)의 『건륭황제』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적당히 가미해 가며 당시 시대상을 풍부하게 재현해낸 책이다. 중국 봉건왕조 마지막 백년의 눈물겨운 비가(悲歌)인 『건륭황제』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시대의 봉건성세(封建盛世)의 성황(盛況)을 보여준다. 그야말로 방대한 지식 체계를 자랑하는 이월하는 오랜 세월의 역사적인 고증과 연구를 거듭한 끝에 특유의 상상력과 추리력을 동원하여 혼신의 노력을 거쳐 봉건사회의 백과전서격인 『건륭황제』를 완성했다. 나라의 일인자인 천자로부터 왕공귀족들 그리고 사농공상 및 평범한 민초들의 삶의 풍속도를 생동하게 재현해냄으로써 역사소설의 귀재로서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건륭황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봉건사회가 흥망성쇠의 길을 걷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봉건제도의 암흑상을 극명하게 조명해 주었다. 작가는 장장 2천년의 세월을 지속해온 중국 봉건사회가 본격적으로 피폐해가는 마지막 백년의 모습을 서산에 넘어가기 직전의 붉게 물든 석양의 현란함에 비유했다. 그런 이유에서 볼 때 소설 『건륭황제』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엔 거대한 역사의 물결에 밀려 역사의 피안으로 사라지고야만 중국 봉건사회의 마지막 백년의 눈물겨운 비가(悲歌)이고 장엄한 대서사시라고 하기에 손색없다.

한국의 세시풍속

황현만 사진 / 정승모 지음 / 학고재



『한국의 세시풍속』은 전통 문화를 고집스럽게 사진에 담은 문화 지킴이 황현만의 세시풍속(歲時風俗 : 달마다, 혹은 계절마다 관습적으로 되풀이되는 민속)기록이라 할 수 있다. 30여 년 동안 전국을 누빈 결과물인 그의 사진기록은, 농촌공동체적 삶이 파괴되고 대부분의 한국인이 자본주의적인 생산체계 속에 편입되어 있는 요즘, 현재 우리 민족이 지키고 있는 세시풍속과 사라질 위기에 있는 세시풍속의 현장을 찾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잊혀져 가는 풍속을 찾고 보존하는 역할과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발판을 마련해준 기록이다. 이 책은 우리 세시풍속을 월별로 정리하고, 절기와 농사, 놀이의 의미를 밝힌다. 추석과 설날 풍속은 물론, 소라살 장승제, 기지시 줄다리기, 온산 별신제, 청도 소싸움, 강릉 단오제, 밀양 백중놀이, 태백산 천체 등을 컬러 사진과 함께 만날 수 있다. 정월부터 동지선달까지 1년 열두달 절기에 맞춰 씨뿌리고, 김매고, 거뒀들이는 삶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세시풍속에는 민족의 삶과 정서가 담겨있다. 문화 지킴이 황현만이 사진을 찍고, 민속학자 정승모가 해설한 『한국의 세시풍속』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어린 세대들에게 우리 문화의 정수를 일깨워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생명의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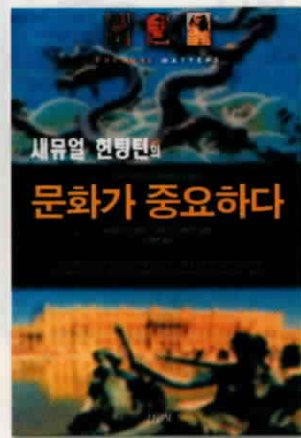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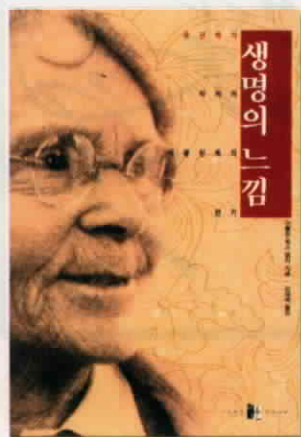
이블린 폭스 켈러 지음 / 김재희 옮김 / 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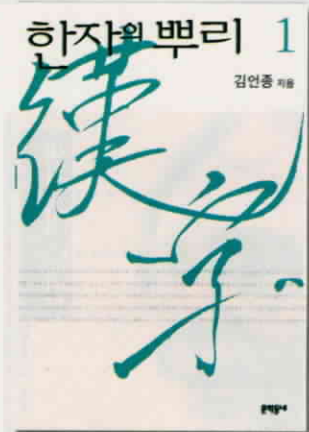
『생명의 느낌』은 198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비버라 매클린톡 여사의 일대기를 기록한 평전이다. 매클린톡은 황무지와도 같았던 초기 유전학 분야의 이론을 정립하며 젊은 나이에 독보적 위치로 떠오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는 자신의 독창적 이론으로 인해 유전학계의 아웃사이더로 철저히 떠밀리고 만다. 특히 그녀가 유전자의 자리바꿈 현상을 발견했을 당시 생물학계의 그 누구도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사실, 유전자가 핵산이라는 사실조차 발견되지 않은 시대에 매클린톡이 제시한 유전자이론은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었다. 그래서 30년의 세월이 흐를 때까지 그녀의 성과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바이러스, 미생물, 초파리, 고등동물 등에서 자리바꿈 유전자가 발견되면서 그 기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때야 비로소 매클린톡은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이 책의 초점은 수많은 남성학자가 유전학의 미로에서 허우적댈 때 한 세기를 앞서 진실에 접근했던 매클린톡의 업적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종종 약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과학계의 주류와 이단의 싸움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과학의 방법론에 매몰돼 생명의 본질을 간과해버린 과학자들에 비해 매클린톡은 생명이 내뿜는 경이로움의 핵심으로 공장 달려들어 의문을 파헤치는 연구를 해왔다고 지적한다.

문화가 중요하다.

사무엘 헌팅턴 · 로렌스 해리스 공편 / 이종인 옮김 / 김영사

『문화가 중요하다』는 가난한 자들과 부자, 자유로운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구분이 커가는 21세기 세계의 현상에 대한 세계의 석학들과 저널리스트들의 고민의 결과로 만들어진 책이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 국제·지역 연구학회의 후원으로 열린 '문화적 가치와 인류발전'이라는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된 글들을 모아 만들었다. 문화적 요소는 어느 정도까지 경제적·정치적 발전에 기여하는가? 만약 기여한다면 경제적·정치적 발전을 가로막는 문화적 장애요인들을 어떻게 제거 혹은 바꿀 수 있는가? 이 책에서는 자유, 번영, 정의를 창출하는 데 우월한 문화는 따로 있는가, 즉 문화에 대한 가치판단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공동편집인인 해리스와 헌팅턴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많은 학자, 기자, 정치가, 실천가들이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으로 문화기반이라고 결론지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사상적 후예들이기 때문이다. 막스베버는 자본주의의 발흥이 본질적으로 종교에 바탕을 둔 문화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에드워드 밴필드는 남부이탈리아에 횡행하는 가난과 권위주의의 원인은 문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연구와 문화의 강조는 이제 보편적인 하나의 흐름인 것이다. 물론 발전이 경제적 부의 축적만을 의미하는지, 그렇다면 원시 사회가 현대 사회보다 불행했는지의 문제는 불분명하다. 로버트 에저튼 등의 인류학자들은 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과학적인 기준은 전혀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자의 뿌리 1·2

김연중 지음 / 문학동네

『한자의 뿌리』는 오늘의 관점에서 한자와 한자 문화를 돌이키고 배양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 324개(1,298자)를 골라 글자의 뿌리와 형성과정, 원래의 뜻과 현재 널리 쓰이는 뜻, 그리고 용례의 근원을 밝혀 두 권 짜리 두꺼운 책으로 제법 무거워 보이지만 초보자와 전문가를 두루 만족시킬 수 있도록 꾸며진 책이다. 한문은 예나 지금이나 외국어 문장이지만, 우리가 일상 언어생활에서 쓰고 있는 한자 단어는 우리 민족이 우리 문법과 어법에 끌어들이고, 우리 민족의 생리와 사고방식에 맞춰 천년 이상이나 같고 뒹으며 활용해온 어엿한 '국어'이고 한자는 우리 예겐 없었던 새로운 관념과 사물과 현상을 알게 해,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 문화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었다. 그 결과, 우리 국어의 현실 어휘의 70%를 넘나드는 분량이 한자 낱말로 채워져 있다. 이 책은 중국 남방에서 만이들을 잡아먹던 기슭에서 탄생한 단어 맹(孟)자는 만이들(子)을 그릇(皿)에 담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등 괴이한 내력을 지닌 한자어도 소개한다. 또 가계, 단지, 김치, 고추, 피리, 곤두박질 등 순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한자어인 낱말을 밝힌 부분도 재미있다. 갑골과 금문, 소전 등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변화해온 한자 자형의 변천과정도 밝혀 격조를 높였다.

성난 카우보이

하워드 F. 리먼 지음 / 김이숙 옮김 / 문예출판사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는 축산업자였다가 채식주의자가 된 『성난 카우보이』의 저자 하워드 리먼은 일찍이 1996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여 소가 소를 먹고 있는 현실, 즉 인간이 소비하고 남은 소의 찌꺼기들을 사료로 가공해 소에게 먹고 있는 축우 산업계의 실상을 폭로하며 '광우병'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다. 육류 산업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진 그의 발언은 축산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그는 '음식물 경멸법'이라는 모한 법에 의해 고발당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국제채식주의자연합과 지구구조대의 회장이자 저술가인 하워드 리먼은 자신이 채식주의자가된 이유와 채식의 이점, 육식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축우 산업이 우리 지구를 어떻게 절망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밝히기 위해 『성난 카우보이』를 집필했다. 이 책은 육식을 즐기며, 스스로 고기를 생산해내던 축산업자가 자신과 이 지구의 건강을 위해 채식주의자가 되기까지의 체험담으로, 철저하게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리먼은 환경 대항에 빠져들고 있는 인류에게 쇠고기 자체의 문제점, 육식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문제점, 축우 산업이 지구의 환경에 미치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채식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국근대미술 비평사

최열 지음 / 열화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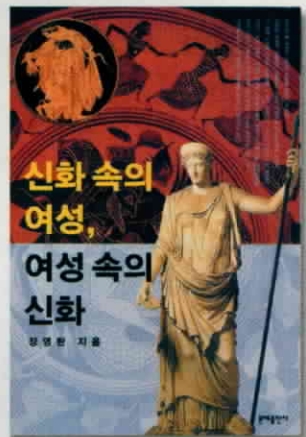
『한국근대미술 비평사』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창작과 화단활동의 중심에서 활약했던 근대 미술비평가들의 비평과 이론, 삶과 현장을 깊이있게 조명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19세기 후반의 미술비평', '20세기 전반의 미술비평', '20세기 전반 주요 이론가들의 미술비평'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19세기 후반의 미술비평에서는, 화단의 비평사를 이끌어 나갔던 옥계사, 벽오사, 서원시사, 직하시사 등의 예술가 조직과 김정희, 신위, 조희룡, 나기, 심석준 등으로 이어지는 19세기 미술비평가들의 미술사학과 사상을 살펴 그 흐름을 정리했고, 20세기로 넘어와서는 20세기 전반 서구미술이론의 유입과 함께 고유성과 이식성이 대립되는 과정, 조선 미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비평가들이 펼친 '조선미술론'의 형성과 성장과정, 프롤레타리아 미술론 대 심미주의 미술론이 대립과 치열한 논쟁을 거듭하는 과정 등의 비평사 흐름을 시기별·특징별로 서술했다. 김복진, 김용준, 윤희순 등 20세기 전반의 화단 비평을 주도한 주요 인물들의 미술비평과 이론을 체계적이고 깊이있게 조명했는데, 창작과 화단활동의 중심에서 활약했던 근대미술비평가들의 삶과 현장까지를 89컷의 자료도판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단지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사상을 구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미술사상과 삶의 현장을 곁에서 보듯 생생하게 헤아릴 수 있도록 했다.



신화 속의 여성, 여성 속의 신화

장영란 지음 / 문예출판사

신화는 인류의 보편적 사유와 행동 양식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개별적인 사회 제도와 관습을 열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신화를 읽고 그것을 통해 한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 사유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스 신화 역시 걸로 보여지는 현란한 이야기를 들춰보면 숨어 있던 이데올로기들의 충돌과 통제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신화 속의 여성, 여성 속의 신화』는 그리스 신화와 비극 및 철학을 중심으로 여신과 여성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전복시켰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 비극 작품들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를 여성의 시각에서 조명하는 데 주력했다. 이 책은 그리스 신화와 비극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전승들을 통해 재해석하여 그리스 여신과 여성의 전혀 다른 면모를 재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씌어졌다. 또한 그것은 우리 시대 여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독자의 소리



1 최승희 (서울 송파구)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입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느끼지만 이번 호 교육개발 역시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알찬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더군요. 지하철에서도 가지고 다니며 간편하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아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좋았던 내용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나라같이 특별한 산업자원이 없는 나라에선 국가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내용을 담아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우연히 뉴스를 보았는데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준하여 우리 나라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외국의 기자의 조사에 따르면, 일제치하과정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겨우 몇 줄로만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일본에게 올바른 역사의 서술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경험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교과서를 통하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교육개발이 한번 다루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 호에도 좋은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임태완 (대구 북구)

지난호 소개된 외국학교와 우리학교의 성교육 시리즈물을 읽고, 우리도 이제는 잘못된 교육의 방법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보화의 발달과 문화의 개방으로 인해 이제는 예전의 보수적인 성관념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절제하도록 강요하는 건 다소 무리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실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겪을 수도 있는 임신·생리·피임 등 실제 사례에 입각한 교육을 중심으로 사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방법에 관한 성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간혹 TV에서 외국의 성교육 장면을 보면 콘돔이나 페미돔 같은 도구가 거리낌없이 등장하고, 학생이나 학부모 또한 그런 풍경에 익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미혼모의 낙태나 영아 유괴 같은 불

미스러운 일을 접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베이비 수출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선 좀더 실용적이고 적극적인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3 강명귀 (서울 노원구)

언제나 『교육개발』을 통해 세계 각국의 교육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 교육환경과 매우 흡사한 일본의 아동살상사건과 열린교육에 대한 글을 읽고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학교 안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의 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바람은 일으킬 거라 예상했던 열린교육의 실상에 대해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소식과 함께 우리 나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도 더 많이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이론서에 담아있는 내용이 아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리얼 스토리'가 아닐까 하는데요.

KEDI의 창립 29주년을 축하드리며 늘 지금까지처럼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4 이미나 (충북 청원군)

『교육개발』 잘 읽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호 한명숙 장관님 인터뷰는 여러 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좋았습니다. 인적자원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는데, 이번 특집을 통해서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세계의 교육 중 미국의 탁아시설에 대해서 읽으면서 우리 나라도 일하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그런 시설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 김지선 (서울 동대문구)

최근의 연구동향이나 교육현장 이야기 등을 소개해주시면 안될까요? 『교육개발』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읽을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교육현장의 이야기나 교육현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한 두글 정도는 소개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차 국제컴퓨터교육학술대회 개최안내

ICCE/SchoolNet 200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s in Education/SchoolNet 2001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수 학습의 질 향상

제9차 국제컴퓨터교육학회(ICCE)와 제4회 스쿨넷(Schoolnet 2001) 학술 발표 대회(대회장 : 장영달 국회의원, 공동의장: 김종량 총장, 운영위원장: 김영기 교수)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질 향상'이란 주제로 29개국 350여명의 교육정보 전문가들이 새로운 방향의 정보교육을 위하여 11월 12일(월)부터 11월 15일(목)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립니다.

또한 교사들을 위한 ICT 연수자리 뿐만 아니라 한국교육공학회, 한국교육정보방송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등의 논문 발표도 있을 예정이며, 안호교사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정보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컴퓨터교육 학술발표대회는 교육정보화와 관련 있는 12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또한 IT 관련 업체들의 신기술 동향 등도 소개되므로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보교육에 관심 있는 교수,
 일선 교사 및 IT 관련 업체 임직원 및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참가안내

ICCE 2001	사전등록		현장등록	
	AACE회원	비회원	AACE회원	비회원
일반	250,000원	300,000원	300,000원	350,000원
교수	150,000원	200,000원	200,000원	250,000원
대학원생	100,000원	150,000원	150,000원	200,000원

School net 회원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반	70,000원	90,000원
교수	50,000원	70,000원
학생	30,000원	50,000원

● 등록비 포함사항: 발표장(SchoolNet) 입장, 논문집 & CD(SchoolNet), 휴식시 다과

- 등록비 포함사항: 발표장(ICCE/SchoolNet)입장, 논문집 & CD, 환영연회/오찬/만찬 입장, 휴식시 다과
- 대학원생 등록비에는 환영연/오찬/만찬 쿠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쿠폰은 당일 개별구매 할 수 있습니다.

www.icce2001.org
www.schoolnet.or.kr

일 시 : 2001년 11월 12일(월)~15일(목)
 장 소 : COEX Conference Center
 주 최 : 교육정보화 관련 12개 학회/전자신문
 주 관 : ICCE/SchoolNet2001 운영위원회
 후 원 : 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교육정보화신문

한국교육개발원은 2000년도 연구보고서를
CD-Title로 제작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 이제 CD-Title로 만나세요.

연구보고서! 이제 CD-Title로 만나보세요

2000년 연구보고서 시리즈

연구보고서(I) - 기본연구과제

평생교육의 혁신적 접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 연구
21세기 교육복지 발전 방안 연구
고등교육 학생수 분석연구
교원직급 및 자격채제 개편 연구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분석
한국 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
학교경영 환경의 변화와 학교장의 리더십 연구
초·중학생의 지적 정서적 발달수준 분석연구
교육지정 규모 적정 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확보 방안 연구
평생학습지원체제 종합발전 방안 연구(1)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운영 방안
교육통계정보의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교육효과 분석 연구

연구보고서(II) - 정책방안제시연구

유아학교 보형개발 연구
창의적 지식생산자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정책 방안
제 2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급별 시설공간 요건 분석 연구
초·중등 사학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원 양성·연수기관 인종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영재교육담당 교원의 양성 및 인종방안 연구
영재교육 중점기 중합 발전 방안
교육분야 부패방지대책
평생교육기관 연계체제 유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 연구
경기도 고교 임시제도 개선연구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 체제 개혁 방안 연구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방안 연구
자율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초·중등학교 예산 총액배분 방안 연구
사내인정자격 등 경험학습의 평가인정 및 학점인정 방안 연구
사회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학교운영 방안 연구
- 학교주5일제 도입과 실행방안 -

연구보고서(III) - 기초 및 현장 조사·분석연구

과외 고습 실태 조사
2000학년도 신실 교육대학원 운영 실태 조사 보고서
과외 고습 실태 조사(II)
「교육발전종합방안」수립을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사업 보고서
교육대학교 운영 실태 분석
학교종합평가사업 종합보고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 현황 조사 연구
초·중등학생의 사이버상에서의 상호작용 양상 분석
유치원 모의평가를 통한 유아교육평가모형 확립방안 연구
북한 교육관계 법령 분석 연구
OECD/INES 고등학교 국제조사 시행을 위한 기초 연구
학부제 운영성과에 관한 분석연구
초·중등학교 표준 교육비 산출연구

연구보고서(IV) -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부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초등학교 기초 기본 학습 부진학생 판별도구 개발 연구
중학교 기초 기본 학습 부진학생 판별도구 개발연구
고등학교 기초 기본 학습 부진학생 판별도구 개발 연구
영재교육과정 개발 연구(II)
영재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초·중·영재학교/영재학급용-
성교육 지도지침 및 자료 개발 연구(중학생용)
중요무형문화재 관련분야 제2차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
퇴직예정자 재취업 및 고령자 직업재조정교육 프로그램개발연구
2000 국제교육백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컴퓨터 통신학습 시스템 개발 연구
OECD 국제 교육 지표개발 - 교육과임금
교육기본통계조사 사업 보고서
교육통계정보DB활용 업그레이드 및 전산기기 유지관리 사업
교육통계정보DB활용 웹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사업

KEDI Research



교육개발원 2000년 10월 12일호 공-연구2000-10월 25일 발행 (국립) 한국교육개발원 2000년 10월 25일 발행

CD 구입문의 : 한국교육개발원 전산정보팀
TEL : 02-3460-0407, 0411 (book@ns.kedi.re.kr)

4개 1세트 100,000원 (날개 구입시 각 30,000원)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